

# 국어책임관 제도의 활성화 및 한국어진흥재단 설립방안

2007. 11

연구책임 :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 광 석

국립국어원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국립국어원이 의뢰한 『국어책임관 제도의  
활성화 및 한국어진흥재단 설립방안』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 12

연구책임 :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 광 석

# 목 차

요약-----	
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내용 및 범위-----	
4. 연구방법-----	
II. 이론적 논의-----	
1. 국어정책의 의의-----	
2. 국어책임관 논의의 기초-----	
3. 언어현상에서의 국가의 역할-----	
4. 역사적 변천에 따른 언어정책-----	
5. 임계선을 넘은 언어공동체 언어의 내재화-----	
III. 국어책임관 제도-----	
1. 언어공동체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	
2. 국어책임관제도-----	
3. 문제점-----	
IV. 한국어진흥재단 설립방안-----	
1. 한국어 보급 향상을 위한 한국어진흥재단의 필요성	
2. 한국어진흥재단 설립 방식	
3. 한국어진흥재단 설립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4. 한국어진흥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	
V.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 표 목 차

<표 1>-----	5
<표 2>-----	11
<표 3> -----	12
<표 4>-----	16
<표 5>-----	19
<표 6>-----	26
<표 7>-----	27
<표 8>-----	28
<표 9>-----	29
<표 10>-----	31
<표 11>-----	32

# 연구 요약문

## I. 연구의 기초

###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국어책임관 제도를 정착시키고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시킬 수 있는 기준과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국어책임관 제도가 국어기본법의 제정으로 도입이 되었으나 2년이 경과한 현재 제도 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됨.
  - 중앙 부처의 국어책임관은 자신의 고유한 업무수행에 전념하고 겸직인 국어책임관은 관심을 둘 수가 없는 구조임.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자신이 국어책임관임을 알지도 못함.
  - 중앙과 지방의 국어책임관 모두 전문지식의 부족과 열정의 부족으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함: 유명무실한 제도로 될 위험성.
  - 또한 국어책임관 제도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업무 인수인계의 문제, 형식적인 임면, 국어책임관이 바뀌어도 보고도 없는 관리체계 등.
- 국어기본법 제정 당시의 관점을 뛰어넘는 환경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외국 이주민의 증가에 따른 한국어 교육 환경 변화 등.
  - 또한 이들 자녀의 교육에서 현행 교육법은 적절하지 않음.
- 따라서 국어책임관임 제도는 법령 개정을 통해서 전문화·구체화하고 기능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 아래 이를 위한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함.

### 2. 연구의 필요성

- 국가와 언어공동체와의 관계는?
  - 2분법 아래에서의 국가 (국어책임관 제도)의 역할.
- 역사적 변천에 따른 언어정책.
  - 현 시점에서는 국민국가: 불가역성의 원리.
- 하나되기 언어관의 위기.
  - 현 시점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문제점.
- 임계선과 복원력.

- 어디까지가 한국어이고 한글인가?
- 국어책임관 제도의 많은 문제점: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
  -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음.
  - (1) 전문지식의 문제점,
  - (2) 행정의 문제점,
    - ① 관리의 문제점으로
      - 인사이동, 조직개편, 임무 위임 등으로 국어책임관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짐.
    - ② 의욕의 문제점으로 당사자는 의욕도 없는데 임명이 되어 오히려 불편을 하소연하는 실정임.
  - (3) 겸직의 문제점으로 주된 업무에 치중하다 보면 국어책임관의 업무는 뒷전이 되어서 그 일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음.
- 국어책임관 제도의 의의는 언어의 개입주의를 의미.
  - 국어책임관 제도를 통한 언어정책에 정부의 간여.

### 3. 연구내용 및 범위

- 국어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
  - 국어정책이란 국어를 재료로 하여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것
  - 국어정책에 관한 이론적 원칙
- 세계 여러 나라의 국어정책
  - 주요 국가들 비교 및 비교에 의한 시사점 도출
- 개입을 위한 기구
  - 완전방임형
    - 많지 않으므로 고려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음
  - 소극적 개입형: 교육과 연계
    - (1) 미국의 정책 변화
      - : 영어를 중심언어 (English Only Policy)로 방향 전환
    - (2) 영국의 언어정책
      - ① 민간 차원의 운동을 국가가 지원 (Partnership)
      - ② Plain English Campaign

- 적극적 개입형
  - (1) 스웨덴 형: 복지에 기초
  - (2) 중국형: 법과 제도에 기초
- 한국어정책에 국가 간여의 필요성
  - 적정 방안에 대한 탐구
- 국어정책에 국가 간여의 방법
  - 기준설정의 전제
  - 기구

#### 4.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국내의 국어책임관 관련 문헌
  - 언어정책 관련 외국 자료
- 현지조사연구
  - 영국의 언어 관련 사회운동을 현지에서 조사
  - 국가 표준과 사회표준의 비교
- 국어책임관에 대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

## II. 이론적 논의

### 1. 국어정책

- 국어정책: 논의가 적게 된 영역
  - 국어학이나 언어학에서도 연구가 적은 분야.
  - 행정학이나 정책학의 관점은 전혀 없음.
  - 이 글은 행정학이나 정책학의 관점에서 살펴봄.
- 전제 조건: 언어정책의 방향은 시대정신과 어울림의 필요성.
  - 시간적으로는 국민국가의 불가역성에 기초하고 세계화와 세방화를 고려하는 정책.
  - 공간적으로는 국가통일을 위한 언어의 동질성.
  - 언어공동체 형성, 유지, 발전을 위한 노력.

- 언어공동체에 있어서 언어의 의미
  - 언어는 세계를 내다보는 창 (인식의 수단).
  - 언어는 개개인의 삶과 민족의 역사에서 작용하는 힘.
- 정책적 방향
  - 질서있는 다원주의: 오늘날의 사회는 다원주의에 기초.
  - 정책의 일관성: 따라서 가능한 정책은 변경하지 않는 게 좋음.
  - 정책대상집단의 고려: 순응을 얻도록 노력.
  - 국가개입주의에 기초한 정책.

## 2. 국어책임관 논의의 기초: 국가와 언어공동체와의 관계

- 국가(정부)의 개념
  - 현대국가에 있어 국가역할과 공공정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특정한 영역 내의 합법적 폭력(legitimate violence)의 사용에 관한 독점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 ① 영역 (a territory) ② 지배를 위해 물리력의 사용가능성, 그리고 ③ 국민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회적 행동을 그 요소로 함.
  - 지배력을 사용하여 언어공동체의 언어를 규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위자는 국가임.
- 국가(정부)와 사회(언어공동체)의 이분법
 

언어현상에서 국가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우선해야 하는 일은, 과연 국가 (state) [또는 정부(government)]는 사회(언어공동체)의 활동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는 것임.

우선 국가가 사회 구성원의 동의에 따라 성립되었고 그 두 당사자 사이에는 묵시적 계약(implicit contract) 관계라는 전통적 이론을 따르면 언어공동체 (사회)가 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음.
-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세종조의 언어정책을 고려해 보면 국가의 역할이 지대함을 볼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회’라는 말은 ‘시장’이라는 말과 구별된다는 주장과 동일시하는 견해가 병존함. 여기서는 사회나 언어공동체, 시장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함.
-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은, 바로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언어공동체는 일정 수준까지는 (이른바 임계선) 자율적 복원력이 있으나 이 임계선을 넘어가면 의사소통의 장애나 정체성의 문제 또는 불안정한 사회언어체계의 생성과 같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즉, 자율 메카니즘이 효율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는 환경이나 사례가 있다는 점도 동시에 알고 있어야 함.

- 국가와 언어공동체와의 관계
  - 국가는 언어공동체를 존중
  -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의 전개에는 국가가 개입
- 사회적 합의가 국가로 하여금 개입 요구
  - 언어공동체의 언어가 국가 개입의 변수
  - 그 판단 기준을 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국가 언어정책의 담당 기구가 할 일임.
-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문제됨.

### 3. 언어현상에서 국가의 역할

#### 1) 역사적 변천에 따른 언어정책

- 로칸(S. Rokkan)의 이론
  - 국민국가 성립(Nation-building), 세계화, 그리고 세방화로 나눔.
- 국민국가의 성립
  - 국민국가 이전의 세계는 종교적 보편성과 언어의 다양성의 시기였음.
  - 국민국가의 성립은 국민형성에서 시작.
  -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언어임.
  -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이 역사적 사실의 의미는 국어는 우리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통일국가 형성의 자원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세계화의 충격
  - 세계화의 충격은 경제적 의미를 함축함.
  - 말의 역사성과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공통성에 대한 공격도 포함.
  - 인류구성원으로서의 영어공통성으로 전환을 요구함.
- 세방화(世邦化: glocalism)와 역세주의(interregionalism)
  - 유럽의 현상은 세계화와 함께 세방화로 나아가고 있음.

- 세방화의 추세는 공통 언어, 지역 언어, 또는 상대방 언어의 학습 필요성을 증대시킬 것임.
- 역세주의(interregionalism)의 경향 또한 지역 언어, 또는 상대방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임.
- 이는 영어 중심의 외국어 교육에 대한 반성과 자국어 교육의 방향을 의미함.
- 프랑스의 경우, 언어정책의 견지에서는 자국에서 국민국가의 흐름이 그대로 온존함.
  - 세계화나 세방화를 지향하는 서구에도 국민국가, 또는 국민국가화의 현상은 확고.
  - 그 국민국가의 존재 위에서 세계화나 세방화를 추구함.
- 이른바 국민국가의 불가역성 (不可逆性)의 명제 (irreversibility thesis).
- 국민국가의 불가역성은 아시아에서 더 효력을 지속할 것임.
  - 국민국가의 해체가 불가능하다면 이에 기초하는 현재의 기본적 언어정책도 그 타당성을 얻을 수 있음.
  - 외국과의 의사능력의 증진이라는 교육목표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자국어중심주의의 원칙은 변함없는 정책으로 작용하고 있음.
- 우리의 역사는 국어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교사의 역할.
  - 언어는 의사소통의 단위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정신적 요소를 포함하는가?
  - 언어의 침탈
  - 그 구체적 집행관으로서의 국어책임관
- 외국어의 공세에 대응한 역사적 경험이 있음
  - 지난 시절에 외국어의 공세는 글의 측면으로 말은 여전히 숭배되지 않았음
  - 선비와 역관의 지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음
- 우리는 왜 개입하는가?
  - 국가 정체성
  - 국가와 민족의 통일성
  - 공동체의 동질성
  - 경제적 효율성
- 우리의 국민국가의 언어철학관은 한글전용과 국어전용이었음.
  - 한글전용은 글자의 기계화라는 명제에서 보여주는 능률성 관점과

누구나가 알기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민주성 관점  
(또는 보편성)의 결합이었음.

- 우리에게서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국민국가에 기초한 언어관도 필요함.
  - 남과 북의 관계에서 통일국가형성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은 남북 양쪽 모두 한국어와 한글을 주된 언어생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임.
  - 남과 북의 같은 민족이 한국어와 한글로 언어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반도의 재통일에 강력한 자산으로 작용할 것임.
  - 따라서 국민 국가의 불가역성은 우리에게 더 와 닿을 수 있음.

## 2) 사회과학적 관점

- 하나되기 (one-nation) 언어관과 울타리치기(two-nation)의 언어관.
  - 울타리치기(two-nation)의 언어관은 전통적 사상으로 의사소통의 수단을 아래 계층과 위 계층으로 나누어 위 계층의 우아함과 그렇지 못한 아래 계층의 상스러움이 대비시킴.
  - 하나되기 (one-nation)의 언어관은 계층 간에 상호 교류 가능한 언어체계의 확립과 그를 지향하는 사고방식임. 대체로 엘리트와 대중을 가르기보다는 그 둘이 가능한 한 함께하는 것이 좋음.

## 3) 이론적 논의의 소결론

- 우리의 역사는 국어가 의사소통의 단위를 넘어 정신적 요소까지 포함.
- 외국어의 공세에 대응한 역사적 경험의 존중.
- 개입의 이유는
  - 국가 정체성
  - 국가와 민족의 통일성
  - 공동체의 동질성
  - 경제적 효율성
-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제도적 장치: 국어책임관
- 국어책임관 제도의 중요성
  - 임계선을 넘은 언어현상을 교정할 필요성
- 엘리트 측면의 접근
  - 임계선을 넘은 듯 함.
  - 정체성을 흔드는 이론을 확대 재생산함.
- 대중 측면의 접근

- 엘리트 흉내내기의 모습을 보임.
- ‘대중 속으로’의 방법론을 생각해 볼 때임.

### 3. 임계선을 넘은 언어공동체 언어의 복원력

#### 1) 임계선이 어디인가

- 현재의 시점에서, 현재의 공간적 좌표에서의 한국어와 한글의 위치
  - 오늘 날에 외국어의 공세는 글을 넘어 말의 공세를 의미함
  - 수용자 측에서는 외국어에 대한 신화 (지나친 열기와 전 국민적 성격임).
  - 더욱이 세계적인 주류 이데올로기에 의해 추동됨을 목격할 수 있음
  - 즉 신자유주의적 언어정책은 공동체에 기반한 언어정책을 역사의 뒤편길로 내몰고 있음
  - 따라서 더 위험하고 대책이 요구됨
- 언어 사이의 갈등소지 미연에 방지
  - 한편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어 우리 속에 외국 언어를 포괄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국력의 향상에 따라 우리의 언어가 외국으로 진출할 필요성이 증대됨.
- 역기능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 무역 순위로 11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어울리는 언어정책이 필요.

#### 2) 복원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잘못된 엘리트주의
- 엘리트의 주장이 율타리치기(two-nation)의 사고방식에 기초함.
  - 영어구사능력이 있는 윗분들의 우아함과 아랫것들의 상스러움이 대비.
  - ‘저 높은 분들을 향하여’라는 이데올로기
- 외국어의 진출
  - 외래어인가 외국어인가.
  - 단어 수준, 관용어구 수준, 문장 수준, 회화 수준.
- 국한혼용과 한글전용
  - 이에 대해서는 거의 통일된 듯함.
  - 다만 한글전용으로 인한 부작용: 연구 필요.
- 영어공용화론
  - 신자유주의적 인식에 기초.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영어사용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경제적인 현상.
- 그 파급효과가 큼.
- 올바르게 않는 말과 글.
  - 심히 일그러진 말과 글.
  - 심히 일그러진 말은 아니지만 교정할 필요가 있는 말과 글.
- Bureaucratese: 행정언어의 병리 현상
- 관용화한 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over-urbanization)
  - : 각 소속 기관별로 그 조정을 국어책임관이 하여야 함.

## 2) 정부와 언어공동체와의 관계

### (1) 국가개입주의와 방임주의

- 언어현상을 자율에 맡길 것인가 타율에 의할 것인가.
  - 강자의 위치에서는 자생력이 확보됨: 규제완화를 요구.
  - 약자의 경우는 시장에서 강자와 경쟁하면 살아남기가 어렵다: 국가개입을 요구.
  - 이 문제는 국가발전 단계에서의 문제임.
- 국가 단계는 정복국가에서 발전국가, 민주국가, 그리고 복지국가로 진행함.
  - 발전국가 단계인 경우, 국가발전을 위하여 국가개입이 그 특징.
  - 민주국가에서는 국가개입의 후퇴.
  - 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의 언어관이 침투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국어책임관 제도가 아쉽지만 공헌하리라 기대.

### 가. 국가개입주의

- 약자의 위치에 서서 국가개입을 요구하여 관철한 대표적인 보기
  - : 프랑스어 - 프랑스어사용법 [투봉(Toubon)법].

### 나. 방임주의

- 자율적 질서(spontaneous order)의 중시.
  - 방임주의의 실천적 모습은 영어권에서 찾을 수 있음
    - : 엘리트는 이를 선호하는 듯.
  - 영어와 국어를 단순비교하기란 쉽지 않음

: 영어는 세계를 시장으로 하여 강자의 위치인데 비해  
한국어와 한글은 방어적 견지임.

○ 우리는 현실적으로 방임주의를 채택하기가 어려움: 국가개입주의.

다. 질서있는 다원주의

○ 필요한 국가개입주의와 과도한 국가개입주의.

- 과도한 개입주의에 대한 경계의 필요성.
- 최소의 정책 변화.

○ 국가개입주의의 근거

- 통일성과 불확실성의 제거
- 역선택의 방지
- 가치재 이론

라. 언어정책 형성에서의 두 방식

○ 위로부터의 방식: 연역적이거나 선험적으로, 또는 논리적 이론의  
연장선에서 결정하는 방식.

○ 아래로부터의 방식: 언중(言衆)들이 사용하는 용례를 기준으로 하여  
귀납적으로, 경험적인 논거를 갖고 결정하는 방식.

3)현 상황의 이해: 임계선을 넘은 복원력을 상실할 가능성

○ 대안 중의 하나: 국어책임관 제도

### III. 국어책임관 제도

1. 국어정책에 국가 간여의 방법

○ 개입의 방법

- 기준설정의 전제: 제도론적 관점
- 제도는 인간의 행동을 인도하는 준거의 틀: 국어책임관 제도의  
제도론적 의미는 국가의 언어현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 개입을 위한 기구

- 완전방임형  
많지 않으므로 고려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음

- 소극적 개입형: 교육과 연계
  - (1) 미국의 정책 변화
    - : 영어를 중심언어 (English Only Policy)로 방향 전환
  - (2) 영국의 언어정책
    - ① 민간 차원의 운동을 국가가 지원 (Partnership)
    - ② Plain English Campaign
- 적극적 개입형
  - (1) 복지에 기초: 스웨덴
  - (2) 법과 제도에 기초: 프랑스, 일본, 캐나다

## 2. 국어책임관 제도

### 1) 국어책임관 제도

- 국어책임관의 개념
  - 국어기본법에 기댄 개념
- 행정학·정책학에 기댄 국어책임관의 개념
  - 행정학에 기댄 개념
    - ① 정부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의사전달의 효율적 관리를 촉진하는 활동.
    - ② 의사전달의 수단을 다듬는 역할의 중요성 전파.
    - ③ 조직의 활동 범위와 조직 구조, 조직구성원의 만족도, 의사결정과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는 의사전달의 활성화는 수단이 되는 언어에 있다.
    - ④ 정부조직의 의사소통 활동은 국민들의 생활의 질과 국가 발전 수준에 직결됨.
    - ⑤ 특히 오늘날과 같이 행정 기능의 확대 및 전문화에 따라 국민생활에 대한 행정의 영향이 매우 크고 행정이 국가 발전을 주도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평가하는데 의견이 일치함.
- 발전행정론에 기댄 개념
  - 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라는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국어책임관은 변화의 관리자나 변화의 촉진자 역할.
  - ② 불균형 전략을 통하여 점진적인 균형으로 진행.
  - ③ 언어를 통한 발전지향적 가치관 동기부여.

- ④ 더 나아가 사회체제적 불균형 전략의 추진자로서 역할 가능.
- 조직론에 기댄 개념
  - 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라는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국어책임관은 변화의 관리자나 변화의 촉진자 역할.
  - ② 불균형 전략을 통하여 점진적인 균형으로 진행.
  - ③ 언어를 통한 발전지향적 가치관 동기부여.
  - ④ 더 나아가 사회체제적 불균형 전략의 추진자로서 역할 가능.
- 언어정책에 기댄 국어책임관의 개념
  - ① 언어사용도 일종의 사회계약.
  - ② 언어사용은 원초적으로 부여된 언어능력(initial endowment)에 기초
  - ③ 연속하는 세대 사이의 묵시적 사회적 약속  
(an implicit social contract)
  - ④ 언어가 쪼갈라진 나라는 언제나 가난하다 (Pool의 정리): 필리핀

## 2) 국어책임관의 역할

### 가. 국어기본법령에 따른 역할

- 법령규정
  - ①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의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 ② 해당 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 ③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 ④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 위의 규정은 원론적인 조항들임.
- 문제는 각 위치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도록 하는가,  
그리고 왜 하는가?

### 나. 이를 재구성하면

- 불응에 대해서 수단 강구.
- 순응에 대한 전략적 거점.
- 무관심에 대한 동기부여 방식 개발로 요약할 수 있음.
- 정책 결정
  - 앞서 언급하였던 관용화한 말과 글의 검토를 비롯한 결정사항들.
  - 소속 기관의 정책결정 차원
- 정책 집행



- 순응과 불응, 또는 무관심에 대한 관료의 태도
  - 위에 언급한 국어 책임관의 고유한 업무로 이끄는 역할.
  - 정책 평가<sup>1)</sup>
  - 정책 환경: 환류
    - 사회 (또는 민간)의 반응에 따른 정부의지와 능력의 변화.
- 로 나눌 수 있다.

### 3. 문제점

- 가장 큰 문제점: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가득 차 있음.
  - 대안이 시급히 필요함.
- 시행상의 많은 문제점: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
  -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음.
  - (1) 전문지식의 문제점,
  - (2) 행정의 문제점,
    - ① 관리의 문제점으로
      - 인사이동, 조직개편, 업무 위임 등으로 국어책임관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짐.
    - ② 의욕의 문제점으로 당사자는 의욕도 없는데 임명이 되어 오히려 불편을 하소연하는 실정임.
    - ③ 대내적 공표의 문제점 (보고체계): 누가 책임관인지 상부기관이나 국어원에 보고도 되지 않음.
    - ④ 대외적 공표의 문제점: 국민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할 필요성.
      - 겸직이므로 누가 국어책임관인지 모름. 분리할 필요성이 제기됨.
  - (3) 겸직의 문제점으로 주된 업무에 치중하다 보면 국어책임관의 업무는 방임되어서 그 일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음.

### 2) 새로운 설계

- 어떤 정책이 시대정신(Zeitgeist)의 흐름을 타고 있을 때 정책의 정착 가능성이 증대
- 국어와 한국어에 대한 수요 증대
- 국어책임관의 수요 증대
- 정치력의 문제

---

1) 소속 기관 단위의 평가를 말하고 법령에 규정된 것과는 별개이다.

#### 4. 시나리오

##### 1)가능한 시나리오

- 시나리오 1: 겸직제를 폐지하고 국어책임관 제도 설치.
- 시나리오 2: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고 능력발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 시나리오 3: 현행 국어책임관 제도를 민간화 하는 방안.
- 시나리오 4: 현행 제도 보완

;국어책임관의 겸직제를 그대로 두고 국어학예사 제도 신설.

##### 2)시나리오 1 (겸직제를 폐지하고 국어책임관 제도 설치)의 검토.

- 고위직 (국어책임관) 신설로 국어 관련 업무의 효율성 증가.
- 승진, 전보 등 인사행정에 문제가 있음.
- 업무의 전문성 등에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

##### 2)시나리오 2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고 능력발전제도를 도입)의 검토.

- 부수적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과 전보, 사후평가 등
- 현행의 국어책임관 자체의 문제점은 해결이 되지 않음.
- 관리주체가 감당할 여력에 문제가 있음.
- 이 제도도 바람직하지 않음.

##### 3)시나리오 3 (현행 국어책임관 제도를 민간화 하는 방안)의 검토.

-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공모제 등을 통한 방식.
  - 그 전제 조건은 시나리오 1의 달성 후에 가능.
- 현 단계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움.
- 있는 제도를 후퇴시킬 수 있는 가능성.
- 이 제도도 바람직하지 않음.

##### 4)시나리오 4 (현행 제도 보완)의 검토.

- 기존의 틀을 존치시킨다는 의미에서 부작용이 적음.
- 현 단계에서는 추진하기 쉬움.
- 있는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
- 이 제도가 바람직함.

## IV. 정책적 제언

## 1. 법률의 정비

### 1)국어책임관 지정 의무화 및 대상기관 범위 명확화(안 제10조)

- ◇ 국어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에서 ‘지정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지정 대상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 및 의미의 명확화.

### 2)국어학예사 배치 규정 신설 (안 제10조의2)

- ◇ 국어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국어책임관을 지정한 기관은 국어학예사를 배치하도록 함.

## 2. 제도의 도입

국어학예사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 ① 직위[(position): 한 사람의 근무를 요하는 직무와 책임]의 입증.
- ② 직급[(class): 직위가 내포하는 직무의 성질 및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인사행정의 편의상 채용,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의 적절성 조정.
- ③ 직렬[(series):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계열]이나 직류[(sub-series):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좀더 유사한 직무의 군]신설의 검토.
- ④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직위가 요구하는 직책 내용을 명시한 것]
- ⑤ 직급명세서[(class specification):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에 따라 결정된 직급의 직책 내용, 자격 요건 및 시험 내용을 명시해 놓은 것으로 이는 채용·승진·보수 등 인사행정의 기준으로 사용된다]의 명확화.

## \*\*\*한국어진흥재단 설립 부분 요약

국내외에서 한국어 능력시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 거주 외국인 취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국내 거주가 전례 없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한국어가 세계어로 자리매김하고 국외에서 언어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보급 전략이 필요하다. 국내 및 국외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의 효율적인 보급

을 위하여, 방만한 소규모 기관을 총괄 관리하고 각 기관에서 중복되는 사업을 통폐합하는 특수 법인재단 설립이 시급하다. 한국어 및 한국 문화 보급을 선도할 ‘한국어진흥재단’의 설립 방안은 한국어 보급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존 기관 중에 그 기능면에서 가장 유사한 기관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이 방안으로 설립하게 되면 기존 기관이 보유한 기본 재원, 인적 자원 및 축적된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그 창출 효과가 지대하다.

# I. 서론

## 1. 연구목적

보통 행정언어라 부르는 행정부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행정조직과 관련된 사회의 언어공동체 속에서 동일한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언어공동체가 출현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언어가 그 사회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친 사람은 신자유주의 창도자인 Hayek (1967)이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인위적인 계획보다 더 중요한 언어의 기능은 사회를 가능하게 묶어주거나 문화를 전승하는 일을 수행하며 언어공동체는 무한한 지혜나 계획보다 우위의 관습을 전해 주는 매개체이다. 따라서 그의 이론을 확장하면 이를 경시하는 것은 규범적인 가치체계의 정립에 역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꼴이 된다. 시골에 있는 나무나 풀뿌리가 중요하듯이 언어로 전승되는 속담이나 관용구는 또 지혜의 다른 형태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의 지식인들은 만약 공용화론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의 IT·서비스산업은 "국제시장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영어공용화론을 들먹이고 있다. 예컨대, 미국 하버드대 MBA를 거쳤다는 이 성용(배인&컴퍼니 한국지사 대표)은 "한국에서 서비스산업이 잘 육성되지 않는 것은 언어 문제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앞으로 100년을 내다본다면 한국어는 경쟁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Ohmynews, 2005.4.12).

이런 주장과는 달리 최근 나온 유엔의 세계 주요 언어 분포 및 응용력 조사에 따르면 영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가 세계 5대 언어로 꼽혔다. 한국어는 스페인어와 일본어 아랍어에 이어 9위로 포르투갈어와 함께 10대 언어에 들었다. 한국어가 이렇게까지 순위가 올라간 배경에는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말을 제2, 제3의 언어로 배우고 사용하려는 그 외국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우리말의 경쟁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어가 세계 9위라지만 더 발전시키기도, 순위 유지도 쉽지 않다. 우리말의 경쟁력을 더 키우려면 보다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말이 건강하지 못한 것은 인터넷 언어와 신조어, 일본어 잔재, 그리고 외래어와 외국어

의 무분별한 사용 때문이라는 진단이 일리가 있다. 이러한 증상은 실생활에서도 느낄 수 있다. 시중의 막말들이 정치권에서 공공연히 사용되고, 길거리에는 국적도 알 수 없는 외국어·외래어 간판이 번쩍이며, 일반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공기업까지도 이름을 외국어로 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문화일보,2007.5.21).

본 연구의 목적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언어를 담당하는 직책인 국어책임관 제도를 정착시키고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시킬 수 있는 기준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국어책임관 제도가 국어기본법의 제정으로 도입이 되었으나 2년이 경과한 현재 제도 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원인 대책을 찾는 것이 연구의 주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국어 책임관 제도의 취지를 살펴보고 국어기본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국어책임관 제도는 법령 개정을 통해서 전문화·구체화하고 기능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 아래 이를 위한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필요성

개인 언어들이 모여서 개별언어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은 동시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개별언어공동체의 규칙이 생성된다. 그와 아울러 개인 언어는 개별언어공동체가 생성한 규칙에 급게 된다. 이 과정이 확장되면 민족언어공동체, 국가언어공동체, 인류언어공동체로 진화한다. 그리고 이들 언어공동체에 상응하는 문화공동체가 성립한다(이규호,1989). 사피어-워프 가설이나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이 문화공동체의 의식 체계 아래서 개인이나 집단은 사고(思考)하고 행동한다. 세계적인 언어로 자리잡은 언어를 살펴보면 그 나라의 경제력 때문만이 아니다. 언어의 경쟁력은 그 나라의 경제력과 문화 수준, 국민의 모국어 사랑과 비례한다.

먼저 국가와 언어공동체와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국가-사회의 2분법 아래서의 국가(국어책임관 제도)의 역할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고, 역사적 변천에 따른 언어정책의 관점에서 현 시점에서 국민국가는 불가역성(irreversibility)이라는 기초 위에서 논한다.

한편 국가의 통합을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하여는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이는 하나되기 언어관으로 나타난다. 그 좋은 보기가 벨기에이다. 현재 우리에게 남아 있는 위기는 하나되기의 언어관 (즉 현 시점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문제점)이 깨뜨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되기의 언어관은 결과론의 관점이고 그 과정에서 외부적 요소가 들어와 한국어의 여러 규칙에 맞게 변용하고 내재화를 갖고 공용어로 기능할 수 있으나 어느 한계선을 넘으면 (즉 임계선) 어디까지가 한국어이고 한글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한 대책이 국어책임관 제도이다. 그러나 연구결과는 국어책임관 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현재 제도 그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그 이유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1) 전문지식의 문제점, (2) 행정의 문제점, (3) 겸직의 문제점으로 나눌 수 있다. 전문지식의 문제점이란 국어책임관에 임명된 이들이 국어 일반에 대해 지식이 없음을 말하고 (2) 행정의 문제점은 다시 둘로 나뉘는데, 관리의 문제점과 의욕의 문제점이 그것이다. ① 관리의 문제점으로 인사이동, 조직개편, 임무 위임 등으로 국어책임관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② 의욕의 문제점으로 당사자는 의욕도 없는데 임명이 되어 오히려 제도로 인하여 생기는 불편을 하소연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 (3) 겸직의 문제점이다. 이 겸직의 문제점은 주된 업무에 치중하다 보면 국어책임관의 업무는 뒷전이 되어서 그 일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고 설사 안다고 해도 신경을 쓸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점이다. 어쨌든 국어책임관 제도의 의의는 언어의 개입주의를 의미하고 국어책임관 제도를 통한 언어정책에 정부가 간여함을 의미한다.

### 3. 연구내용 및 범위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바는 국어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인데 국어정책이란 국어를 재료로 하여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국어정책에 관한 이론적 원칙을 먼저 도출하고자 한다. 나아가 세계 여러 나라의 국어정책을 살펴보고 주요 국가들 비교 및 비교에 의한 시사점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개입을 위한 기구에 초점을 두는데 첫째 유형은 완전방

임형인데 많지 않으므로 고려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둘째 유형은 소극적 개입형으로 대체로 교육과 연계하고 있다.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의 정책 변화이다. 영어를 중심언어 (English Only Policy)로 방향 전환하고 있다. 영국의 언어정책은 ① 민간 차원의 운동을 국가가 지원 (Partnership)과 ② Plain English Campaign이 주목할 만하다. 셋째 유형은 적극적 개입형으로 복지에 기초하는 스웨덴 유형과 법과 제도에 기초하는 유형인데 중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의 경우 국어정책은 일제 치하의 사회표준 방식의 유형에서 독립 후에는 국가 표준 방식으로 전환 후 일관성있게 개입주의를 견지하였다. 더욱 최근에는 한국어정책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더더욱 국가 간여의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적정 방안에 대한 탐구가 논의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어정책에 국가 간여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로 기준설정의 전제를 논의하고 그 설치된 기구를 일별할 것이다.

#### 4.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현지조사연구, 국어책임관에 대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이 동원될 것이다. 문헌조사는 국내의 국어책임관 관련 문헌, 언어정책 관련 외국 자료 등을 살펴볼 것이고, 현지조사연구는 영국의 언어 관련 사회운동을 현지에서 조사하고 국가 표준과 사회표준의 비교를 할 예정이다. 국어책임관에 대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는 전국의 국어책임관과의 대화를 통한 방법과 설문조사로 이루어진다.



## II. 이론적 논의

### 1. 국어정책의 의의

#### 1)미시적 국어정책

국어정책의 개념을 어느 학문에 기초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를 미시적 국어정책(Micro-Language Policy)과 거시적 국어정책(Macro-Language Policy)으로 나누고자 한다. 언어학·국어학적 기초에서 국어정책을 논하는 것은 앞엿것의 관점이고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논하는 것은 뒤엿것의 시각이다. 진정한 국어정책은 위의 두 영역의 접근 방법을 아울러 연구하여야 진정으로 국어정책이라 할 수 있다. 즉 국어학이나 언어학은 정책의 내용을 제공하고 [이를 (A)로 표기하면], 행정학이나 정책학은 정책의 형식을 제공하므로 [이를 (B)로 표기한다면], 진정한 국어정책이나 언어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두 학문의 교류를 통한 접근방법이 된다 [즉 (A)+(B)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가지는 국어정책의 근본 태도는 (A)+(B) 관점에서 살펴본다. 그러면 먼저 미시적 측면에서 국어정책을 논의한 글을 살펴보자.

미시적 측면에서의 국어 정책을 ‘현재의 국어 문제를 해결하는 일’로 정의한다 (안병희, ). 이에 따르면 국어정책의 하위 범주로는 아래와 같은데 이를 차례로 보자.

① 맞춤법과 표준어는 사회표준 (1930년대에 조선어학회의 노력으로 규범화되고 통일)으로부터 해방 이후 정부표준 (정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상승되어 국어 정책으로 확립되었다. 그 이후의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그 규범이 시행되어 오는 사이에, 특히 6·25 이후에 일어난 급격한 사회의 변화는 구어의 변화를 초래하여 맞춤법과 표준어의 손질을 요구하게 되었다. ----- 이에 정부에서는 1970년 국어심의회의 건의에 따라 국어조사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맞춤법과 표준어를 검토하여 수정하게 하였다. 그 위원회의 안을 당시의 ----- 국어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문교부가 1988년 1월에 고시함으로써 맞춤법과 표준어의 수정은 일단 단락이 지어졌다. -----더구나 1999년 『표준국어대사전』의 간행으로 모든 어휘의 표기와 발음 등 세세한 부분의 규범까지 확정된 것이다. -----1930년대의 맞춤법통일안과 표준어의 사정이 우리 나라 국어 정책의 바탕이란 사실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수정된 규범을 따르

는 일이 통일되고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위하여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대한 국어 정책은 새 규범을 널리 보급하여 누구나 지키게 하는 데 있다.

② 한자 문제에 관하여는 1945년 12월 미군정청 학무국 (그 자문 기구인 조선교육심의회)의 결의와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의 한글전용법 (모든 공용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할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에 따라 한글전용으로 굳어졌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안병희, ).

③ 국어의 외래어 표기에 관한 원칙은 새 글자나 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한글 24자모만으로 표음주의(表音主義)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 1933년에 공표된 조선어학회의 『한글맞춤법통일안』에 한 조항으로 제시된 이 원칙은 1940년의 『외래어표기법통일안(外來語表記法統一案)』을 비롯하여 몇 번 바뀐 표기법에서 줄곧 지켜져 왔다. ----현재의 표기법은, 1984년 정부에서 1986년의 아시안게임과 1988년의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특히 영어 사용자에게 편리하도록 제정하여 공표한 것을 수정하여 지난 7월에 고시된 것이다. 이 표기법은 국어의 음성형이 표기에 반영된 전사법(轉寫法 transcription)의 방식이다. 그러나 1984년 이전에는 국어의 한 음소가 로마자의 한 글자 또는 글자의 연속에 대응하는 표기법인 전자법(轉字法 transliteration)이었다. ---현행 로마자 표기법은 전사법과 함께 전자법을 허용하는 이원화(二元化)의 체계인 것이다(안병희, ).

④ 국어에 스며든 외래적 요소를 추방하고 고유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국어순화(國語醇化)라고 하는데 ---본격적인 운동이 전개된 것은 해방 이후의 일이다. ---- 1970년대부터 영어를 비롯한 상당한 서구어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언어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외래적인 요소를 가진다. 그 요소는 외국어가 아니라 외래어(外來語)이다. 문화가 뒤진 민족의 언어는 외래어를 수용함으로써 어휘를 풍부하게 하고 세련시키게 마련이다. ---국어순화정책이 우리의 특수한 역사와 상황에서 추진되지만 경직되지 않고 유연한 방식을 채택한 일은 옳다고 생각된다(안병희, ).

⑤ 문자 생활이 손으로 행하던 방법에서 컴퓨터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뀌고 있다. 신속하고 정확한 문자 생활을 위하여는 이러한 기계화가 필요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문자 생활의 기계화와 관련된 이들 문제의 해결은 모두 국가표준화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안병희, ).

⑥ 국토 분단은 국어도 남북에서 큰 차이를 가져오게 하였다. --- 남한은 대체로 1930년대 조선어학회의 맞춤법과 표준어를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크게 수정한 맞춤법과 평양말을 바탕으로 한 문화어를 규범으로 하였다. ---이러한 남북 언어의 차이는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 --- 원활한 교류와 완벽한 협력을 위하여, 나아가 통일국가를 이루기 위하여 이러한 차이는 극복되어야 한다. ---차이에 대한 착실한 조사와 차이의 극복에 대한 다각도의 방안 강구가 문제 해결의 발판으로 우선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북한의 정책 당국자나 국어학자와의 꾸준한 협의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안병희, ).

## 2)거시적 국어정책

거시적 국어정책은 사회과학적 지식에 기초한다. 그러나 이런 관점의 국어정책은 다른 분야에 비해 논의가 적게 된 영역이다. 거시적 국어정책을 위한 전제조건을 먼저 살펴보자.

(1) 전제 조건①: 국어정책의 방향은 시대정신과 어울려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관점으로 볼 때, 시대정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선 후기 산업사회라는 시간적 특성이다. 후기산업사회는 문화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오늘날의 문화는 섞임이 특색이다. 그 섞임의 문화 속에서 ‘나’ 또는 ‘우리’ (즉 정체성)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특히 오늘날 우리 눈 앞에서 전개되는 다문화 사회의 현상 속에서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가? 위 질문에 대한 정답은 언어는 정치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자원이라는 사실이다. 또 다른 시대정신은 세계화의 현상이다. 세계화는 사회생활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지리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행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체 사이의 접촉에서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 세계화의 갈등은 언어주권과 문화공동체의 문제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국가개입주의에 기초한 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시간적으로는 국민국가의 불가역성에 기초하고 세계화와 세방화를 고려하는 정책이 시대정신에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공간적으로는 국가통일을 위한 국어의 동질성의 유지라는 시대정신이 필요하다. 셋째로, 국어를 사용하는 언어공동체 형성, 유지, 발전을 위한 노력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2) 전제 조건②: 국어정책의 현실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이다.

언어공동체가 사용하는 국어가 바람직한가? 여기서 바람직하다면 계승·발전 방향을 위해 국가는 노력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언어공동체에 소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만약 바람직하지 않다면 임계선을 넘었는가 아닌가?하는 판단을 하여야 한다.

(3) 전제 조건 ③: 국어정책에서의 이질요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기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표기의 문제, 어휘의 문제, 그리고 말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첫째로 표기의 문제이다. 글자를 쓸 때에 이질요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문제는 특히 한자와 영어 alphabet의 문제로 귀결된다. 한자의 경우는 국한 혼용론이나 아니냐로 귀결되고 이 경우는 많은 논쟁이 있어 왔고 한 방향으로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영어 alphabet인데 특히 영어 약자의 경우가 일반화하는 현상이 눈에 띈다. 예컨대, Manchester Ut. (또는 Man. Ut.)와 같은 방식을 말한다. 둘째는 어휘의 문제로 국·영 혼용이라 할 수 있다 (그 보기: Parking Space가 적다). 셋째로는 말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는데 영어 공용화론이 바로 이것이다. 현재의 논쟁은 이들이 서로 엉켜 복잡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4) 전제 조건④: 그 이질요소가 심각한가?

일부 학계의 주장은 긍정적이다. 즉 이질화를 국어의 풍요로움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대로 일부 주장은 부정적이며 그 결과 국어의 순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이질화를 정도의 차이로 본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질화가 임계선을 넘었는가 아닌가, 또는 다른 관점에서는 국어가 이들 이질요소를 내재화할 수 있는가에 있다는 태도를 취한다.

## 2. 국어책임관 논의의 기초

### 1) 국가와 언어공동체와의 관계

#### (1) 국가(정부)의 개념

현대국가에 있어 국가역할과 공공정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란 특정한 영역 내에서 합법적 폭력(legitimate violence)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 ① 영역(a territory) ② 지배를 위해 물리력의 사용가능성, 그리고 ③ 국민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회적 행동을 그 요소로 한다. 이를 언어 현상에 결부시키면 지배력을 사용하여 언어공동체의 언어를 규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위자는 국가라는 결론이 나온다.

## (2) 국가의 언어공동체에 대한 역할

국가(정부)와 사회(언어공동체)의 이분법 언어현상에서 국가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우선해야 하는 일은, 과연 국가(state) [또는 정부(government)]는 사회(언어공동체)의 활동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해야 한다. 우선 국가가 사회 구성원의 동의에 따라 성립되었고 그 두 당사자 사이에는 묵시적 계약(implicit contract) 관계라는 전통적 이론을 따르면 언어공동체(사회)가 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세종조의 언어정책을 살펴보면 그 이후 역사 발전에 정책이 미치는 파급효과에서 국가의 역할이 지대함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회’라는 말은 ‘시장’이라는 말과 구별된다는 주장과 동일시하는 견해가 병존한다. 여기서의 사회나 언어공동체, 시장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은, 바로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언어공동체는 일정 수준까지는 (이른바 임계선) 자율적 내재화가 있으나 이 임계선을 넘어가면 의사소통의 장애나 정체성의 문제 또는 불안정한 사회언어체계의 생성과 같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즉, 자율 메카니즘이 효율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는 환경이나 사례가 있다는 점도 동시에 알고 있어야 한다.

## (3) 국가와 언어공동체와의 관계 요약

여기서 국가와 언어공동체와의 관계를 요약한다면 국가는 언어공동체를 존중하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의 전개에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 또 사회적 합의가 국가로 하여금 개입 요구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 때 개입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언어공동체의 언어가 국가 개입의 변수인데 그 판단 기준을 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국가 언어정책

의 담당 기구가 할 일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문제가 된다. 어느 태도를 취하든 변하지 않는 원칙은 ‘언어공동체에 있어서 언어의 의미는 세계를 내다보는 창 (인식의 수단)이라는 점이다. 또 언어는 개개인의 삶과 민족의 역사에서 작용하는 힘이라 할 수 있다. 즉 언어는 문화를 창조하는 힘으로 인식할 수 있다.

## 2) 언어현상에서 국가의 역할

### (1) 언어의 기능과 그 이론

앞서 설명하였듯이 세계화의 갈등은 언어주권과 문화공동체의 문제가 나타난다. 앞엿것은 외부의 힘에 대한 문제이고 뒤엿것은 내부의 문제이다. 앞엿것의 보기는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에서 ‘협정 영문본이 국문본에 우선한다’거나 ‘FTA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법을 WTO 공식 언어인 영어나 불어, 서반아어 중 하나로 공표하라’ (경향신문, 2006.9.5)는 미국의 요구사항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언어주권과 관련이 있다. 문화공동체와 관련이 있는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것은 정부종합청사에 걸려 있는 Innovision이 아닌가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요즘 국민으로서의 의무 대신 인류로서의 의무 주장하는 논리도 등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번 LG 경제연구원의 세미나에서 나왔듯이 ‘100년 후엔 한국어가 경쟁력이 없어질 것’이라는 독단에 기초하여 영어로의 노력을 강조하고 우리의 것을 존중하는 태도를 비웃는다. 이 논리는 세계인을 상정하고, 우리 민족이나 문화공동체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들은 언어를 경제를 위한 도구로 본다는 점에서는 발상의 전환을 하고 있다.

우선 먼저 언어의 기능을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재편성해 보자. 첫째로, 대체로 언어는 개인의 인격과 관련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류(柳)씨 성을 유씨로 강요하는 법령은 인격침해라는 결정이다. 이하 신문 기사를 살펴보자.

대전지법 민사1부(재판장 손차준)는 12일 유(柳)모(81)씨가 호적 성의 한글 표기를 '유'씨에서 '류'씨로 정정해달라는 호적정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항고심에서 호적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상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 소수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성씨의 한글 표기 통일을 위해 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적 이념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성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하고 혈통의 상징하는 기호인 데 성의 '柳'씨를 유로 표기하더라도 한글 표기만으로는 역시 유로 표기되는 '劉'씨, 兪'씨와 구별되지 않고 성에 대해 두음법칙 적용을 강제할 만한 정당한 목적이나 구체적인 이익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성에 대한 두음법칙 강제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 내지는 제한하는 규정인데도 법률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행정규칙인 대법원 예규(제520호 제2항)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유(劉, 兪)씨 등과는 달리 한글 이름 성을 '류'씨로 불러온 문화 유(柳)씨 후손들과 일부 '리(李)'씨, '라(羅)'씨 문중 등의 호적정정신청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유씨는 '문화 유(柳)'씨로 그 성의 올바른 한글표기가 '류'임에도 호적에는 두음법칙을 적용, '유'로 잘못 기재돼 있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원에 호적정정신청을 냈으나 지난 3월 1심에서 기각됐었다. (ohmynews, 2006.6.12).

둘째로, 언어는 개인의 정서와 관련된다. 우리에게 우리 문학이 더 가슴에 와 닿는 의미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아래 글을 살펴보자.

잠시 눈을 감고 어머니라고 불러 볼 때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마더’ 혹은 ‘마마’하고 불러 볼 때는 눈시울을 붉히는 한국 사람이 없다. 이는 ‘어머니’라고 불렀을 때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어머니라는 대상에 관한 지식이 떠오름과 동시에 어머니에 관한 여러 가지 느낌이 떠오른다. 그러나 ‘마더’라고 되뇌게 했을 때 이 단어가 어머니를 지칭한다는 것, 즉 지적인 측면만 떠오른다. 또한 ‘어머니’라는 단어는 ‘마더’라는 단어보다 쉽게 배울 수 있고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단순히 외국어와 모국어의 차이를 넘어 모국어 내에서 가슴이 훈훈해지는 단어나 가슴이 서늘해지는 ‘정서 단어’와 그렇지 않은 ‘중립 단어’가 있고 앞것은 뒤것에 비해서 기억이나 학습이 더 잘 된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어떤 지식을 습득할 때 지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이 함께할 때가 지적인 면만 있을 때에 비해 학습도 잘 되고 더 오래 기억된다고 한다. 이 사실은 학습 환경이 왜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이어야 하며 정서적으로는 왜 슬프고 무미건조하면 안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신문 2007.9.18).

셋째로, 언어는 위에서 본 바처럼 언어는 개인과 관련되는 측면과 아울러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언어공동체이다.<sup>2)</sup> ‘개인의 언어는 공동체에 의해 굽는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개별 개인의 언어는 공동체의 규범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언어공동체를 행정조직이라 정의할 수도 있고 행정과 사회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즉 개인의 언어는 공동체의 규범에 따르면

2) 국어학자 이승녕은 이를 언어사회로 표현하였다.

록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 그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다.

사례연구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VS. “오목가슴이 우리하다”)

#1. 병원에 갔을 때 증상을 표준어로 정확히 설명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의사의 치료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법정소송에서 낭패를 볼 수 있다 #1. 먼저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다. 30대 초반 남자가 병원을 찾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처음엔 위염으로 진단했다고 한다. 하지만 통증이 계속되자 추가로 혈액검사를 실시한 뒤 이번엔 비결석 담낭염이란 판정을 내렸다. 이 남자는 내시경 검사 도중 갑자기 사망했는데 부검 결과 ‘대동맥박리증’으로 밝혀졌다.

#2. 다음은 전북에서 벌어진 일. 50대 후반 남자가 병원을 찾아 “오목가슴(명치)이 우리하다”며 호흡곤란·하지무감각 증세를 호소했다. 병원 측은 감염성 결장염으로 진단한 뒤 입원토록 조치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얼마 안돼 “가슴이 답답하다”며 병실을 나서다가 쓰러져 곧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대동맥박리증’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우리하다’는 “몹시 아리거나 또는 육신육신하다”는 뜻의 경상도 방언이다. 경상도 사람들 사이에선 통증을 표현하는 말로 흔히 쓰이며, 심지어 애인과 헤어진 뒤 가슴이 아플 때에도 “마음이 우리하다”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한다.) 대동맥박리증은 고혈압, 고령 등으로 탄력을 잃은 혈관이 혈압을 이기지 못해 찢어져 사망하게 되는 초응급질환. 극심한 통증으로 흔히 “찢어진다”, “죽을 것만 같다”고 호소하게 된다. 임상 증상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통증”, 하반신 마비 등이 있으며 즉각 흉부 엑스레이, 심초음파 검사, 대동맥 조영술, CT, MRI 등으로 확진하는 게 기본이다. 따라서 두 사망자 가족들이 “오진 때문에 환자가 사망했다”며 각각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서로 달랐다고 한다. 대구 건의 경우 사망자 가족이 만족할 만한 선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전북 건은 그렇지 못했다. 재판부가 화해 권고를 했으나 금액이 적어 유족이 거부하는 바람에 판결 선고까지 간 것. “오목가슴이 우리하다”는 호소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통증’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었다. 결과는 원고 패소. 사망자 가족이 항소를 포기해 사건은 종결되고 말았다. “만약 ‘오목가슴이 우리하다’가 아니라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고 자신의 증상을 표현했다면 당연히 승소하였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사한테 제대로 치료받으려면 적어도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제대로 표현해야 된다고 하니 부모님에게 국어 공부 좀 시켜 드려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세계일보 2007.3.2.).

넷째로 언어는 권력현상과 관련이 있다. 국가나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개인 대 개인의 경우에도 이 현상이 나타난다. 국가 내의 언어권력의



문제란 어느 언어를 표준으로 또는 공용어로 하느냐의 문제에서부터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비교우위를 가지는가 또는 그 사회적 격차 등을 모두 포괄한다. 특히 다민족 국가인 경우에는 어떤 언어를 표준어로 채택하는 가는 민감한 문제이다. 이런 사례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캐나다, 벨기에 등인데 여기서는 벨기에를 보기로 하자.

벨기에가 총선 이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새 연립정부를 출범시키지 못하면서 언어권 사이 해묵은 분열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인구 1060만명의 벨기에는 크게 네덜란드어권인 북부 플랑드르와 불어권인 남부 왈롱, 그리고 두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수도 브뤼셀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인구비율은 플랑드르가 60%, 왈롱이 40%를 각각 점하고 있다. 인구는 플랑드르가 많았지만 건국 이후 상당기간은 왈롱의 독무대였다. 불어권이 지배계급을 독차지했고, 경제적으로도 석탄·철강 산업의 융성으로 훨씬 부유했다. 주로 농업에 종사했던 플랑드르 사람들은 "뒤떨어진 시골뜨기"로 취급받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차별받았다. 1970년 이후 5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에 의해 현재의 복잡한 연방제가 탄생했지만 두 언어권을 포괄하는 정당은 물론, 언론매체마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오히려 분리가 깊숙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상황이 역전되면서 이번엔 플랑드르 쪽에서 과거의 차별에 앙갚음식 분리주장을 펴고 있다. 플랑드르는 물류 및 화학 등 지식기반 산업으로의 전환에 성공하면서 유럽내에서 영국, 독일을 앞지르는 풍요를 누리고 있다. 반면 과거 지배계급이자 경제적으로도 훨씬 부유했던 왈롱은 철강·석탄 산업이 사양화를 맞으면서 플랑드르 쪽에서 떼어주는 일종의 교부금에 의존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이번 연정협상에서도 경제권을 쥐고 있는 플레미시 쪽은 지역 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잘사는 플레미시 쪽이 떨어져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는 프랑크론 정당들은 헌법개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불어권에 속하는 수도 브뤼셀 지역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체적으로 분리에 찬성하는 비율이 25%에 그쳐 아직은 다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벨기에 정당 지도자들이 언어권 사이 갈등을 조정, 새 정부를 조속히 띄우는 것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지 주목된다 (pressian.2007.9.6).

이런 언어권력의 문제는 국가 대 개인,<sup>3)</sup> 개인 대 개인,<sup>4)</sup> 지방 대 지방의 경우에도<sup>5)</sup> 이 현상이 나타난다. 호칭을 예로 들어 보자. 씨(氏)는 어느 정도를 높이는 칭호일까? 왜 CJ 그룹을 비롯한 여러 기업에서 ‘님’으로 호칭을 통일했을까? 왜 조선조에 송시열의 칭호를 송자(宋子)로 하려 했을까? 이런 문

3) 법률용어와 법률언어는 국가 대 개인의 보기이다.

4) 호칭(씨, 님, 선생, 박사, 교수, 子, Mr, Miss)이나 높임법은 이 보기인데 우리의 경우는 gender의 문제와 결부되기도 한다.

5) 경상도 언어와 전라도 언어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제의 본질 속에는 언어권력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다섯째로 언어는 경제적 현상과 관련이 있다. 즉 언어는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좀 오래된 자료인데 아래 표는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표 1> 1인당 국민소득과 사용언어의 수

나라	1인당 국민소득(\$)	사용언어의 수
프랑스	16,090	10
영국	12,810	7
독일(서독)	18,480	7
덴마크	18,450	4
아이슬란드	21,660	1
우루과이	2,470	1
일본	21,020	5
네덜란드	14,520	5
스웨덴	19,300	5
에디오피아	120	120
베트남	180	77
필리핀	630	164
차드	160	117
베닌	390	52
볼리비아	570	38
인도네시아	440	659
수단	480	135
파푸아 뉴기니	810	849

주)1987년 기준은 에디오피아, 차드, 베닌, 네덜란드; 1985년 기준은 베트남, 나머지는 1988년임.출처: Coulmas(1992:24)

이런 현상에 기대어 1인당 국민소득과 사용언어의 수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언어가 쪼갈라져 있는 국가는 언제나 가난하다’라는 Pool의 정리가 나온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통일된 국어와 한글의 힘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국민의 합의를 쉽게 이끌어 낸 데에도 원인이 있다. 이런 면에서 경제학자가 주장하는 언어의 경제발전기능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아울러 Pool의 정리의 반대해석으로 통일을 향한 강력한 자산은 언어에 기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 사람의 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국민 1인당 소득이라는 기준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의 면면을 보면,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의 불과 8%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한다. 분명 법의 지배라든가 재산권, 세금, 금융정책, 문화와 종교 등 많은 것들이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성공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역할을

좀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사용 언어가 사용자의 부(富)의 정도 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 (세계일보, 2006.7.17).

여섯째로, 자본주의 체제 속의 부(富) 등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의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은 이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왜기를 쓰고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가? 아파트 명칭을 지명도 높은 브랜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므로 명칭을 시대 흐름에 맞게 바꾸려는 입주자들의 욕구가 생겨난다. 다음의 기사를 보자.

최근 오래된 아파트 주민들이 새 브랜드로 아파트 이름을 바꾸는 이미지 변신 작업이 한창이다. 지난해 12월 수원 구매탄 현대홈타운 주민들은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새 브랜드 '현대 힐스테이트'로 아파트 외벽을 바꿨다. 불과 3년여 전 현대홈타운으로 분양 승인을 받은 이 아파트가 새 옷을 갈아입은 이유는 최근 브랜드명만으로도 아파트 가격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내친 김에 주민들은 수원시에 건축물 기재사항까지 변경하려 했으나 수원시가 집값 상승을 이유로 명칭 변경 신청을 불허했으나 브랜드 변경작업은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현행 법규상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없이 아파트 명칭을 변경해도 제재할 조항이 없다"고 말한다. 용인 죽전택지개발지구 밖에 위치한 풍산아파트는 2005년 주민들의 요구로 죽전택지지구내 마을 이름을 딴 '내대지마을 풍산아파트'로 이름을 바꿨다. 택지지구와 불과 100여m 반경내에 위치한 이 아파트가 택지지구내 마을이름을 사용하면서 주민들이 얻어낸 부가가치는 아파트값 인상이라는 달콤한 혜택을 체감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건설사들이 새 브랜드 홍보를 위해 주민들에게 명칭 변경을 요구해도 주민들이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기존 브랜드 이미지가 새 브랜드보다 인지도나 상징성 면에서 더 부가가치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오래전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구 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새 브랜드(아이파크)로 교체할 것을 권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는 후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며 페인트 칠 새로 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전했다.

일곱째로, 언어는 문화공동체와 관련이 있다. 먼저 문화공동체 사이의 측면부터 살펴보자. 현재 이 현상은 다문화 사회와 관련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채원호, 2007). 즉 언어공동체가 서로 다른 경우 한 언어공동체에서 어떤 과정을 겪어서 순탄하게 원하는 언어공동체에 편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그 동안 행정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문화공동체와 언어공동체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문화공동체가 전적으로 언어공동체에 의존하지는 않지만 언어공동체는 문화공동체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훔볼트가 말한 바대로 '우리는 언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현실을 인식'

하고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언어에 의해 구속된다 (이규호,1989:92). 그런데 ‘모든 언어는 늘 일정한 문화적 전통 속에서 자라난다. 그러므로 모든 언어 속에는 그 일정한 문화적 전통---담겨 있어서 외부적인 혹은 내부적인 현실을 파악하게 한다. 곧 모든 언어는 그것이 그 속에서 자라난 문화적인 전통 속에서 이룩된 일정한 세계상 (Weltansicht) 혹은 세계관(Weltanschauung)을 표현한다’ (이규호,1989:93)고 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여 ‘언어는 생각하고 그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 이상(以上)의 것으로 우리의 세계관을 구성하는데 기본이 되는 요소’라거나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Farmer,1999:49)라는 견해들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사례>

몇 년 전 음악가이자 역사가, 철학자 겸 칼럼니스트인 발린트 바즈소니는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라든가 법의 지배와 같은 영국과 미국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나에게 말했었다. 미국에 이민 온 다른 사람들도 민주적 자유시장체제에서 살게 돼서야 자유나 법의 지배 같은 단어들의 의미를 진실로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필자는 최근 경제용어와 개념들을 최신의 각국어로 번역하여 국제표준사전을 편찬하는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어려운 점은 아랍어로 번역하는 작업이다. 아랍에서는 본래는 코란에 나오지 않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기술과 아이디어들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이런 규정이 제약이 된다 해서 단어 사용을 승인하는 공식기구까지 생겨났다. 문제는 이런 공식기구들이 계속 출현하는 새로운 기술과 개념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제약을 준다는 점이다. 영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영어 사용에 규제를 가하는 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분명 법의 지배라든가 재산권, 세금, 금융정책, 문화와 종교 등 많은 것들이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일보, 2006/7/17).

따라서 사회과학자들은 경제적·사회적 삶에서 언어의 역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덟째, 언어는 나의 나뉘, 즉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혁명을 거쳐 강대한 중앙집권국가가 된 프랑스와 구태의연한 영방국가 집합체였던 독일 사이의 힘의 격차는 확연했으며, 전쟁 결과 독일을 명목상 통괄해온 신성로마제국은 소멸했다. 독일 각 지역이 나폴레옹군 지배 아래 들어갔고, 왕정 타도와 자유주의 개혁을 바라는 기운이 높아가는 한편으로 점령자 프랑스와는 다른 ‘독일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정체성)를 찾으려는 정신운동도 거세게

일어났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철학자 피히테의 ‘독일 국민에게 고향’이라는 연설이었다.

이런 변화는 음악의 세계에도 파급될 수밖에 없었다. 오페라는 이탈리아어로 해야만 되고 독일어 작품은 징슈필(노래극)이라며 오페라가 아니라고 했던 시대에 베버의 〈마탄의 사수〉는 등장했다. 가수의 아리아보다도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중시됐으며, 사용 언어도 노래하는 듯한 이탈리아어도 아니고 섬세한 프랑스어도 아닌, 자음이 많고 악센트가 분명한 독일어다.

-----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나폴레옹전쟁을 겪으면서 대항적인 근대적 아이덴티티가 형성돼 그런 ‘독일인’상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100년 뒤 나치가 베버와 바그너 음악을 상찬하고 국민동원에 활용한 역사도 잊어선 안 된다.

피히테는 ‘독일인’ 아이덴티티의 근거를 ‘독일어’에서 찾았다. 그에 따르면 독일어를 말하고, 독일어로 생각하는 인간이 ‘독일인’이다. 여기에 근대 ‘국어 내셔널리즘’의 원형이 있다. 당연히 프랑스에서도 프랑스혁명 뒤 일찍부터 국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정통적인 프랑스어를 말하는 인간이야말로 진정한 프랑스인이라는 국어 내셔널리즘을 다른 어느 곳보다도 강력하게 실천했다(한겨레, ).

인구가 적은 동(洞)을 묶어 정부가 통합을 추진하자 새로운 동 이름을 놓고 벌써부터 '동명(洞名)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두 동을 통합하면 새로운 제3의 이름을 붙이거나 두 동 중 한 곳의 이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자 주민들이 왜 내가 사는 동 이름을 바꾸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역사가 깊은 곳일수록 동 이름을 포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동명 분쟁으로 가장 큰 진통을 겪는 곳은 종로구다. 역사가 깊으며 몇 세대에 걸쳐 살고 있는 토박이가 많기 때문이다. 종로구에서는 삼청동-가회동, 청운동-효자동, 명륜3가동-혜화동 등이 각각 합치게 돼 있다. "대한민국에서 삼청동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삼청동의 브랜드 가치를 절대 포기 못 한다"(삼청동 주민) "면적과 주민 수에서 가회동이 월등하다. 당연히 가회동으로 합쳐야 한다"(가회동 주민) 가회동 주민 1000명이 회원인 사단법인 북촌가꾸기회 이형술(70) 회장은 "가회동은 조선이 한양을 수도로 정한 뒤 613년 동안 써온 뿌리 깊은 이름이기 때문에 결코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삼청동 주민 모임인 삼청동번영회 이건설(67) 회장도 "새 이름을 정하도록 강요한다면 삼청동과 가회동 주민 간에 큰 다툼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제3의 이름을 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반대하고 있다. "뿌리 깊은 이름을 왜 버리느냐"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 사이에선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내년부터 같은 동 이름을 써야 하는 청운동과 효자동도 입장이 갈린다. "종로가 서울 1번지라면, 청운동은 종로 1번지다"(임형경 청운동 주민 자치위원장) "효자가 많아 이름 높았고, 인구도 청운동보다 두 배나 많다"(정홍우 효자동 주민자치위원장) 구청은 일방적으로 이름을 정하지 않고 주민끼리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종로구청 이승열 자치행정팀장은 "동 이름에 대한 주민의 자부심과 애향심이 대단해 통합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과거 달동네라는 인식이 강해 주민의 호감이 높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참에

동네 이름을 바꾸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개발 뒤 신흥 아파트촌으로 떠오른 서울 관악구는 이번에 동 통합작업을 계기로 전체 동 이름을 손보기로 했다. '봉천'이나 '신림'이 들어간 동 이름이 달동네를 연상한다는 판단에서다. 주민들도 "달동네를 연상하는 예전 이름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며 동 이름 변경을 원하고 있다. 서울시가 11일 동 통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봉천본동, 봉천9동 통합 동의 후보 명칭을 '봉천동'으로 내놓자 관악구청에는 "왜 봉천동이 라는 이름을 계속 써야 하느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관악구는 '신림' '봉천'이 들어가는 20여개 동을 성현동, 청룡동, 금란동, 미성동 등으로 바꿀 계획이다.

아홉째로, 언어는 정치적 행위와 관련이 있다. 이를 가장 잘 인식하고 실행한 정권이 북한 정권이다. 아래의 설명을 보자.

10월 2-4일까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남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두 사람은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상회담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난다. 사람에게서 말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이다. 어눌한 말투가 어떤 때는 사람들을 더 감동시킬 수 있지만 감동시키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정치가들의 말은 인민대중을 설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걱정과 열정이 담긴 말을 통하여 사람들을 설득함으로써 자신의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 다양한 인간군상들이 언어를 통하여 서로를 알아가고 정치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는 언어적 행위라고 이야기되기도 한다. 말 자체가 정치인 것이다 (Ohmynews. 2007.9.17).

## (2)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위한 이데올로기: 언어공동체주의

언어공동체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언어정책과 어긋난다. 먼저 언어공동체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언어정책을 비교해 보자. 언어공동체주의는 언어공동체적 가치에서부터 출발하고 신자유주의언어정책은 개인적 가치에서부터 출발한다. 언어공동체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고 존중하지만 신자유주의 언어정책은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지 못할 존재로 보고 인간의 이기심을 가장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본다. 언어공동체주의는 연대성을 중시하지만 신자유주의 언어정책은 경쟁을 중시하는 점 등에서 많은 중요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언어인식은 언어공동체주의보다는 신자유주의 언어정책에 기초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따라 국어보다 영어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영어신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다만 언어공동체주의는 언어집단주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언어집단주의(예: 왜정시대의 언어정책, English Only Movement 등)는 집단의 가치를 앞세워 개인의 가치와 대립하지만 언어공동체주의는 개인의 가치를 기본으

로 하고 있지만 언어공동체주의는 개인의 가치를 절대화하지 않을 뿐이다. 즉 개인의 가치 내지 자유를 가장 중요한 기본가치로 인정하고 존중하나, 공동체의 소중함도 함께 중요시하는 태도를 지닌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피폐하여지면 개인의 자유와 가치도 존중받기 어렵고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언어공동체주의는 언어공동체의 소중함을 주장하면서도 그 방식이 권위주의적이거나 강제적이지 않고 개개인의 양식과 이성애 호소한다. 언어공동체의식의 제고를 위해서 대화와 설득, 그리고 교육이 주로 사용되며 정치적 폭력, 사회적 압력 등은 부정된다. 언어공동체구성원들에게 각자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공동체를 위한 기여와 책임을 요구하는데 그 요구의 방식은 술선수범, 구성원들 간의 진솔한 대화와 설득, 상호교육과 자기수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국어책임관 제도를 논의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언어공동체주의는 국어의 역사성과 의사소통성, 창조성 인정한다. 따라서 역사적 의미나 공동체의 의미를 묻지 않고 오로지 개인의 시장적 가치를 신봉하는 신자유주의 언어정책과 대비된다. 다만 언어공동체주의에 기초한 국어책임관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을 고려하여야 하고 순응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언어공동체주의의 구체적 형태가 질서있는 다원주의로 나타난다. 오늘날의 사회는 다원주의에 기초. - 정책의 일관성: 따라서 가능한 정책은 변경하지 않는 게 좋음. -

### 3. 언어정책의 유형과 역사적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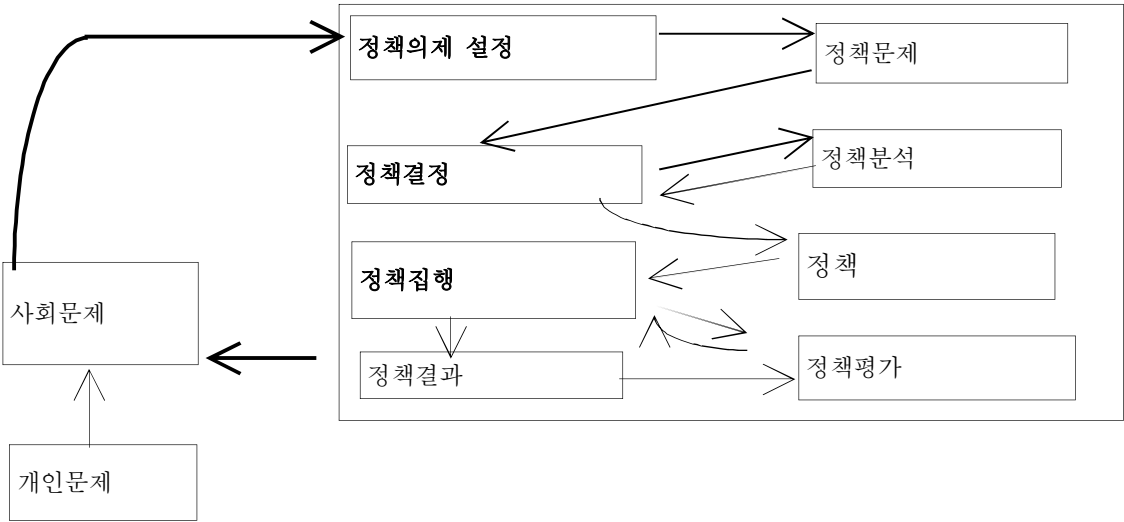
#### 1) 언어정책의 유형

##### (1) 국가개입주의와 방임주의: 국가의 발전 단계와 개입의 문제

언어사용에 관하여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적 차원은 사회적 약속의 수용이라는 점에 기초하지만 구체적 선택의 측면에서는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 문제는 사회차원에서 어떤 언어현상을 사회문제(social problem)로 볼 때 그 해결책이 자율에 맡길 것인가 타율에 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앞것을 방임주의, 뒤것을 국가개입주의라

일컫는다. 이를 <표1>을 이용해 설명하면 문지기를 넘어 투입으로 이어지고 산출로 나타나면 국가개입주의이고 그렇지 않으면 방임주의이다.

<표1 분석의 틀>



문지기<sup>6)</sup>

투입<sup>7)</sup>

산출

6) 이스턴의 원래 모형에 따르면 문지기(a gate-keeper)는 특정되지 않는다 (Easton,1965). 이 글에서는 문지기가 정부체제의 경계에 있다고 설명한다.

7) 실제로는 이 과정도 복잡하다. 일반적으로는 social problem이 social issue로, 공중의제 (public agenda)로, 공식의제 (official agenda)로 진행된다고 한다. 다만 여기서는 단순화시켜 사회문제와 정책의제체택으로 나눈다.



이 논쟁은 세계관에 관련되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잘못을 따지기는 어렵다. 방임주의와 국가개입주의의 문제는 두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국가발전 단계에서의 문제이고 둘째는 정책과정에서의 문제이다. 먼저 발전국가와 민주국가를 논하고 뒤엎것은 정책과정에서 언급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국가 단계는 정복국가에서<sup>8)</sup> 발전국가, 민주국가, 그리고 복지국가 등으로 진행한다 (김태성과 성경룡, 1999:26).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국가를 거쳐 현재 민주국가의 시대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겠다 (김태성과 성경룡, 1999).<sup>9)</sup> 여기서 초점은 발전국가와 민주국가인데, 우리 사회의 갈등의 언저리에는 발전국가의 향수에 치중하는 세력과 민주국가의 지향에 무게를 두는 세력간의 갈등이 존재한다. 개인의 권리에 치중할 것인가 국가의 발전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에 대한 합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발전국가 단계인 경우, 국가발전을 위하여 국가개입이 그 특징인데 비해 (김태성과 성경룡, 1999:30-31) 발전국가 이후의 단계인 민주국가에서는 국가개입은 사적 분야에는 물론이고 공적 분야에서도 개입의 후퇴를 가져왔다.<sup>10)</sup> 국어(언어)정책에 있어서도 우리는 민주국가에 어울리는 태도와 사고방식이 결여되어 있다.<sup>11)</sup>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영역에서 발전국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민주국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sup>12)</sup> 이를 참고로 할 때 국어(언어) 정책도 장기적으로는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를 민간 어문단체들이 숙고하여야 할 것이

---

8) 이 과정을 논하는 것은 여기서는 의미가 없으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정복/약탈국가의 기능은 국가형성, 전쟁유발, 외부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추출이다 (Tilly, 1992).

9) 민주국가에서 복지국가로의 전환은 노동계급의 성장과 그 권한의 확대에 기인한다. 즉 민주국가 운영의 두 원리의 구조적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국가가 출현하는데 그것은 국가에 의해 제도화된 조정원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제도화된 조정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는 민주국가보다 확대된 국가개입이 정당화되고 이 점에 있어 다시 발전국가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단계라고 하기엔 미흡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민주국가 단계라고 해 두자.

10) 국가기능은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하는데 민주주의 원리는 공적 분야에서 작동하는 원리이고 사적 분야에서는 자유주의 원리인바, 이는 재산권과 시민권의 보호와 법과 질서의 유지에 목적이 있다 (김태성과 성경룡, 1999:31-33).

11) 이에 대해서는 이광석 (2005)을 참고하라.

12) 가장 대표적으로 정부기관으로 설치된 규제개혁위원회, 인권위원회 등이 있고, 이름을 바꿀 때 본인의사를 존중해 쉽게 바꿀 수 있게 한 판례 등이 그것이다.

다.<sup>13)</sup> 여기서는 개입주의와 방임주의부터 언급하자.

## (2) 국가개입주의

강자의 위치에서는 자생력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반면에 약자의 경우는 시장에서 강자와 경쟁하면 살아남기가 어렵다. 따라서 국가개입을 요구하는 성향이 있다. 언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약자의 위치에 서서 국가개입을 요구하여 관철한 대표적인 보기를 프랑스어에서 찾을 수 있다. 프랑스어도 영어의 영향으로 약자의 위치로 전환되었다. 이에 대한 반응이 국가개입의 요구였고 프랑스어 사용법 (바로리올법)이나 프랑스어사용법 [투봉(Toubon)법] 등의 제정이다.

프랑스어에서 왜 국가개입이 필요한가? 영어로부터의 보호를 들 수 있다. 어떻게 국가가 개입하는가? 법령으로 하고 있다. 이 시사점은 무엇인가? 약자의 위치에 있는 (국가의) 언어는 어떤 보호망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고 그 보호망이 사라지면 생존에 위협을 느낄 수 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더 와 닿고 있으며 다른 관점에서는 다른 언어권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노출되고 있다는 보기이다. 대표적으로 보호망을 유지하려는 규범화와 외부의 영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화와의 관계이다.<sup>14)</sup> 규범이 어느 정도 현실을 규율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규범화가 그 작용을 못할 때 현실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함은 어떤 연유인가? 예컨대 b가 된소리로 나서 관용으로 굳어진 경우 (보기: 뻘스)<sup>15)</sup>도 이 현상을 ‘외래어 표기법’으로 제어해야만 하는가?<sup>16)</sup>

현재 한국어 사용에 있어 영어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첫째 이유는 물론 ‘외래어 표기법’을 비롯한 어문 규범의 추상성에 기인하지만 또 다른 요인은 로마자나 영어의 표현을 소극적으로 (또는 *마지못해*) 따라가는 현 모습에 더 큰 원인이 있다.<sup>17)</sup> 즉 어떤 미래상을 예측하고 그 방향으로 물꼬를

13) 문화관광부의 직제 개정으로 종전의 국어정책과가 국어민족문화과로 바뀐 의미를 잘 살펴야 할 것이다.

14) 기타 언어예절의 파괴, 학문용어의 문제, 언어사대주의 등등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15) 아울러 의미분화의 경향도 보인다. 보이와 뽀이를 참조하라. 아울러 메일과 편지의 의미분화에도 주의.

16) Lenis와 fortis기준보다 voiced와 voiceless를 채택하기에 일반 언중(言衆)이 한국어의 초성에 무성음이 올 때 이를 인식하여 된소리로 낼 것이다.

17) 예컨대 국립국어원에서는 ‘blue ocean’을 ‘대안시장’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 이유는 이미 그 단어가 너무 통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용되기 전에 거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끄는 방식이라 할 수 있겠다. 이점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다.

터 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의 규범화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다.<sup>18)</sup> 이 글에서 주장하는 것은 예컨대 초기 단계에서는 잔디밭에 들어가지 못하게 금지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자연스레 잔디밭을 가로질러 다니고 더 이상 금지의 강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새길을 터 줌으로서 규범의 효력도 살리고 쓸데없는 위반을 양산(量産)할 가능성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이 국어정책을 하는데 있어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 (3) 방임주의

민주국가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론인 신고전파는, 국가개입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Friedman, 1962). 왜냐하면 민간부문의 역량은 자율적 질서(spontaneous order)를 창출할 수 있는 (George & Wilding, 1994),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기제이기 때문이다.

방임주의의 실천적 모습은 영어권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의 언어정책은 국가에 의한 규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sup>19)</sup> 영어표기의 관행도 사적 영역에서 확립된 것으로 인쇄 기술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쇄기술에 따른 책들의 전파는 영어표기의 관행을 변경하기 힘들 정도로 정착시켰다. 심지어 발음에 비해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이 영어표기의 관행은 발음의 변화도 맞춤법 아래서 적응하도록 강요했다 (송기중, 1993:20-22). 예를 들면, make의 원래 발음 [ma:ke]<sup>20)</sup>는 대모음전이 (the Great Vowel Shift) 이후 [meik]로 바뀌었지만, 영어표기의 관행은 표기법을 전과 같이 'make'로 고정시켰다. 영어권 사람들은 약간의 교육을 통해 영어표기의 관행을 이해한다. 즉 표기법과 발음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다. 비록 영어 표기법이 한국인의 관점에서 한심한 듯이 보여도 (송기중, 1993:20), 영어권의 언중 (言衆)에게는 그들 나름의 합리성이 존재하고 그 때문에 그런 표기법이 지속할 수 있었다. 예컨대, 영어 표기법에서 보여주는 장음의 표기가 대표적이다. 한국어 표기에는 [mal](horse)과 [ma:l](speech)의 구별이 불가능하고 그 둘

18) 특히 접사를 이용한 단어형성의 측면에서도 기준이 없다. 예컨대, keeping 하다/ keep하다, manage하다/ managing하다/ management하다, irony하게도/ ironical하게도/ ironically하게도 등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른 규범을 재정립하여 앞선 예를 규율한다면 영어 단어의 우리말화는 '(V 또는 N) 어간+ 하다'로 한다는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매니지한다, 킵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등이 표준에 가까운 말로 인정될 것이다.

19) 그 보기가 포인턴(Pointon, 1983)이 편찬한 영어 발음 사전이다.

20) 대괄호 안의 표기 즉 [ma:ke]는 원래 음성기호(phonetic expression)를 나타낸다. 이 글에서는 IPA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부호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앞엿것과 뒤엿것을 구별하지 아니한다.

은 모두 [말]로 실현된다. 그런데 영어 표기와 발음법 체계에서는 [si:n] 은 seen을 의미하는 반면, [sin] 은 sin을 의미한다. 즉 표기법의 차이는 자연스레 의미의 분화로 연결된다. 이 점에서 우리의 표기법보다 장점이 있고 오랜 동안 지속되어 온 이유라 할 수 있다. 이 현상이 국가가 개입하여 강요한 결과인가? 그렇지 않다. 여기에 영어권의 언어정책의 핵심이 있는데 바로 방임정책이다<sup>21)</sup>.

하지만 영어와 국어를 단순비교하기란 쉽지 않다. 영어는 세계를 시장으로 하여 강자의 위치인데 비해 한국어와 한글은 방어적 견지에 서고 있다.<sup>22)</sup> 따라서 현실적으로 방임주의를 채택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하여 국어기본법에서 보듯 국가개입주의를 선호하고 있다.

#### (4) 질서있는 다원주의<sup>23)</sup>

문제는 과도한 국가개입주의에 대한 우려이다. 즉 민간 부문이 할 수 있는 것도 국가영역이 행하고 있는데,<sup>24)</sup> 그러한 국가개입주의를 채택하더라도 우리는 과도한 개입주의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첫째, 복수의 표준을 인정하는 것이다.<sup>25)</sup> 이를 통해 쓸데없는 논쟁의 차단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 변화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꼭 필요한 경우는 정책편차의 시정에 한정한다. 셋째, 다양한 결합가능성에 대한 예측가능한 규범의 정립이다. 휴대폰, 핸드폰 (C.P.), 휴대전화, 손전화, 셀룰로폰 (C.P.), 모바일폰 등에서 보는 바처럼 다양한 표현이 쓰인다. 이 중 어느 것이 한국어로 편입될 것인가? 또 이 경우 어원이 영어인 접미사나 접두사의 사용을 금할 수 있는가?<sup>26)</sup> 아니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표준으로 정해야 한다.<sup>27)</sup> 넷째, 우리말과 외래어, 외국어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여야 하고 이

21) 이 점은 2중언어 사용자 때문에 언어에 개입하는 경우와는 차원이 다르다. 참고로 한때 영국에도 언어에 개입하려는 경향이 있었지만 (송기중, 1993:22) 성공하지는 못했다.

22) 이런 관점에서 LG 연구원 토론회에서 주장하였다고 보도되었다시피 100년 후를 내다보면 한국어는 생존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마이뉴스 (2005.4.12)를 참고하라.

23) 이 용어는 창익 한국에서 따온 것이다 (문화관광부, 2004:205). 이 책에서 언어정책의 틀 전환을 요약하고 있다. 그 기본 방향은 **규범주의적 무질서에서 질서있는 다원주의**로 나아가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설명은 “국어문화지수 개발, 어문규범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을 통해 규범과 국민의 현실 언어생활 사이의 괴리를 없애 나가고자 한다”고 주장하며 또 “표준어의 개념과 범위도 재검토하고 지방화, 분권화 시대에 걸맞게 지역어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24) 대표적으로 표준대국어사전의 편찬에서 보듯 국가기관이 관여하여 민간시장을 다 죽이고 말았다.

25) 같은 견해로 민현식 (1999)을 참조하라.

26) -tic 등도 검토대상이다 (보기: 유아tic하다).

들의 병존 가능성에 대한 수요파악이나 대처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외래어나 외국어의 우리말화를 위해 각 분야로부터 협조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컨대 속옷과 언더웨어는 같은가 다른가?<sup>28)</sup> 다섯째, 외국어나 외래어의 번역문제이다. 이 때에도 복수의 선택가능한 번역이 필요할 것이다.<sup>29)</sup>

## 2) 언어정책 형성에서의 두 방식

언어정책의 형성과정에서 두 종류의 결정 방식에 대해 토의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결정주체에 관한 것인데 다원주의나 엘리트주의나에 대한 논쟁이고 다른 하나는 결정과정이 아래로부터의 방법이나 위로부터의 방법이나가 그것이다.

먼저 형성주체의 측면에서 다원주의(pluralism)와 엘리트주의(elitism)를 살펴보고자 한다.<sup>30)</sup> 이를 국어(언어)정책과 관련하여 설명하면 소수의 국어학이나 언어학을 전공한 엘리트들이 (또는 어느 한 학파가) 그 분야에서 규범이나 정책을 주도하고 결정하는 모습은 엘리트주의이고 다원주의란 그 규범이나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소수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다수에 의한 결정을 말한다. 즉 과두제(oligarchy)가 아니라 다두제(polyarchy)라는 얘기이다 (정정길,1994:272; 정정길 외,2004:282). 문제는 이 엘리트들이 '동질적이고 폐쇄적이다. 엘리트들은 비슷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엘리트로서의 집단 의식과 응집력이 강하기' (정정길,1994:266) 때문에<sup>31)</sup> 이의 시정을 위한 방법으로서 다원주의에 주목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은 대체로 엘리트들이 규범이나 정책에 주도권과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볼 때 엘리트들이 그들이 아닌 국민(또는 학계의 소수파)과의 일체감이나 동질성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다. 따라서 어떻게 이를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는 앞에서 언급된 하나되기 전략 (one-nation

27) 예컨대, 예그린, 길벳, 푸르지오 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 등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8) 중앙일보 (2005. 9. 23)를 참조하라.

29) 물론 이 때도 보다 대중적 접근이 필요하다. 덧붙여 New York가 뉴욕이라면 North Yorkshire는 노스 요크셔인가/ 북 요크셔인가/ 북 요크 주(州)인가/ 노스 요크 주인가? 따라서 이런 문제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어를 넘는 단위의 표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어쨌든 질서 있는 다원주의로의 길을 찾으려는 작은 시도들이 필요하다.

30) 원래 이 논쟁은 정치학이나 정책학에서 정책과정에서 지배집단의 존재 유무를 둘러싸고 진행된 논쟁이다 (정정길, 1994:264-274; 정정길 외, 2004:280-287).

31) 이런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심하게 표현하면 편파적일 수 있다.

strategy)의 정당성과 상통한다. 이를 위하여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국어(언어)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sup>32)</sup>

이제는 위로부터의 방식과 아래로부터의 방식을 이야기하자. 앞것은 정책결정자(들)이나 규범제정자들이 모여 연역적이거나 선험적으로, 또는 논리적인 연장선에서 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아래로부터의 방식이란 일반언중(言衆)들이 사용하는 용례를 기준으로 하여 귀납적으로, 경험적인 논거를 갖고 결정하는 방식이다.<sup>33)</sup> 앞것이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고 두루 적용될 수 있는 잣대를 지니고 있는 점은 장점이나 규범과 많이 벗어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뒤것의 경우는 그 반대이다. 즉 현실 밀착적인 모습을 보인다. 우리의 경우 앞것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다른 방식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고 너무나 이 방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 방식의 문제점을 더 보이면 예컨대, 짜장면이나 껌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언중의 발음(짜장면으로 발음)과 규범(자장면으로 규정)의 괴리를 볼 수 있다. 모두 다 짜장면으로 발음하는데 표준발음으로 자장면으로 고집함은 아래로부터의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위로부터의 방식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그 둘이 어긋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은 정책은 현실에 기초하기에 아래로부터의 방식으로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 구성 방법은 맞춤법을 고칠 때 반영하는 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현실 표기와 발음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이다.<sup>34)</sup> 즉 자장면이라 쓰더라도 짜장면으로 쓰더라도 다 표준으로 인정하고 발음도 표준발음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경우는 외래어인 경우이다.<sup>35)</sup> 실제 국어 또는 국어학자가 그 역할을 다 못한 부분이 이쪽이다. 따라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방식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방식의 채택을 위하여는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즉 위와 같은 경우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표기 또는 발음이 얼마나 많은지 먼저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이것이 질서 있는 다원주의가 아닐까? 우리는 그 역순으로

32) 이와 관련된 개념들이 지방화, 분권화, 민간화의 방법 등이므로 정책결정자나 민간 학회는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광석, 2005).

33) 대표적으로는 영어의 경우 표준발음은 많이 쓰이는 쪽으로 정리된다. 포인턴(Pointon, 1983)을 참조하라.

34) 이런 점에서 주목할 보기는 삭월세를 사글세로 고친 것이다.

35) 유만근 (성균관대 교수)의 지적에 따라서 battery를 보자. 발테리, 바테리, 밧테리, 밧테리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표기가 등장한다. chocolate 의 경우도 초콜렛, 초콜릿, 초콜레트, 초쵸렛 등등이 존재한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관련된 모든 현상을 다 조사하라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또 될 소지가 있는 대표적인 것들만 조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진행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다.

### 3) 현 상황 이해: 임계선을 넘은 내재화를 상실할 가능성

○ 대안 중의 하나: 국어책임관 제도

## 2) 역사적 변천에 따른 언어정책

국어(언어)정책의 참뜻을 사회과학적으로 해석한 대표적인 학자인 로칸(S. Rokkan)의 이론을 소개하기 위하여 국민국가 성립(Nation-building),<sup>36)</sup> 세계화, 그리고 세방화로 나누어 국어(언어)정책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자.<sup>37)</sup>

### (1) 국민국가의 성립

국민국가 이전의 세계는 종교적 보편성과 언어의 다양성의 시기였다. 수도원이나 교회 부속학교에서의 방언을 표준문자화한 (alphabetization) 역사적 의미는 표준의 확립과 국민적 차원에서 언어통일을 위한 초석을 쌓았다는 데 있다. 국민국가의 성립은 로마 카톨릭 권위의 붕괴와 함께 찾아왔다 (Flora, 1999:163). 이 과정에서 국민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언어였다 (Flora, 1999:145). 국민국가의 성립에 따라 그 초기단계에서는 2중 언어사용이 강요되었는데 하나는 인근 사회와의 의사소통이고 또 하나는 다른 지방사회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었다.<sup>38)</sup> 국민형성은 이 과정을 통해 국민국가 이전의 로마 제국이 유산으로 남겨놓은 라틴어를 대체하고 분화하였다. 그들은 유럽 국민국가의 중심언어<sup>39)</sup>와 (중심언어는 아니지만) 표준으로 확립된 주변언어<sup>40)</sup>와 어느 정도의 자율성만 가진 주변언어 (ineffective standard but some autonomy),<sup>41)</sup> 그리고 한계언어(marginal status)<sup>42)</sup>들

36) 그는 영토형성과 국민형성을 구별한다 (Flora,1999). 이 글에서는 국민형성만 다루기로 한다.

37) 이 부분의 기술은 플로라(Flora,1999)에 의한다.

38) 로칸에 따르면 인근 사회를 위한 언어가 사용되는 곳은 가정과 지역이고 다른 지방사회는 시장, 관청, 외부사회라고 한다 (Flora, 1999:171). 그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많은 언어 중 소수만이 의사소통 하는데 표준적 지위로 올라섰다는 것이다.

39) 그들은 Portuguese, French, English, Danish, Swedish, Dutch, German, Italian 등이다.

40) 그들은 Welsh, Icelandic, Finnish, Flemish 등이다.

41) 그들은 Irish, Basque, Sardinian 등이다.

42) 그들은 Gaelic, Lappish 등이다.

이며 (Flora, 1999:175).<sup>43)</sup> 그들은 각국의 언어로 정착되고 각각 국민적 정체성의 상징이 되었다. 즉 국민국가 성립<sup>44)</sup>과정에서 각 지역의 방언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언어를 상승시켜 언어와 문자의 표준으로 만들어 간 역사가 유럽의 역사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언어생활에 있어서도 해당된다. 일부 학자가 주장하듯 한글이 전반에 걸쳐 확고한 표준으로 상승한 것이 해방 후 60년에 불과하다.<sup>45)</sup> 그러나 그 60년의 세월이 (소수의) 몇몇 원칙을 확고히 하기에는 짧았는지도 모르겠다. 예컨대 띄어쓰기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영어권의 경우, 초등학교 수준을 마치면 쉽게 띄어쓰기를 이해하는 것 같다.<sup>46)</sup> 반면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이를 식별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많이 경험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더 많은 시행착오를 요구할 것이다.

## (2) 세계화의 충격

세계화<sup>47)</sup>의 충격은 경제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김세균,1998; 김운자,1998; 이우진1999 Mishra,1999). 다 알다시피 신자유주의<sup>48)</sup>의 공격은 어떤 나라의 고유성을 보존할 공간을 남겨두지 않을 정도로 집요한데 (김성구 등,1998; 강내희,1998)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말의 역사성과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공통성에 대한 공격도 포함되었다. 지난 60년 동안은 말의 역사성과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공통성은 불가침의 영역처럼 견고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 앞에서는 그 역사성도 잊혀져 가고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말의 공통성은 바람 앞의 등불이 되어 인류구성원으로서의 영어공통성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43)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경우 국민형성이 삼국의 통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선어 표준말사정이나 맞춤법의 완비부터이거나 해방이후에 한글이 중심위치로 올라온 시절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1949년의 한글전용법은 그 의미가 심대하다.

44) 특히 여기서 국가형성과 국민형성의 차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로잔에 따르면 스페인의 경우 국가형성은 되었겠지만 국민형성에는 회의적이다 (Flora, 1999:145). 바스크(Basque) 분리주의 운동을 생각해 보면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스코틀랜드나 웨일즈의 경우 여전히 강력한 반(anti)잉글랜드의 정서가 남아 있어서 자국의 학교에서는 자국어 교육이 한창이다.

45) 이러한 필자의 주장에 대해 한글전용이 오랜 우리의 전통이고 국한 혼용이야말로 유길준의 *서유견문* 이래의 짧은 전통이라는 반론이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국가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하므로 60여년이라는 주장은 한글전용이 국가정책으로 인가받은 이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장도 큰 잘못은 없다고 본다.

46) 이 기술은 전적으로 필자와 영국 뉴카슬(Newcastle)의 한 초등학교 교사와의 인터뷰(2003/10)와 필자의 관찰에 의한다.

47) 미쉬라(Mishra,1999)는 세계화를 '국민경제가 보다 더 개방되고 초국가적(supranational) 경제 변수 (economic influences)에 좀더 의존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이는 지난 세기말에 일어난 3대 사건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48) 미쉬라(Mishra,1999)의 견해에 따르면 세계화는 신자유주의 또 통화주의 (monetarism)와 동일시하고 다른 세계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 신자유주의의 공격은 국어정책에 전환을 요구하고 영어 사용능력의 증대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데올로기를 확산시켰다. 신자유주의 시대 이전에는 국어 문장에 영어 단어를 섞어 쓰는데 지나지 않았지만 신자유주의 시대의 영어 사용능력은 영어문맥(syntax)적 요소의 도입을 거쳐 영어구사능력의 요구로 나아가며 글 중심에서 (즉 쓰기와 읽기) 말 중심으로 (말하기와 듣기) 옮겨가는 현상이다. 그 과정은 두 단계를 거친다. 첫째는 통사적이든 비통사적이든 간에 영어문맥적 요소의 도입이다 (예컨대: my wife가 baby-care를 했다). 그 둘째 단계는 영어구사 능력의 도입이다 (보기: my wife took care of my baby). 영어 사용능력의 증대를 요구하는 이데올로기는 지나치게 영어 산업을 부추기고 있다. 예컨대, TOEIC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실제 필요한 능력이 그 시험으로 측정되는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하다.<sup>49)</sup> 그런데 국어는? 좋은 보기가 요즘 신입사원에게는 국어가 더 문제라는 회사의 인사담당자의 지적이다.<sup>50)</sup> 영어로 말만 하면 우수한 인재이고 학술용어도 가능한 한 영어 이름이 되어야 하고 아파트 이름도 영어로 지으면 가격이 상승하고 등등의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런 상황은 영어의 실용성의 위력과 신자유주의의 공격에 국어전용 정책은 흔들리고 있다는 좋은 보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세계화는 한글과 국어의 후퇴의 측면도 있지만 한국어가 외국으로 진출하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증가하기에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포함) 한국어의 중요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KBS의 한국어 검증시험은 이런 추세 of 한 보기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이 어떠한지가 관건이다.

### (3) 세방화(世邦化: glocalism)

유럽의 현상은 세계화와 함께 세방화로 나아가고 있다. 즉 국가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가까운 지역간의 교류가 증대되어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어 가고 있다. 예컨대, 영국의 도버와 프랑스 칼레의 관계는 영국 도버와 잉글랜드 북부의 뉴카슬 지방의 관계보다 더 돈독하다. 네덜란드의 꽃시장은 인근 지역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우리도 앞으로 부산과 후쿠오카의 관계가 부산과 강원도 지역보다 더 긴밀한 관계일지도 모르고 인천과 청파오의 관계가 인천과 강릉과의 관계보다 우선할지도 모른다.<sup>51)</sup>

49) 따라서 유학하러 갈 때 TOEFL이나 IELTS는 요구할지언정 TOEIC는 요구하지 않는다.

50) 중앙일보, 2005년7월 5일자 참조.

이 세방화의 추세는 하나의 공용어, 또는 상대방 언어의 학습 필요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지역언어의 중요성도 재인식하도록 강요한다. 이런 현상들은 자연히 다양한 언어 사용능력의 중시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지역언어의 생존 몸부림과 다양한 언어 사용능력, 공통언어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또 한편 필요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는다. 그러므로 앞서 이야기한 세계화와 세방화는 국민국가화의 현상과 세계화의 경향의 2층 구조를 강요하고 있고

'개인의 선택에 따른 언어'라는 원칙이 많이 작용한다. 이런 현상은 다른 언어에 관해 더욱더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지만<sup>52)</sup> 자국어에 대한 강한 애착은 변함이 없는 듯하다.<sup>53)</sup>

#### (4) 국민국가의 불가역성 명제

여기서 필자는 우리의 경우 서구에서 진행되어 온 위 도식이 그대로 적용되는가에 회의적이다. 프랑스의 경우, 언어정책의 견지에서는 자국에서 국민국가의 흐름이 그대로 온존한다. 즉 세계화나 세방화를 지향하는 서구에도 국민국가, 또는 국민국가화의 현상은 확고하며 그 국민국가의 존재 위에서 세계화나 세방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이를 국민국가의 불가역성 (不可逆性)의 명제 (irreversibility thesis)<sup>54)</sup>라고 할 수 있다.

51) 이런 관계 때문에 필자는 외국어 표기정책에 있어 원음주의가 자국을 중심주의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는 첫째 유럽 상호 간에는 같은 문자를 쓰고 있지만 자기 언어에는 자기 방식의 읽기가 정착되어 있기에 자국어인지 외국어인지 식별할 수 있고 외국어라 판단되면 외국어 방식을 따른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Skocpol, Przeworski 등이 그 보기이다. 둘째로 잘못 또는 지나치게 알려진 보기가 Paris, Rome 등이다. 물론 이들은 자국을 중심주의를 채택하지만 원음주의도 많이 보인다. 예컨대 프랑스 휴양도시 Nice는 나이스가 아니라 니스로 발음한다. Mont가 들어가는 지명도 매 한가지이다 (보기: 몽셀미셀). 아스날 축구 팀의 프랑스 출신 득점왕(goal-getter) Henry는 영국인들은 앙리로 발음한다. 따라서 어느 한 면만 보고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셋째로 상대방 존중의 방식에 관한 합의이다. 예컨대 어느 한 나라에서 지명을 변화시키면 (봄베이를 뭍마리로 버마를 미얀마로) 다른 나라에서 따라 주는 것 등이다. 넷째로 국제화의 현상 등을 들 수 있겠다.

52) 스코틀랜드나 웨일즈의 경우도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언어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 다만 이들의 경우 언어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영국이라는 전체 국민국가의 일부로 기능하려고 하는 사이의 모순으로 고뇌하고 있는 듯하다. 그들은 유럽연합의 출현이나 세방화라는 새로운 모습에 희망과 당황이 교차하고 있는 듯하다.

53) 영국 고등학교 (Newcastle Royal Grammar School) 교과과정을 보면 자국어인 영어와 수학이 주당(PPW) 5단위이고 인접국가 언어는 4단위, 과학은 3단위, 사회과목은 2단위 순이다.

54) 이 용어는 복지국가의 현상을 압축 표현한 말로 미쉬라의 용어이다 (Mishra, 1990; 김태성과 성경룡, 1999). 이를 빌려와서 국민국가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 사용하려 한다.

우리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서 서구와 같은 흐름이 일어나기 위하여는 상당히 오랜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역사의 청산이라는 시대적 조류와 패권추구에서 공존의 틀의 확립이라는 고통스런 과정을 수반할 것이고 이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든 국민국가의 불가역성은 아시아에서 더 효력을 지속할 것이다. 국민국가의 해체가 불가능하다면 이에 기초하는 현재의 기본적인 언어정책도 그 타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외국과의 의사능력의 증진이라는 교육목표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자국어중심주의의 원칙은 변함없는 정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자와 언어의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국민국가의 언어철학관은 한글전용과 국어전용이었음은 앞서 언급하였다. 한글전용은 글자의 기계화라는 명제에서 보여주는 능률성 관점<sup>55)</sup>과 누구나가 알기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민주성 관점<sup>56)</sup> (또는 보편성)의 결합이었고 또 민족적이었다. 그런데 이 명제는 글자의 기계화 (또는 컴퓨터화)가 이루어지니 능률성은 추구해야 할 원리로 더 이상 여기지 않고 있다. 또한 누구나가 알기 쉽게 접근가능하다는 민주성과 보편성도 일단 이루어지니 이를 업신여긴다. 또 민족적이라는 것도 세계적인 매력에 밀리는 형편이다. 즉 한글전용정책의 성공이 보편성 대신 수월성의 추구로 이어지게 하였다.<sup>57)</sup>

한편 남과 북의 관계에서 같은 민족이지만 통일국가형성은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통일국가형성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은 갖추고 있다. 즉 한반도의 남북 양쪽 모두 한국어와 한글을 주된 언어생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축복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남과 북의 같은 민족이 한국어와 한글로 언어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반도의 재통일에 강력한 자산으로 작용할 것이다.<sup>58)</sup> 따라서 국민 국가의 불가역성은 우리에게 더와 닿을 수 있다. 두루 알다시피 북한의 경우 강력한 한글전용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에서 언어적 (더 넓혀서 문화적) 인프라의 구축에 장애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장애를 가져오는 두 흐름은 방향은 다를지언정

55) 능률성의 기본적 의미는 투입 대 산출의 비율을 말하는 경제적 능률을 말한다 (박동서,1984). 그러나 여기서는 보다 넓게 효율성, 생산성 등을 포괄하여 사용하였다.

56) 여기서 말하는 민주성도 보다 넓은 의미로 (박동서,1984), 보편성이나 쉬운 접근성 등의 개념도 포함한다. 쉬운 접근성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는 한겨레 (2005.10.10)에서 보도한 노회찬 의원의 경우를 참조할 것.

57) 필자는 한글전용정책의 성공이 영어시장과 한자시장의 확대를 낳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는 사교육시장을 말하는 것으로 공교육과는 차원이 다르다. 공교육에서 한자와 영어를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을 시키고도 사교육 시장을 키운 것은 이에 기초한다.

58) 개성공단에서 남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의 노동력이 결합하여 생산하는 모습을 보라. 외국 인력으로 생산한다면 의사소통에 문제 때문에 최소한 이보다는 비용이 많을 것이다.

구조적 동일성을 갖고 있는데 이를 다음 항에서 살펴보자.

### (5) 영어공용화론과 국한혼용론의 구조적 유사성

앞서 말한 바처럼 지난 60년간 국민국가를 이룩하면서 그 자산 중에서 가장 효율적 인프라가 한글전용이었고, 이는 전통적 사상이었던 울타리치기(two-nation)의 사고방식(Gilbert, 1973; Jessop, 1982, 1990)에 대립되는 하나되기(one-nation)의 표현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끊임없이 도전한 두 비주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국한혼용론이며 또 다른 하나는 영어공용화론이다. 물론 그 둘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고 지향에도 차이가 있다. 즉 국한혼용론자의 비판이 글의 정책(즉 한글전용 정책)에 관한 비판이라면, 공용화론의 주장은 말의 정책(즉 국어전용 정책)에 관한 비판이다. 앞것의 이론은 전통적 보수주의에 기초하였고 그 실용적 기반은 일본에 있었다.<sup>59)</sup> 그러나 지난 45년 동안 우리는 그 이론적 근거나 실용적 근거를 뿌리치고도 경제발전을 하고 문화를 발전시킨 경험에 비추어 그들의 주장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반면 말의 정책의 변경을 피하는 주장은 신자유주의로부터 나왔으며 그 신념은 신자유주의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영어사용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경제적인 현상이기에 그 파급효과는 클 것이기 때문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 현상은 국한혼용론자의 주장과 유사함을 보이는데 첫째로 국민국가의 자산을 부정한다는 점에 있어 공용화론과 국한혼용론은 구조적 동일성을 갖는다. 더욱 그들의 주장은 위에서 언급한 통일국가형성을 위한 언어적 인프라를 훼손하려는 함축을 담고 있다.<sup>60)</sup> 즉 공용화론과 국한혼용론자의 주장에 동조한다면 우리는 영어문화권 또는 한자문화권<sup>61)</sup>에 종속되어 국가통일은 고사하고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소속될 것이다.<sup>62)</sup>

그 다음의 문제점은 이들의 주장이 언제나 남과 차별하려는 이른바 울타리치기(two-nation)의<sup>63)</sup> 사고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즉 영어구사능력이 있는

59) 그리하여 일본대사관의 문정담당관은 한글전용정책을 뒤엎으려고 노력하였고 한자를 함께 쓰려고 하는 한국보수주의 운동에 일본 신문들은 '서양에 도취되었던 한국의 언어정책'이 그들의 영향권에 들어왔다고 환호하였다(이규호, 1975). 실제로 필자가 경험한 사실은 국한 혼용에 대한 중국학생들의 평가는 일본의 아류로 생각하고 있었다.

60) 유열의 우리 언어생활에 관한 언급은 의미심장하다(조선일보, 2004.8.18 참조).

61) 구체적으로는 일본을 말한다.

62) 그 보기가 우크라이나라고 한다. 오마이뉴스(2004.12.7)를 참조하라.

윗분들의 우아함과 그렇지 못한 아랫것들의 상스러움이 대비되어<sup>64)</sup> ‘저 높은 분들을 향하여’라는 주장에 점점 더 사회 각 층에서 그 이데올로기가 동화되어<sup>65)</sup> ‘낮은 데로 임하소서’의 이데올로기는 무력화되는 것이다.<sup>66)</sup> 그러나 이런 주장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sup>67)</sup> 서구의 역사를 볼 때 하나되기 (one-nation)의 노력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중과 가능한 한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즉 계층 간에 상호 교류 가능한 언어체계의 확립과 그를 지향하는 사고방식이 보다 합당한 것이다.<sup>68)</sup>

### 3) 이론적 논의의 소결론

우리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국어가 의사소통의 단위를 넘어 국민형성이나 민족통일이라는 정신적 자본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개입의 이유는 국가 정체성이나 공동체의 동질성을 간직하면서 국가와 민족의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정신적 측면과, 모두가 가능한 의사전달을 통한 국가발전이나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경제적 의도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우리 국어의 모습은 엘리트 측면의 접근에서는 임계선을 넘은 듯 한 외국어의 사용과 정체성을 혼드는 수준의 외국어 사용이 일반화 되어가고 이는 외국어의 사용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한편 대중 측면의 접근에서는 엘리트 흉내내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현상은 계층사이의 언어 사용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고 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를 긍정적이라 생각하면 그 접근이 다르겠으나 만약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대중 속으로’의 방법론을 생각해 볼 때이다.

63) 이 논문에서 Two-nation을 ‘울타리치기’로, one-nation을 ‘하나되기’로 뒀다. 울타리치기의 사고방식이란 하나되기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계층과 같은 어떠한 기준을 중심으로 둘로 나누어 차별하는 것을 말한다 (Fraser,1999; Jessop,1982,1990). 이는 전통적으로 한자문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그 자취를 볼 수 있다. 즉 한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중심으로 그 능력이 있는 윗분들의 우아함과 그렇지 못한 아랫것들의 상스러움을 대비시키며 한자쓰기를 주장하고 그들 나름의 울타리를 친다. 대표적으로 현상윤의 주장을 보라 (최현배,1958). 이런 견해는 영어구사능력이라는 관점으로 확대되어 표면화된 것이 오늘날의 영어공용화 문제이다.

64) 국한혼용론자들이 언제나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를 이야기하고 일상용어와 전문학술용어를 주장하는 (민현식, 2005; 남광우,1995) 현상도 이에 기인한다.

65) 이 현상의 심각함은 학생교류의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영어권 이외의 나라와의 교류는 인기가 없고 학생들에게 인기있는 곳은 영어권이다. 이 현상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기초한다고 한다 (김성구 등, 1998).

66) 이와 관련하여 관심을 들만한 관점은 영어격차의 문제인데 이에 관하여는 동아일보 (2005.10.3)를 참조하라. 아울러 이른바 아랫것들의 언어도 주목을 하여야 한다. 요즘의 언어 중에서 씹박하다, 맛이 갔다 등의 표현이 쓰이고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어휘의 부족문제를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언어를 표준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도 검토하여야 한다.

67)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길버트(Gilbert,1973), 프레이저(Fraser,1973) 등 참조.

68) 이와 관련하여 앞서 소개한 노회찬 의원의 지적은 중요한 방증이 될 수 있다 (한겨레, 2005/10/10 참조).

국어책임관 제도는 임계선을 넘은 듯 한 외국어의 사용 현상을 교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국어책임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 III. 국어책임관 제도

#### 1. 언어공동체와 언어의 내재화 그리고 임계선

##### 1) 국어내셔널리즘인가 국어공동체의 발전인가

영어는 세계를 시장으로 하는 언어로 한국어나 한글에 비해 그 가진 힘이 훨씬 강하다. 국어내셔널리즘을 비판하던 국어공동체의 보존에 관심을 두는 이점에서는 일치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일부 논자들은 국어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국어운동단체나 관련 학문 분야의 노력을 국어내셔널리즘이라 주장한다. 우선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자.

현재 세계에 이산해 있는 총수 약 600만명의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모어와 모국어의 상극으로 고통받고 있다. 한편 한국에는 이주 외국인 노동자 등 많은 정주 외국인이 살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살게 된 외국인 여성도 늘고 있다. 이런 추세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지금 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사는 사람들에게 제일 조선인이 일본에서 겪은 것과 같은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모어와 가져온 문화를 대등한 것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사회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면, 그것은 조선어는 물론이고 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영어, 그리고 언젠가는 베트남어도 공용어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그런 사회다. 그런 가장 열린 사회에서 각각의 구성원을 묶어주는 것은 식민지 지배를 받은 역사의 기억과 그런 역사를 피해자로서는 물론이요 가해자로서도 다시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모럴이다. 이 유토피아 실현을 막는 장애는, 한국의 경우엔 먼저 국민 다수의 무의식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국어 내셔널리즘이라 할 수 있다 (서경식/도쿄경제대 교수·성공회대 연구교수).

같은 관점이지만 세계화의 측면에서 국어내셔널리즘을 비판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1998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불어닥친 영어공론화가 그것이다. 영어 공용어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세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수이며, 기본적인 생존수단이라 말하고 있다. 어느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대학의 강의를 (심지어 국어 과목까지) 영어로 강의하겠다는 방침이 그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영어가 아니면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복거일을 들 수 있다.

세계화 시대의 국제어인 영어를 우리의 모국어로 삼아 앞으로 출현할 '지구제국'에서는 중심부로 진출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영어를 당장 우리의 모국어로 만드는 불가능하므로, 잠정적으로 영어를 한국어와 함께 우리의 공용어로 삼은 후에 궁극적으로는 모국어로 삼아야 하며, 민족어인 한국어는 다른 민족어와 함께 장차 '박물관 언어'가 될 것이지만 이는 전문가들이 연구, 보존하면 된다는 의견을 펴력했다 (복거일, 1997:20).

이상의 주장은 전체 우리 사회의 주류로 자리잡고 있고 특히 시장주의자나 세계화를 화두로 삼는 이들에게는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은 한학성에게서 볼 수 있다.

복거일의 주장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과연 지구제국이 출현할 것인가? 이런 주장은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구제국이 출현해도 지구제국 공용어가 반드시 영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과연 중심부만이 살길이며 주변부는 살길이 아닌가? 주변부가 되어야만 민족적 자긍심이 될 수 있을까? 지구제국 출현과 주변부라는 의미도 연관성이 별로 없다.

특히 '공용어' 개념을 통하여 공용어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판한다. 미국도 영어가 공용어가 아니다. 미국에서 공용어 개념은 영어를 미국의 유일한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대다수 국가 다양한 언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과연 영어가 공용어가 되면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 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공용어가 되어야 하는가?

사실 공용어는 한 국가 안에 여러 민족이 공존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민족은 공용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영어를 하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한국사람은 없다.

한학성은 복거일의 영어 공용어론을 기본적으로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잘못하는 이유가 영어공용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전제 말이다. 한학성은 영어를 잘못하는 이유를 영어 공용어가 아니라 우리나라 영어 교육 문제라 말한다. 영어 교사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공용어의 선행이 아니라 영어 교육이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됨을 말하고 있다.

영어 교육 개혁은 영어 시간은 영어로 가르쳐야한다. 영어 발음, 영어와 접촉 시간을 늘리는 방법들이 있다. 영어교사가 영어 발음 하나 정확하게 구사하지 못하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교육정책이다 (OhmyNews, 2007.10.24).

그러나 어느 지점을 넘을 경우는 내재화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다음 글을 보자.



미국·일본·중국 등지에서 한국으로 지식이 이동하는 정보유통 체계로 인해 한국어가 외국어에 의해 계속 오염되고 있다. 이는 주로 영어·일어·중국어 서적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어 오염문제는 주로 외래어 남용이라는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외래어 남용보다도 더 본질적인 문제는 한국어 문법의 파괴에 있는 듯하다. 그중에서 그동안 제대로 지적되지 않은 두 가지의 문제점만 다루어보기로 한다.

첫째, 한국어 어순의 파괴가 미세하게나마 일어나고 있다. 한국어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목적어+술어>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다음 문장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질적인 구조가 한국어 문장에 침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한국 대통령의 방중을 환영했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장이다. 이 문장은 기본적으로는 <주어부+목적어부+술어부>의 어순을 띠고 있다.

그런데 이 문장 속에는 <목적어+술어>가 아닌 <술어+목적어>의 구조를 이룬 부분이 있다. 영어식으로 말하면, <동사+목적어>의 어순을 가진 부분이다. 바로 ‘방중’이라는 부분이 그것이다.

순서대로 하면 ‘방문하다+중국’이 되는 이 표현은 기본적으로 영어식 혹은 중국어식 표현이다. 정통 한국어 문법대로라면, 이 표현은 “중국 정부는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환영했다”가 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특히 중국어나 한문 문장을 번역하면서 원문 표현을 그대로 옮겨 놓은 데에서 기인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중국 방문’보다는 ‘방중’이 더 짧고 간편하다는 실용성 등이 작용하여 한국인들이 이런 표현을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방중’이 한국어 문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그 뜻을 이해하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이것은 관용적 혹은 습관적 이해에 불과할 뿐, 과학적 이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표현은 한국어의 과학화에 지장을 줄 것이다.

아직까지는 <주어+목적어+술어>라는 기본 구조가 흔들리지 않고 있지만, 이처럼 미세하게나마 <주어+술어+목적어>라는 영어 혹은 중국어 문법의 요소가 한국어 문장 속에 서서히 침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영어의 전치사(preposition) 혹은 중국어의 개사(介詞)에 해당하는 요소가 한국어 문장에 침투하고 있다. 전치사나 개사는 명사나 대명사의 앞에 붙어서 다른 품사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품사다.

전치사의 예를 들면 잘 알고 있다시피 to나 for 또는 on 등을 들 수 있고, 개사의 예를 들면 대(對)·중(從)·재(在)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어에서 ‘뚜이’로 발음되는 對는 ‘~에 대하여’, ‘충’으로 발음되는 從은 ‘~로부터’, ‘짜이’로 발음되는 在는 ‘~에서’의 뜻을 갖고 있다.

이 중에서 현재 한국어에 이미 침투한 것은 영어의 for나 to 혹은 on에 상당하는 중국어 對(對)다. 다음 문장에서 그 실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모든 한국인들이 이런 표현을 아무 의심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 문장은 한국어에서는 이질적인 영어 전치사 혹은 중국어 개사의 요소를 담고 있다. ‘대북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북’이라는 명사 앞에 전치사 대(對)가 붙는 것은 한국어 문법에서는 이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위 표현을 한국어 문법으로 순화하면 다음과 같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정책’ 혹은 ‘북한 정책’이라는 한국식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대북정책이라는 표현을 쓸 때보다도 음절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는 동시에 ‘폼’이 안 난다는 문제점이 있다.

간결한 명사를 만드는 점에서만큼은 중국어를 따라갈 수 있는 언어가 드물 것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간편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어 문법의 근간을 파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언급한 어순 파괴라든가 전치사 유입 등의 요소는 어떤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까? 여기서 파생되는 중요한 문제점으로 두 가지만 언급하면,

① 사고체계와 언어체계의 통일성을 기할 수 없다.

언어체계는 단순할수록 좋다. 또 언어체계는 사고체계와 일치할수록 좋다. 그런데 <주어+목적어+술어>로 된 문장 속에서 <주어+술어+목적어>라는 이질적 구조를 접하게 되면,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주어+술어+목적어>로 된 부분을 <주어+목적어+술어>로 변경하는 또 한 번의 불필요한 사고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한 번만 사고하면 될 것을 두 번 사고하게 되는 것이다.

‘방중’이나 ‘대북’ 등의 표현은 글자 수를 줄이는 면에서는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머릿속에서 또 한 번의 사고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사실은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②세대 간의 정보전달을 저해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어 문법 속에 이질적이고 파괴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이 언어를 사용하는 21세기의 한국인들은 별 어려움 없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영어에 대한 기초 이상의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중국어를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의 한문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인의 후손들이 몇 백 년 혹은 몇 천 년 뒤에 지금의 문장을 읽게 되면 ‘방중’이나 ‘대북’ 같은 이질적인 요소에 혼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날의 한국인들처럼 영어나 중국어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먼 훗날의 후손들이 오늘날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두 가지를 포함한 한국어 오염의 문제점들은 몇몇 사람들만의 노력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다. 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안다 해도, 자기 혼자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한국인 전체의 의식적 노력에 의해서만 고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한, 이런 문제를 고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한국어와 외국어의 교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언어 간 교류를 통해 한국어의 부족한 어휘를 보충할 수도 있고 한국어 문법 속의 비과학적 요소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교류가 한국어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영어·일어·중국어 등의 영향을 받아 잡탕 언어가 되고 있는 한국어를 순화시키려면, 한국어 문법에 맞는 문장을 쓰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지식을 창조·개발하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외국어 번역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Ohmynews, 2007.10.1.).

더욱이 영어에 대한 노력이 품격있는 영어사용이 아니라 이른바 콩글리쉬의 양산과 알맞지 않은 영어의 일반화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래의 기사를 보자.

얼마 전 아주 웃기는 광고를 발견하고 혼자 큰 소리로 웃었다. 어느 유명 회사가 새로 내놓은 전자사전의 이름이 '리얼딕'이었기 때문이다.

이 이름은 영어로 '리얼 딕셔너리(Real Dictionary)' 즉, '진짜 사전'을 줄여서 만든 것 같다. 만일 미국인들이 이것을 본다면 배꼽을 잡고 웃을 것이다. 왜냐하면 '딕(dick)'은 남자성기(penis)를 나타내는 속어이기 때문이다. 굳이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리얼딕(real dick)'은 '진짜 XX' 정도가 된다.

이같은 번역을 감안해서 광고를 보면 이제 여러분도 웃음을 터뜨릴 것이다. 여학생이 "내게 맞는 '리얼딕'은?"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본래대로 '리얼 딕셔너리'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텐데, 멸칭한 '딕셔너리'를 '딕'이라고 줄이는 바람에 웃기는 상품명이 되고 말았다.

짧은 실력 가지고 영어를 함부로 쓰다가 요절복통할 상품명을 지어낸 사례는 '리얼딕' 말고도 많다.

미국 NBC-TV의 <투나잇 쇼>에서 웃기는 이름을 가진 외국 상품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어느 한국 식당 광고가 나왔다. 이 식당은 '만두'를 발음 그대로 영어로 옮겨 'ManDoo'라고 써놓았고, 이를 본 방청객들은 폭소를 터트렸다.

이 단어를 미국인들은 '맨 두(Man doo)'라고 읽을 것인데, 'doo'는 '똥'이라는 뜻이다. 즉, 이 한국 식당의 '만두'는 '사람똥'이라는 음식이 된 것이다. 이 경우 만두를 영어로 나타내려면 '코리안 덤플링(Korean dumpling, 한국 고기만두)'라고 하면 무난할 것이다.

참고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푸 비스킷(Pooh Biscuit)'라는 일본제 과자나 '마이 피(My pee)'라는 일본 화장품도 소개됐다. 각각 '똥 비스킷' '내 오줌'이란 뜻이 된다. 러시아제 합성세제 중엔 'BARF'라는 것이 있었는데, 영어로는 '토한다'는 뜻이다.

또한 영어로 쓰면 곤란한 뜻이 되는 상호로는 기아자동차의 '기아(KIA)'가 있다. 이는 'Killed In Action' 즉, 전쟁에서 죽은 전사자를 표시하는 약자로 많이 쓴다. 이라크전쟁에 참전한 군인이나 그 가족들이 재수없다고 'KIA' 차는 사지 않을 것 같다. 이미 상표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바꾸기 아까우면 'Kia'라고만 써도 훨씬 나을 것이다.

꼭써 성을 가진 의사가 간판이나 명함에 자기 성을 영문으로 'Kwak'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말리고 싶다. 미국인들이 '쿠악'이라고 발음하면서 폭소를 터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Kwak'의 미국식 발음은 'quack(돌팔이 의사)'과 같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국어능력이 저하되고 있음은 사실로 입증되고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아래 기사를 보자.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인터넷 메신저 사용 등으로 인해 자신의 국어능력이 입사 당시에 비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취업포털 커리어가 근무경력 1년 이상 직장인 2천57명을 대상으로 국어사용능력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1%가 '입사 당시와 비교해 볼 때 국어사용능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렇게 여기는 이유로 직장인들은 '인터넷 메신저 대화로 인한 비문의 일상화'(48.1%)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국어보다 영어를 중시하는 풍조'(21.1%),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 작성'(20.7%) 등으로 국어 능력이 퇴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국어능력 중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쓰기/말하기(29.1%), 어휘력/문법(28.3%), 창의적 언어 능력(23.9%), 국어 교과의 교양적 지식(12.3%) 등의 순이었다.

또한 직장인들은 국어와 관련된 업무 능력 중 '기획안/보고서 작성 능력'(41.0%)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라고 여겼으며, '프레젠테이션 능력'(26.9%)과 '대인과의 커뮤니케이션'(25.0%) 등에서도 자신의 능력 부족을 느끼고 있었다. 평상시 외래어나 외국어의 사용빈도가 사용빈도가 '매우 높다'는 응답은 23.5%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용어나 축약어 등의 사용빈도가 '매우 빈번하다'는 응답도 22.6%로 조사됐다.

한편 업무상 커뮤니케이션 방식 중 입사 당시와 비교했을 때 빈도가 가장 높아진 부분은 이메일(26.2%), 인터넷 메신저(23.8%), 직접대면(22.1%), 지면서식

(14.2%) 등의 순이었다.

커리어 김기태 대표는 "인터넷 메신저나 컴퓨터 문서작성 등 업무환경의 디지털화로 직장인들의 국어사용능력이 낮아지는 추세"라며 "외래어나 축약어를 자체하고 올바른 국어사용 문화를 정착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

문득 지난 여름의 일이 떠올랐다. 오랜만에 한국을 찾은 친구인 일본의 오다카 교수를 맞아 나는 그와 함께 남한강가에 있는 서재에서 며칠을 보냈다. 여주와 이천이 가까웠기 때문에 느릿느릿 시골길을 달려 세종대왕릉에도 가고 명성황후의 생가도 찾아갈 수 있었다. 옛날 기법으로 옹기그릇을 구워내는 금사토기 가마터도 둘러보고 저녁 무렵에는 비닐하우스가 늘어선 원두막에서 참외를 꺾아먹으며 더위를 달래기도 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일본으로 돌아간 그에게서 편지가 왔다. 한국사회에서는 거의 사라져 버린 편지문화가 아직 일본에는 남아 있다는 것이 이럴 때는 즐겁다. 함께 지낼 수 있었던 며칠 동안의 여행에 감사한다는 말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적고 있었다.

“한자도 영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며칠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은 특히 저에게 인상 깊은 여행이었습니다.”

나는 전연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랬구나. 우리의 거리에서 한자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나 또한 잊고 있었구나. 그가 생각할 때 한국은 분명 외국이었는데, 영문글자가 거의 없는 곳에서 며칠을 보냈구나. 그때 그의 편지를 접으며 생각한 것도 우리의 삶에 자리잡고 있는 언어의 힘이었다.

작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언어를 존재의 형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언어가 나에게서는 호미며 삽이며 낚시인 것이다. 내 밭과 들판이 바로 언어인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자면 최근 우리 문학과 사회에 몇 가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하나가 언제부터인가 문학언어가 일상의 생활언어보다도 뒤쳐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 사회의 미세한 부분들을 집어올리고 물밀에 가라앉아 있는 정서를 끌어올리는 역할에서 문학이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다.

오히려 문학이 담아내는 언어가 일상언어에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마저 지울 수 없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그 일상언어가 문학언어에 침투되어 언어파괴라는 치명적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표징으로 나는 언제나 그 사회의 언어와 범주를 바라보고는 한다. 가장 적나라하게 그 사회를 단층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범주

는 언제나 그렇듯 그 사회의 병리현상을 이해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일본에 범람하는 성범죄나 유괴, 살해범죄를 이해(?)하지 않고는 일본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사회를 이해하자면 저 술한 사기범죄와 투기범죄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언어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쓰이는 말의 상스러움과 천박함은 바로 우리 사회의 천박함 바로 그것이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이 한국어의 위기는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 언어와 범죄를 보면 그 사회를 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해방 이후 이어져 온 한글전용 정책에 걸맞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토종 말을 다듬고 찾아내 써 왔는가 하는 반성이다. 그래도 반가운 현상은 최근 우리 토종 말을 찾아내고 다듬는 일들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터체인지라는 말 대신 나들목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나들목, 나가고 들어오는 길목이라는 얼마나 고운 우리 말인가? 그래서 전국에는 배가 드나들던 길목을 가리키는 배나드리라는 아름다운 지명을 가진 곳이 많이 있다. 서클이니 클럽이니 하는 말 대신 동아리라는 말이 자리잡았듯 사회생활을 의미하는 모듬살이라는 우리말도 있다.

거의 광신도에 가까운 한글전용론자 한 분을 나는 알고 있다. 조금 과장하자면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려면 옆에 통역이 있어야 할 정도다.

이분은 만년필을 ‘줄줄붓’이라고 말한다. 잉크가 줄줄 흘러나온다는 뜻이란다. 그래서 볼펜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니까 그건 ‘돌돌붓’이란다. 이 사람에게 경주의 불국사는 ‘부치나라절’이다.

기가 막힌 것은 이 사람이 군대를 ‘싸우리’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육군은 ‘물싸우리’, 해군은 ‘물싸우리’, 공군은 ‘하늘싸우리’다. 그래서 해병대는 무어라고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해병대는 ‘물물싸우리’라는 것이었다.

언젠가 이 덕에 부인의 친구가 전화를 했을 때였다. 마침 부인이 없어서 이분이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아무개는 학교에 잘 다니고 있지요” 하고 아들의 안부를 물었다. 그러자 마침 아들이 얼마 전 군에 입대했기에 “그 녀석 지금 싸우리 갔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며칠 후 부인의 친구가 부인에게 물더라는 것이다.

“아니 그집 아들은 중동에는 뭐하러 갔어?”

싸우리를 사우디아라비아로 알아들었던 것이다. 한글전용도 이쯤 되면 이것 또

한 언어파괴에 지나지 않는다.

국적불명의 외래어 남용도 그 도를 넘어서 지 오래다. 특히 한 사회의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에게서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그 말이 과급시킬 악영향을 한 번쯤 생각이나 하고 사석에서나 쓸 말을 공공연하게 내뱉는지 어이가 없을 정도다.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이번에 내가 미국 가서 ‘오버’ 좀 했지” 같은 황당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정원공화국이 된 지 오래다. 전국 어디를 가나 정원으로 가득 차 있다. 강 이름치고, 도시 이름치고 정원이 아닌 곳이 없다. 전국 모든 강과 산, 도시의 가든화다. 한강가에는 ‘한강가든’, 춘천에 가면 ‘소양강가든’, 공주에 가면 ‘금강가든’이다. 하다못해 ‘정원가든’도 있다. 이제 국어사전은 ‘가든’이라는 이 시민권을 얻은 말을 새로 올리면서 이렇게 뜻풀이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가든- 주로 야외에 있으며 소·돼지고기를 마구 구워 먹는 곳.’ 그렇다 보니 ‘커피는 셀프입니다’를 넘어 ‘대형슈퍼’니 ‘폭탄세일’이니 하는 말이 아무 거부감 없이 우리 사이에 자리잡아 버렸다.

소위 지식인사회에서 쓰이는 다듬지 않은 글도 우리의 언어생활을 우울하게 만든다. 어느 문학평론가의 글에서 ‘역사적 사실성’이라는 표현에서 시작된 문장이 이어지면서 ‘적’과 ‘성’이 6번이나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어디 그뿐인가? 아무렇게나 서재의 학술서적 하나를 뽑아 보니 이런 글도 있다.

‘모든 시민은 복지를 사회적 시민권의 하나로써 향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수급을 대가로 무엇인가를 강요할 수 없으며 구빈원이 폐지된 오늘날 노동은 항상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누구의 글인가 살펴보니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온 어느 대학교수의 글이다.

지난 학기 학생들과 함께 대학생 사이에서 많이 쓰이는 속어를 조사해 본 결과가장 빈도 높게 쓰이는 말이 불행하게도 ‘씨발’ ‘존나’ ‘짜증’이었다. 굳이 말을 만들어 보자면 시험을 망치고 나서 하는 소리가 ‘씨발, 나 지금 시험 망쳐 존나 짜증난단 말이야’가 된다. 이것은 남학생이 아닌 여학생이 내뱉는 말이다.

‘언어채색’이라는 낯선 주제로 이어진 그날의 모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옆 자리에 앉았던 미국인 수사 한 분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

“그렇게 점점 언어가 황폐화하는 것은 마음이 황폐해지기 때문 아닐까요?”

그 말에 우리는 동의했다. 언어의 황폐화는 우리 마음의 황폐화 바로 그것이라고.

남편을 잃은 어려움을 김순덕 교수는 ‘5년 전 오늘의 황량한 이별’이라고 슬회

하면서 그 자리를 “5년 후 오늘에도 주재 있는, 작지만 훈훈한 만남과 나눔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언어의 채색이 아니라 그 이전의 문제들, 인터넷을 진원지로 급속도로 조여드는 언어파괴와 황폐화를 어떻게 막아내야 할 것인가?

작은 것의 소중함, 그 힘을 우리는 잊고 산다. 말, 것처럼 힘 있고 소중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오늘도 잊고 산다.

월간중앙 2005년 02월 17일 352호 / 2005.03.10 14:03 입력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품격있는 영어 구사가 아니라 영어 또한 파괴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현상을 이미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고 아래는 그 중 두 가지의 경우이다.

그러나 영어는 모국어 사용자의 수는 중국어와 힌두어만큼은 되지 않지만 외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다. 영어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해 전 세계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약 19억명이 된다고 한다. 영어를 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외국어로 쓰는 것이 현실이다. 20세기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 중 9%가 모국어 사용자였다면, 2050년엔 5%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즉 사용자는 늘어나지만 모국어로 쓰는 비율은 줄어드는 것이다. 아무리 외국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이라도 사소한 점은 잘못하거나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지만, 모국어 사용자는 사소한 점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영국인과 중국인이 서로 한국어를 외국어로 쓸 경우 원래 모국어로 존댓말이 없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나고 친한 사이가 아니더라도 반말을 하는 것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관사나 미묘한 발음 등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공용어가 24개인 인도에서는 다른 민족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인도식 영어인 이른바 '인글리쉬(English)'가 생겨났다. 가끔 인도의 인터넷 사이트를 살펴다 보면 영어를 다른 식으로 쓰거나 힌두어와 많이 섞여서 쓰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간단한 예로 'You are giving me a new phone?'(새 전화를 주는 것이냐)을 'You are gifting me a new phone?'으로 쓰거나, 'Taxi-wallah'(택시운전사), 'Hungry, kya?'(광고에서 볼 수 있는 유명한 표현 - Kya는 질문을 할 때 쓰는 접미사)처럼 힌두어와 섞어 완전히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다.

또 다른 좋은 예는 '토피신'이다. 파푸아뉴기니의 공용어인 토피신은 영어가 변해서 생겼다. 언어가 850개나 있는 호주의 식민지였던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를 쓰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 빠지고 문법도 단순화됐다. 예를 들면 'Where do you want to go'(어디고 가고 싶냐)는 'Yu laik go we?'가 됐다. 모음도 5개밖에 없고, 영어 단어에 자음이 2개 있을 경우 마지막 자음이 빠질 때도 있다. 관사인 'a'와 'the'는 사라진



지 오래다. 단순화된 영어가 아니라 영어 모국어 사용자도 알 수 없을만큼 표현과 사용법이 달라졌다.

엔진이 고장난 차를 계속 밀 때 속도가 높아지면서 언젠가는 밀고 있는 사람보다 더 빨라진다. 영어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모국어 사용자가 줄어들면서 100년 후, 아니 몇십년 후에 모국어 사용자들조차 따라갈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릴지 모른다. '언어의 왕'인듯 한국인들이 앞다뒀 배우고 있는 영어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일보 2006.10.12. 데이비드 맥클라우드  
기사 입력시간 : 2006-08-07 오전 5:39:22 joins

이와 유사한 현상으로 지구촌 영어인 '글로비시'를 볼 수 있다. 아래는 그와 관련한 기사이다

영어는 국제언어로 정착하면서 비영어권 사람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영어인 '글로비시(Globish)'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갈수록 확대되는 영어의 언어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비영어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간단한 영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언어학자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글로비시에 대해 소개했다.

프랑스인으로 IBM의 부사장을 지낸 장 폴 네리에르가 제안한 글로비시는 사용 어휘를 '보이스오브아메리카(VOA)' 등에서 사용하는 1천500개 단어 정도로 제한하고 문법과 같은 형식보다는 의미전달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특색이다. 예를 들어 조카를 의미하는 'Nephew'는 '형이나 누나의 아들(son of my brother or sister)'처럼 쉬운 단어로 풀어서 표현하는 것으로, 글로비시가 원어민들이 듣기에는 거북스러울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비영어권 사람들끼리는 훌륭한 의사소통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글로비시 제안자인 네리에르는 IBM 근무 당시 아시아 출장에 나섰던 한국이나 일본 동료가 동행한 미국직원과 나누는 대화보다 "내가 한국이나 일본 동료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쉽고 효과적이란 사실을 알아챘다"면서 당시 출장을 통해 글로비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비시가 문화나 가치를 전달하거나 문학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언어는 아니지만 다른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이라는 제한된 목적을 위한 실용적이며 효율적인 도구라고 정의하면서 글로비시는 비영어권에서 뿐만 아니라 영어권에서 배워야 하는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위스 연방기술연구원에서 세계화를 연구하고 있는 자크 레비는 국제언어로 사용되고 있는 영어가 원어민들의 언어와는 다르다면서 글로비시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영어 원어민들도 이제는 모든 영어사용자가 자신들처럼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도 영어가 국제언어로 자리 잡으면서 이제는 영어 원어민들도 새로운 환경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는 셈이라면서 영국 정부의 추정처럼 새로운 20억명의 영어 사용자가 나타난다면 다른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영어 사용자가 불이익을 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영어 사용자 확대를 위해 노

력하고 있는 영국정부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영어를 제2 언어로 삼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 영어사용자는 5억명에서 10억명 사이이며 조기교육 등이 이뤄진다면 10년 내에 새로 20억명의 영어 사용자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 2. 언어공동체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

### 1) 임계선과 내재화

현재의 공간적 좌표에서의 한국어와 한글의 위치를 살펴볼 때, 외국어의 공세는 글을 넘어 말의 공세를 의미하고 수용자 측에서는 외국어에 대한 지나친 열기와 맹목적인 성공의 디딤돌로 각인시키는 이른바 외국어 신화가 퍼져있다. 더욱이 세계적인 주류 이데올로기인 신자유주의적 언어정책은 공동체에 기반한 언어정책을 역사의 뒤편길로 내몰고 있다. 한편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어 우리 속에 외국 언어를 포괄하고, 무역 순위로 11위의 경제력이라는 국력의 향상에 따라 우리의 언어가 외국으로 진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즉 국어 속에 외래 요소의 혼합을 막을 수는 없다. 어느 정도까지는 외래 요소가 내재화하여 국어를 살지게 할 것이다. 이는 우리 국어의 역사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문제는 그 외래 요소의 혼합이 갈등유발의 언어로서 기능하는가 아니면 의사소통의 활성화로 기능하는가이다. 그런데 현실 언어생활에서는 점점 계층 간의 갈등 현상이 나타난다. 이른바 지식인의 국어에는 영어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컨대, 톨러런스(tolerance)를 어디까지 주느냐 (폭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

여기서 역기능을 방지하고 순기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기준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의 상태는 외래어와 외국어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표준어 규정에 나오는 정의보다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언어공동체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고 여기서 임계선의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지난날의 국어운동은 임계선을 넘지 않도록 한 운동이었다. 지금도 임계선을 넘지 않도록 국어운동단체를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 임계선을 넘을 가능성이 큰 경우는 ① 신자유주의적 인식에 기초하는 영어공용화론<sup>69)</sup>은 그 파급효과가 크다. 이는 잘못된 엘리트

주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엘리트의 주장이 울타리치기(two-nation)의 사고방식에 기초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즉 영어구사능력이 있는 윗분들의 우아함과 아랫것들의 상스러움이 대비되어 ‘저 높은 분들을 향하여’라는 이데올로기로 점철되는 경우가 있다. ② 심히 일그러진 말과 글(올바르지 않는 말과 글보다 정도가 심한 상태)이나 심히 일그러진 말은 아니지만 교정할 필요가 있는 말과 글은 여기에 속한다. ③ 행정언어의 병리 현상인 Bureaucratese도 임계선을 넘은 언어로 편입된다. ④ 지나치게 뽀내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나 이를 관용화한 말(한자로 표현한 그해의 四字成語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고 적절히 어울리는 언어정책이 필요하다. 즉 언어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개념으로 임계선 측정이 필요하고 임계선 측정을 위하여 의사소통지수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 중 일부는 완전히 우리의 언어생활에 녹아들어 스스럼없이 쓰이는 경우 (여기서는 이를 내재화하였다고 표현 함)에는 임계선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겠다. 이 판단은 각 소속 기관별로 국어책임관이 하여야 한다.

## 2) 국어정책에 국가 간여의 방법

개입의 방법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설정이 필요하고 여기서는 제도론적 관점에 따른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제도는 인간의 행동을 인도하는 준거의 틀로서 기능하는데 국어책임관 제도의 제도론적 의미는 국가의 언어현상에 대한 강력한 개입의 의지 표명하는데 있다. 세계 여러나라의 언어정책을 유형화하면 개입을 전혀 하지 않고 사회에 맡겨 놓는 형(완전방임형)과 국가가 개입하는 형(국가개입형)의 둘로 나눌 수 있고 국가개입형도 국가가 언어정책을 관장하는 기구를 가지지 않고 교육과 연계하는 소극적 개입형<sup>70)</sup>과 언어정책을 관장하는 기구를 가지는 적극적 개입형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완전방임형 많지 않으므로 고려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소극적 개입형과 적극적 개입형을 보기로 하자. 전자의 대표로 미국과 영국을 살펴 보고 후자는 프랑스와 중국을 살펴보자.

### (1) 소극적 개입형

#### 가. 미국의 정책 변화: 영어를 중심언어 (English Only Policy)로 방향 전환

69) 여기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영어사용에 이론적 근거를 두는 경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70) 이전에 우리나라 문교부의 편수국 형태가 여기에 해당한다.

미국의 언어 정책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영어만을 사용하자는 English Only이고, 다른 하나는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도 인정하자는 English Plus이다. 엄격하게 말해서 미국에서 의식적으로 계획되거나 국가적으로 수행되는 언어 정책은 없으며 연방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의사 결정 기구도 없다(조수진 2001.6.25).

오늘 날의 미국의 언어 정책은 미국의 이해 관계와 민주주의적 전통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다. 즉, 모든 사람의 언어 사용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으면서 국가적으로도 경제적 손실 없이 다양한 언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English Only Movement(EOM)과 English Plus라는 두 가지 큰 흐름으로 나타난다.

그 주장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English Only	English Plus
미국은 영어를 쓰는 국가이다.	미국 내에는 수많은 민족이 존재한다.
영어를 통해 미국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의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면 경제적, 문화적 손실이 크다.	다른 언어를 보호함으로써 그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고,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연방정부가 2개 이상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영어를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부추길 수 있다.	영어를 공용어로 만들지 않아도 많은 이민자들이 생활하기 위해 영어를 배워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여러 언어를 인정하는 경우 캐나다나 벨기에, 스위스처럼 국가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영어를 공용어로 법제화하는 조치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분열을 초래한다.

(조수진 2001.6.25).

## 나. 영국의 언어정책

- ① 민간 차원의 운동을 국가가 지원 (Partnership)
- ② Plain English Campaign

국어인 영어를 지키려는 영국의 노력은 세계에서 가장 유서가 깊다. 영국은 이미 1362년에 공용어로 영어만 사용할 것을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을 정도다. 이후 식민지 통치 수단으로 영어를 적극 보급한 결과 지금처럼 세계 곳곳에 영어 식민지의 잔재를 남겼고, 그 식민지 언어가 국제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영어의 종주국인 영국에서조차 영어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부단히 해 오고 있다. 영국은 미국 영어에 동화되어 가는 영국 영어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서 출판된 책을 영국 영어로 바꿔 다시 출판하는 수고와 비용을 기꺼이 부담한다. 영국 영어의 자존심을 지키고 무분별한 언어 사용으로 자국어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세계 언어로 쓰이는 영국 영어는 공영방송인 BBC의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BBC가 사용하는 영어는 영국 영어의 표준으로 그 위상이 높다. 아나운서를 비롯해 MC와 DJ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주요 출연자에게 표준 영어를 사용케 해 방송언어수준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세계적 공영방송으로 영국의 BBC를 꼽을 수 있는데 그것은 BBC방송이 방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영향력 면에서도 세계적 수준일 뿐만 아니라,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언론 본연의 자세와 권력으로부터 휘둘리지 않은 철저한 중립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언어도 표준적이고 정제된 말을 사용하여 신뢰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1926년 라이트 경(卿)에 의해 창설된 BBC 발음국(PRONUNCIATION UNIT)은 올바른 발음을 위한 연구와 인명과 지명에 대한 신속한 표현체계 구축으로 그들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다. 또한 발음이나 강세 등의 원칙이 정해지면 그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데서 BBC영어의 권위가 세워진다고 믿고 있다.

영국 에든버러 대학에서 언어학과 불문학, 음성학을 전공한 GRAHAM POINTON 고문은 표준적인 방송언어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우리는 방송 진행자가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구상의 어떤 사람도 자신의 잘못된 발음이나 부주의에 의한 발음의 약점을 가진 채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발음국에서는 강한 사투리나 비표준적인 억양을 사용하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말과 교양있는 영어를 구사하도록 조언하고 있다.’

BBC는 아나운서 혹은 프리젠티(PRESENTER)라는 명칭으로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뉴스캐스터, MC, DJ 등에게는 표준적인 방송언어를 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프리젠티의 선발기준 또한 방송에서의 적절한 표현능력과 표준영어 사용 여부이다. BBC의 방송언어 못지 않게 표준적인 영어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셰익스피어 극단도 어법과 발음이 부정확한 연기자는 입단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BBC의 언어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각 민족의 특성에 따른 언어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영어는 이제 영국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 캐나다, 아이슬란드, 홍콩, 인도 등에서 사용하는 영어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면서 전 세계에 'BBC영어' 교재 등을 판매하고 있는 BBC WORLDWIDE의 1998년 수익이 8500만 파운드, 한화 1700억원으로 그 중 자체 흑자가 300억원, BBC 본사에 지불한 돈이 1400억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였다.

BBC의 방송언어가 세계공용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지역 사투리와 민족의 특성에 따른 언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BBC영어'라는 타이틀의 프로그램과 서적, 테이프 등의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다. '영어는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세계 소통어이기 때문에 미국영어나 영국영어라는 지역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들의 말에는 대단한 자부심이 깔려있다.

김상준 박사(동아 방송대 교수, 언론학 박사)에 의하면 BBC는 '교재로서의 BBC영어'에서 오락성이 강한 프로그램과 드라마 등에 지역 사투리까지 수용하는 생생한 일상언어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전달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는 보도방송 등에 지역방언이 난무한다면 의사소통에 장애요소가 되기 때문에 강한 사투리나 비표준적인 발음과 억양은 배제하고 있다. 그래서 '방송언어로서의 BBC영어'는 표준적이면서 품위 있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으며, 이 같은 언어정책이 BBC를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에서도 영국의 언어는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으나, 소수 웨일즈 지방에서는 아직도 의무적으로 웨일즈어(웰쉬)를 교육하고 있으며 도로 표지판 같은 표지판 같은 것을 웨일즈어와 영어로 동시에 표시해 둔다. 또한 스코틀랜드에서는 영어와 켈릭어라 불리는 스코틀랜드어(켈릭) 언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리버풀이나 뉴카슬지방은 다른 지방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 또한 사용하고 있다.

문화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고 이민자 후세들에게 그들의 민족 언어, 풍습, 전통을 가르치고 모국과의 왕래와 인적 교류를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다문화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의 다문화

정책은 이민자들에게 거주국 본류에 합류하도록 동기 부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민자들의 민족 정체성 찾기를 부추겨 배타적 집단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빈민가에 몰려 사는 소수민족 집단은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민을 받아준 국가와는 무관하게 행동한다. 영국내 소수민족 중 출신 지역별 최대그룹은 인도이며 그 뒤는 파키스탄, 카리비안 흑인, 아프리카 흑인과 방글라데시이다. 중부 도시 레스터Leicester는 전체 인구에서 유색인수가 백인수를 추월하는(non-white majority) 최초의 행정구역이 될 것이 확실시 된다. 버밍검(Birmingham), 올덤(Oldham), 그리고 브래드포드(Bradford)도 곧 유색인이 백인보다 더 많은 도시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영국 초등학교만을 보면 소수민족 학생은 20.6%를 차지한다. 초중고생 중 영어를 모국어가 아닌 제 1외국어로 사용한다는 학생도 1997년 7.5%에서 올해는 11%로 증가했다.교과과정 및 자격증위원회(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는 초중고 교사들이 다양한 국가의 어학·문화관련 내용을 가르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새 지침은 교사들이 한국, 파키스탄, 중동, 자메이카 등에서 발행한 책을 더 많이 참조할 것을 권하고 있다. 런던 북쪽 토트햄에 있는 화이트 하트 레인 학교(White Hart Lane School in Tottenham) 재학생은 총 1100명. 올해초 이들이 영어를 제외하고 학교에서나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모두 59개로 조사됐다. 유럽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다양한 ‘멀티 인종’ 학교다. 영국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은 2005년도 이민자 입국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영국 이민자들 사이에서 자녀들에게 고유 언어를 가르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다른 유럽 나라들에 비해 외국어 구사능력이 뒤떨어지는 영국인들의 언어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영국 BBC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유럽연합이 2005년 6월 회원국을 비롯한 29개 나라 사람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이 한 가지 이상의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국 국민 중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사람은 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30%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자들의 모국어 교육은 영국인 전체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국립언어센터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이민자 공동체 내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외국어 수는 60여개에 이른다. 35개는 학교 정규 수업이나 방과후 교실 등 좀더 공식적인 형태로 교육이 시행된다.

국립언어센터는 “현재 영국 어린이 10명 중 1명은 집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말을 한다”고 밝힌다. 영국 어린이들이 구사하는 언어 수는 모두 합

쳐 300여개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다. 연구자들은 “프랑스어나 독일어, 스페인어 등을 쓸 수 있는 학생들과 비교해 중국어, 그리스어, 우르두어(인도 이슬람교도들 사이에서 쓰이며 파키스탄의 공용어)를 쓰는 학생들의 경쟁력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우르두어, 터키어, 중국어, 아랍어, 방글라데시어 등의 유용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벨라 무어 국립언어센터 소장은 “학생들이 집에서 쓰는 언어를 더 잘 구사할 수 있도록 하면 교육적 성취도도 높아지고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닦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영국에 머물기를 원하는 영주권 신청자는 2006년부터 영어와 영국 생활에 대한 지식을 검사하는 시험을 의무화했다. 영국 정부는 주권 자격을 더욱 엄격히 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시민권 신청자처럼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서도 이런 시험을 똑같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암 번 이민차관은 “영국에 영구히 살기를 원하는 이주민은 이와 함께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깨닫는게 필수적”이라며 “그들이 사회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우리 사회에 충분히 통합되려면 영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상당한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을 가진 영주권 신청자들은 ‘영국의 생활’에 대한 시험을 치러야 한다. ‘영국의 생활’ 시험은 영국 성공회 수장은 누구인가, 영국 여왕의 공식 역할은 무엇인가 등등 영국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테스트한다. 신청자는 45분 동안 24개 문항을 풀어야 하고, 여기서 최소한 75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험에서 떨어질 경우 다시 볼 수 있다. 영어가 서툰 신청자들은 시험 대신 특별히 개발된 ‘외국어 구사자를 위한 영어’ 강좌와 시민권 강좌를 수료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이민자복지공동위원회의 하비 라흐만 사무총장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영국 내 권리가 다른데 영주권 신청자와 시민권 신청자가 같은 시험을 치른다는 것은 ‘혼란스런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며 “이것은 영주권 신청자에게 추가 장벽을 놓기 위한 정책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2005년 한해동안 영국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18만명에 달한다. 영주권자 중 일부는 영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나머지는 영국에 영구히 거주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영국 어린이들이 7세부터 의무적으로 영어 외에 외국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는 교육 보고서가 발표됐다. 교육부의 의뢰로 영국 학교의 외국어 교육 과정을 검토한 로드 디어링은 2006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0년까지는 모든 어린이가 7세부터 14세까지 외국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독일어,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인도·파키스탄 공용어 우르두어, 중국어 등 소수민족 언어도 외국어 과목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11~14세 학생들은 외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배워야 하며, 15~16세 학생들은 외국어를 필수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된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04년 외국어 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현실을 반영해 15~16세 교육과정에서 외국어를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으로 바꿨다. 그러나 그 이후 중등학교 졸업 자격시험인 GCSE에서 외국어를 택하는 학생이 4분의 3에서 절반으로 줄어들자 “세계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디어링은 이번 보고서에서 정부가 2004년 결정을 뒤집고, 15~16세에게도 외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디어링은 GCSE에서 외국어를 택하는 학생이 계속 줄어들 경우에는 15~16세 학생에게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외국어 의무교육을 부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앨런 존슨 교육장관은 “언어를 일찍 배우면 배울수록 더 좋다”며 “7세부터 14세까지 외국어를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은 7년 동안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 지식,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7세 조기 교육론을 지지했다. 영국 중등학교는 2006년부터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외에 중국어도 제2 외국어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영국 교육부는 커리큘럼 개편안에서 11~14세 중등학교 학생들이 필수과목으로 배우는 제2외국어를 유럽연합 언어에 한정하지 않고, 중국어, 파키스탄·인도 공용어인 우르두어와 벵골어, 아랍어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중국어를 교과 과목으로 채택하는 학교들이 잇따라 생기고, 자녀의 중국어 학습을 원하는 부모들이 증가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프랑스어나 독일어보다 중국어가 더 유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 개편안은 2008년 9월 학기부터 공립학교 교육과정에 도입된다. 앨런 존슨 교육장관은 “세계 경제에서 중국어나 우르두어는 유럽연합 언어만큼 중요할 수 있다”며 “젊은이들은 언어 습득이 취업 기회를 확대해주고, 고용주의 마음을 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영국이 유럽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선데이 타임스 신문은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미 2004년에 14~16세 학생들의 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를 필수로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함으로써 유럽언어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 이후 중등학교 졸업 자격시험인 GCSE에서 프랑스어를 택하는 학생의 수는 거의 3분의 1쯤 줄어들었고, 독일어를 택하는 학생 수도 9만명으로 줄었다.

2007년부터 영국 중등학교 졸업 자격시험인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의 시험과목 중 하나로 한국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영국 중등학교에서 한국어 과목을 제2외국어 과목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됐고, 2007년 5월부터 GCSE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은 한국어를 선택해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영국은 중고등과정 11학년을 마친 뒤 치르는 GCSE와 이후 2년 간의 대학준비과정 후 치르는 A-레벨 시험 결과를 종합해 대학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번에 GCSE 시험 과목에 한국어가 포함됨에 따라 영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들은 그동안 제2외국어로 선택해 왔던 불어, 독어 등을 한국어로 대체할 수 있게 돼 입시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한국어 시험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IGCSE’ 시험이라서 영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영연방 국가 학생들에게까지 혜택이 미칠 전망이다. 주영한국대사관 이화성 교육원장은 “GCSE 한국어 시험이 가능해짐에 따라 영국 중등학교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학생들이 대학 진학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고, 한국어 학습 동기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영어종주국으로서 국어인 영어를 지키려는 영국의 노력은 세계에서 가장 유서가 깊다. 방송언어로서의 BBC영어’는 표준적이면서 품위 있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으며, 이 같은 언어정책이 BBC를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영어능력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주권 자격을 더욱 엄격히 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시민권 신청자처럼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서도 영어와 영국 생활에 대한 지식을 검사하는 시험을 똑같이 실시하고 있다. 영국 교육부는 커리큘럼 개편안에서 11~14세 중등학교 학생들이 필수과목으로 배우는 제2외국어를 유럽연합 언어에 한정하지 않고, 중국어, 파키스탄·인도 공용어인 우르두어와 벵골어, 아랍어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국 중등학교에서 한국어 과목을 제2외국어 과목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됐고, 2007년 5월부터 GCSE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은 한국어를 선택해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다문화 소수민족언어 정책이 2001년 9·11 테러후 6년이 지난 지금은 거주국 동화가 중대 이슈로 등장했다. 최근 영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은 7/7 테러뿐만 아니라 유색인종의 증가와 노동당 정책의 수정이라는 객관적인 조건들의 변화에 의해 담론차원과 실제 정책의 차원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기존 다문화주의 정책의 급진적 폐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집권 노동당과 인종평등위원회는 기존 다문화주의 정책에 더

해 이주민들이 영국사회의 주요 ‘가치’들의 충실한 준수라는 의무를 강조하는 ‘통합’정책의 결함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2) 적극적 개입형

### 가. 프랑스형

앞서 언급한 바처럼 약자의 경우는 시장에서 강자와 경쟁하면 살아남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개입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보기를 프랑스어에서 찾을 수 있다. 프랑스어도 영어의 영향으로 약자의 위치로 전환되었다.<sup>71)</sup> 그 전형적 보기가 프랑글레였고<sup>72)</sup> 이에 대한 반응이 국가개입의 요구였다. 그 결과, 국가기관의 설립과<sup>73)</sup> 프랑스어 사용법 (바로리올법)의 제정이다. 이 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영어의 강자적 위치와 프랑스어의 약자적 위치는 계속 강화되어 새로운 법의 제정으로 이끌었다. 이 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프랑스어 사용법 [투봉(Toubon)법]이다.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어사용법 시행령과 다수의 관련 훈령을 제정함으로써 성공적인 시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송기형, 2005)고 한다.<sup>74)</sup>

프랑스어에서 왜 국가개입이 필요한가? 영어로부터의 보호를 들 수 있다. 어떻게 국가가 개입하는가? 법령으로 하고 있다. 이 시사점은 무엇인가? 약자의 위치에 있는 (국가의) 언어는 어떤 보호망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고 그 보호망이 사라지면 생존에 위협을 느낄 수 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더 와 닿고 있으며 다른 관점에서는 다른 언어권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노출되고 있다는 보기이다. 대표적으로 보호망을 유지하려는 규범화와 외부의 영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화와의 관계이다. 프랑스의 경우 국가단위로는 어문규범을 어느 정도 강요할 수 있지만 상위의 정치체제인 EU를 비롯한 다른 국제기구로부터의 압력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다. 더 나아가 규범이 상위의 정치체제로 인해 그 작용을 못할 때 규범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우리 나라처럼 약자의 위치에 있는 국가가 주목해야 할 일이다.

71) 송기형에 따르면 이는 2차세계대전 이후라고 한다 (송기형, 2005).

72) 송기형(2005)에 따르면 이는 영어투성이의 프랑스어라고 정의하는데 필자가 보기엔 본문에서 언급한 영어 섞어쓰기의 첫째 단계를 말하는 것 같다.

73) 1966년 3월 31일자 법령에 의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프랑스어 수호와 확산을 위한 고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프랑스어사용법안이 1975년 말에 양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1975년 12월 31일에 공포되었다. 이 법이 바로리올(Bas-Lauriol)법인데 9개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송기형, 2004).

74) 이 부분의 기술은 송기형 교수의 논문 (2005)과 저서 (2004)에 기초하여 요약하였다.

## 나. 중국형

중국은 효율적인 정치·사회적 통제와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푸통화를 보급하고 대중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0년까지 전 국민이 기초적인 표준어를 구사할 수 있게 하고, 이어 21세기 중반까지 각 지방은 물론 소수 민족들까지도 표준어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에서는 시 공무원들에게 푸통화를 의무적으로 익히라는 지침을 내리고 시험을 봐서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해고하는 등 강력한 표준어 보급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 대도시들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2001년 제정한 ‘국가통용언어문자법’에 따른 것으로 국가기관 근무자들은 의무적으로 표준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중국이 사회 통합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온 ‘푸통화(普通話)’ 사용 캠페인이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중국 교육부와 한국의 국립국어원에 해당하는 국가언어위원회가 지난 5년간 전국 31개 성·시·자치구 주민 47만여명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인 13억명 중 불과 53%만 중국 정부가 지정한 표준어인 만다린을 구사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언어위원회는 또 표준어인 푸통화를 구사할 수 있는 53%에 속하는 많은 중국인들도 자주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일보, 2005.5.31).

이상에서 보듯이 어느 정도 개입이나 하는데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모든 국가는 언어에 개입한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바로 국어책임관 제도가 그것이다. 이제부터는 국어책임관 제도를 살펴보기로 하자.

## 2. 국어책임관 제도

### 1) 행정언어와 국어책임관<sup>75)</sup>

행정언어는 행정과 언어의 합성어이므로 행정의 속성과 언어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먼저 행정이란 권력을 배경으로 한 정책형성과 그 구체화라고 定義되므로 (박동서, 1984:46) 행정언어는 권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Ng & Bradic, 1993; Fairclough, 2001). 이런 속성은 행정언어에 권위를 부여하게 된다. 나아가 행정언어가 지향하는 바가 공공성이나 공익성에 있으므로 이들도 행정언어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구성한다 (Erreygers & Jacobs, 2005). 또 행정언어를 어떤 지시물(referent)에 부여하고 그로 인해

75) 이 부분은 필자의 논문 ‘행정언어에 관한 연구’ (행정연구원, 2007.1.30)를 옮겨 실은 것이다.

일단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꾸는데도 어떠한 행정절차를 요구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를 형성적 속성 (조연홍,2000:35)에서 유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76)</sup> 한편 언어에서 유래하는 기능으로서 행정언어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어떤 당사자’(이른바 話者)가 ‘다른 당사자’(이른바 聽者)에게 매개체를 통해 ‘어떠한 내용’을 전하는 과정으로 (심재기,1995:33-39), 그 기능은 개인의 내적 상태를 표현(expressive)하는<sup>77)</sup> 표출 기능, 정보를 알려주는 신호기능, 외부세계에 있는 상태나 상황을 묘사하는 묘사기능, 설명(explanations)이나 논증을 제시하거나 평가하는 논증(argumentative) 기능이 있다 (이성범,1999:114-116; Leech,1983:48-56; Popper,1972).<sup>78)</sup> 행정언어의 구성요소로서는 당사자 (행정언어의 주체인 행정당국과 그 상대방인 국민이나 지역주민), 행정언어의 당사자들을 연결하는 매개체인 언어, 그리고 행정언어에 영향을 주는 행정문화의 셋으로 잡는다 (심재기,1995:33-39). 먼저, 연결하는 매개체인 언어부터 설명하자.

언어는 문화의 도구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Leech,1983:48-56; 최현배,1970) 그 소속 사회의 성격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김민수 외,1995). 예컨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8가지의 용어가 존재하는데<sup>79)</sup> 어떤 용어나 언어가 선택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의식세계를 나타내고 언어를 표현하는 당사자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언어의 연구도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 행정언어를 행정언어 그 자체(Bureaucratese in itself), 행정언어의 역사성과 그 변용의 둘로 나누어 설명한다. 행정언어는 언어에 기초하므로 언어의 특성을 그대로 응용할 수 있고, 언어학의 지식이 이용될 수 있다. 행정언어가 중요한 이유를 음성언어와 의미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먼저 음성언어를 살펴보자. 음성언어가 무엇이며 그 개념이 어떠한지 등의 설명은 여기서는 군더더기 말에 불과할 것이다. 문제는 전통적으로 행정언어는 그 의미성에 치중하여 음성언어에 관

76) 조연홍(2000:35)은 어떤 지시물(referent)에 행정언어를 부여하는 기능은 서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행정언어를 연구하는 데는 이 기능이 필수적이므로 형성적 속성에 이를 추가한다.

77) 여기에 속하는 보기 가운데 자연대상 (physical objects: World I)을 표현하는 기능이 地名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성범,1999:114-116; Leech,1983:48-56).

78) 심재기(1995:33-39)는 언어의 기능을 정보적 기능, 표출적 기능, 명령적 기능, 친교적 기능, 관어적(關語的) 기능, 미학적 기능으로 나누고 있다. 한편 Leech(1975)는 관어적 기능을 제외한 다섯을 들고 있다.

79) 이들은 미국에 저항하는 항미(抗美), 혐오하는 혐미(嫌美), 반대하는 반미(反美), 폄하하는 폄미(貶美), 이용하는 용미(用美), 연대하는 연미(連美), 찬성하는 찬미(贊美), 숭배하는 숭미(崇美) 등이다. 흥미있는 것은 이 용어 분석이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중앙일보,2006.6.27). 또 倭食, 日食, 和食이나 倭王, 日王, 日皇, 天皇을 서로 비교해 보라. 이들은 같은 대상을 부르는 칭호이지만 그 위상에서 차이가 난다. 즉 그 상대적 가치가 점점 상승하는 관계로 배열되어 있다.

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는 데 있다. 음성언어에 너무 무관심한 보기는 지하철역 화양역(還鄉女: 나중에 건국대 입구역으로 개명), 다죽리(茶園里+竹園里), 객사리, 하품리, 통곡리(地名) 등에서 볼 수 있고 이는 행정지명의 정비를 초래한(중앙일보, 2006.8.9) 원인이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행정언어에 있어 음성언어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의미의 측면을 살펴보자. 음성언어의 경시와 아울러 역사성에 치중하여 의미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sup>80)</sup> 지명 등의 행정용어에 의미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 의미가 혐오감을 주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대구시의 수성구의 내환동이나 달서구의 파산동은 역사성의 측면에서는 몰라도 의미상 좋은 행정명칭이라 할 수 없다. 기타 ‘대통령 하사품’ ‘대권’ 등의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현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비민주적 성격을 갖고 있는 좋은 보기들이다. 행정언어의 역사성과 그 변용을 살펴보면 지명 등의 행정언어는 쉽게 바꾸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일단 채용되면 그 나름의 역사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왕(旺)산면·왕(旺)전리 등은 일제 강점기에 민족정기를 말살할 목적으로 일제가 변경한 행정명칭 등인데 그대로 오늘날까지 답습하고 있다고 한다(한겨레신문, 2006.3.20). 또 다른 보기로 초등학교를 들 수 있다. 바뀌기 전에는 행정언어였던 국민학교(황국신민화)에 기초하여<sup>81)</sup> 새로운 행정용어가 도입되거나 변용을 일으킨다. 국민학교에서 ‘국교’로, 그들을 위한 신문을 ‘국판(國版)’이라 부르는 것들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지명 쪽을 살펴보면 행정구역 개편 때에 어떤 지명으로 결정되느냐는 그 시대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3공화국 때의 동래군(東萊郡)의 수난사와 요즘의 천안아산(온양온천)역이나 호평평리역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이어서 행정문화를 살펴보자.

사회나 행정조직의 성격은 행정문화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행정언어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다음 두 보기에서 행정언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A. 귀하의 의사사항은 관할 관청인 OO시에 이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회신토록 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B. 귀하의 의사사항은 관할 관청인 OO시 넘겨 검토를 거친 뒤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였으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최인호, 2006:129). ‘민주적일수록 國文體인 반면, 권위적일수록 漢文體 언어’(이기문, 1995; 김완진, 1995)라는 이론에 기초하면 A가 권위적인 문체(이첩, 회신, 양지 등)인데 비해 B가 민주적인 문체임을

80) 예전에 기상대(氣象臺)를 전통에 맞게 관상대(觀象臺)로 하였던 적이 있다.

81) 일본은 원래 소학교였던 명칭을 군국주의 체제 아래서 국민학교로 바꾸었다가 패전 후 소학교로 다시 환원했다고 한다.

알 수 있다. 또 위 두 보기는 시대에 따라서 행정언어가 어떠한 차이를 보여 주는지를 나타내준다. 이 현상은 영국의 Plain English와 같은 모습을 보여 준다 (Watson,2006). 좀 더 살펴보면 권위주의 시대의 사회는 ‘긴급조치’라는 행정언어를 낳는 문화를 안고 있었고, 발전국가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공단(工團)과 공단(公團)의 동의어를 만들었고, ‘개발’, ‘새마을’, ‘기획’, ‘고속도로’ 등의 행정언어를 퍼뜨렸다. 한편 조직의 성격도 행정언어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까버립시다’는 범죄조직이 사용할 때와 경찰이 사용할 때는 그 뜻이 다르고 후자의 경우 검찰조직에서 쓰는 ‘체포합시다’에 상응한다. 이런 요소들이 행정언어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행정언어의 당사자, 특히 행정 당국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 하는 것은 행정 당국이 그 국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를 알 수 있고 또 행정언어의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다. 여기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1963년도 연설문(1973)과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문(1999)을, 행정언어의 구성요소를 어휘적 요소와 비어휘적 요소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sup>82)</sup>

<표 1> 행정언어 주체 간의 행정언어 비교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어휘적 요소	1인칭 지칭	나는----- (또는 본인은) <sup>83)</sup>		저는----- <sup>84)</sup>	
	2인칭 지칭 (일반인)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sup>85)</sup>	
	2인칭 지칭 (외국인 포함)	동포 여러분		내외국민 여러분	
	일반인의 당사자 지칭	각하		대통령님	
비어휘적 요소	표현 양식	국한혼용		한글전용	
	문장 길이 (평균)	전체 문장 수	51	전체 문장 수	168
		전체 글자 수	3755	전체 글자 수	5384
		1 문장 당 글자 수	73.6	1 문장 당 글자 수	32.0
	용어	군사용어 중심	낙오 없는 隊伍의 嚮導	구어체의 표출	먼저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문어체 중심	草家三間의 燒失을 초래하는 愚를 범하는		
	지향	타자지향	동포 여러분의 현명한 決斷과 勇猛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기지향	저를 믿고 적극 도와주십시오

82) 이와 관련된 논의는 박경현 (2003)을 참고하라.

83) 취임사를 분석해 본 결과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자신을 지칭하는 ‘나’의 빈도는 12회로 전체비율 (전체 어휘 중 ‘나’의 비율)은 0.434783이다. 그는 ‘저’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박경현 (2003)의 논의에 따르면 대통

이상을 비교해 보고 지적할 점은 문체 이론 (민주적일수록 國文體인 반면, 권위적일수록 漢文體 언어)에 기초하면 박정희 대통령 취임사는 비교적 권위적 취임사인데 비해 김대중 대통령은 비교적 덜 권위적 취임사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국가 발전 이론에 따르면 (김태성·성경룡, 1999) 권위적 취임사는 발전국가 시대에 어울리고 덜 권위적 취임사는 민주국가 시대에 어울린다는 견해를 수긍할 수 있다.

이런 행정언어를 바람직 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노력의 근거지가 국어책임관이다. 그러나 중앙 부처의 국어책임관은 자신의 고유한 업무수행에 전념하고 겸직인 국어책임관은 관심을 둘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자신이 국어책임관임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 더욱이 중앙과 지방의 국어책임관 모두 전문지식의 부족과 열정의 부족으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여 유명무실한 제도로 될 위험성에 처해 있다. 또한 국어책임관 제도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예컨대 업무 인수인계의 문제, 형식적인 임면, 국어책임관이 바뀌어도 보고도 없는 관리체계 등이 그것이다.

## 2) 국어책임관 제도

### (1) 행정학·정책학에 기초한 국어책임관의 개념

국어책임관의 개념을 행정학·정책학에 기대어 설명해 보면 국어책임관은 행정수단이 되는 언어를 통하여 다음 다섯 가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① 정부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언어 형태로 제공해 주는 역할.
- ② 정부조직 내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의사전달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조직이 건강하도록 영향을 주는 역할
- ③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촉진(예: 적절한 칭찬)
- ④ 정부조직의 의사소통 활동은 국민들의 생활의 질과 국가 발전 수준에 직결됨.
- ⑤ 특히 오늘날과 같이 행정 기능의 확대 및 전문화에 따라 국민생활에 대한 행정의 영향이 매우 크고 행정이 국가 발전을 주도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평가하는데 의견이 일치함. 의사전달의 수단을 다듬는 역할. , 조직구

---

령 자신을 이르는 말은 나, 본인, 이 몸, 저 등이 있고 나, 본인 등은 권위적이라 한다.

84)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저'의 빈도는 18회로 전체비율은 0.469729이다. 참고로 김대중 대통령의 '나'의 빈도는 1회로 전체비율은 0.026096이다.

85) 물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의 표현도 보인다. 대통령 비서실 (1999)을 참조할 것.



## 성원의 만족도

- 발전행정론에 기댄 개념 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라는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국어책임관은 변화의 관리자나 변화의 촉진자 역할.

병영내 존중어 사용 확산 '주목'

병영 내에서 주고받는 말이 부드러워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1일 국방부가 발간한 '병영문화개선 모범 사례집'에 따르면 일부 부대에서 시작된 선임병과 후임병 간 '존중어 사용' 관행이 많은 부대로 확산하고 있다. 국방부는 존중어 사용 우수부대를 분기별로 선정해 포상하고 우수 분·소대 전원에게 휴가를 줄 계획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병영 존중어를 보면 "1분대는 오전 9시까지 집합 바람" "김 일병, 늦지 않도록 하시오" "김 일병, 오늘 교육은 어땠나요?" 등이며 선임병사는 후임병사에게 성(姓)과 계급을 함께 부르고 후임병사는 선임병사에게 '님'자를 붙이고 있다.

즉 선임병은 "야" 대신 "김 일병" "김철수 일병" 식으로 부르고 "김 상병, 식사 많이 했어요?" "박이병, 커피 한 잔 할래요?" 라는 존중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후임병 또한 선임병에게 "홍 병장님" "홍길동 병장님" "이 병장님, 식사하셨습니다까?"라는 말로 예의를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훈련병 끼리도 "OO훈련병, 오늘도 즐겁고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등의 존칭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상호 존중어를 사용하면서 계급 및 입대일 차이에서 오는 권위적인 행동이 줄어들고 있다"며 "존중어 사용을 늘리고 내·외부 평가를 통해 부대별로 인증서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중앙 2007.11.1

② 불균형 전략을 통하여 점진적인 균형으로 진행. ③ 언어를 통한 발전지향적 가치관 동기부여.

곧 발표될 노벨 문학상의 단골 후보 가운데 특이한 인물이 있다. 포크 가수 밥 딜런이 그 주인공이다. 일상에 대한 성찰과 은유적 메시지를 담은 노랫말의 문학적 가치를 인정한 평론가들이 10여 년째 그를 추천하고 있다. 대학 교재로 유명한 노턴 출판사의 '문학개론'에 그의 노랫말이 실린 건 이미 오래전이다.

잘 만들어진 대중가요의 노랫말은 그 아름다움이 시에 뒤지지 않는다. 노랫말의 미덕은 진솔함에 있다. '잊혀진 계절' '모닥불' 등 3000여 곡을 쓴 작사가 박건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언어가 아니라 언어 속에 숨어 있는 진실"이라고 말한다. "노랫말은 고상함과 거리가 멀다. 삶이 바르게 보이는 자리에 서서 감정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노래했다면 그것이 바로 시"라고 한 유종화 시인의 말과도 일치한다. 그런 노랫말이 심금을 울리는 멜로디와 어우러져 명곡이 되고 가장 솔직한 시대의 증언자로 남는다.

우리 대중가요사에도 명곡.명가사가 많았다. 거친 광야로 나아가는 비장한 순간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을 포착한 김민기의 감수성은 번뜩였다. 대중가요의 영원한 주제인 사랑을 풀어낼 땐 걱정적이지 천박하지 않았다. 그대 오소서 이 밤길로/달빛 아래 고요히/떨리는 내 손을 잡아주오/내 더운 가슴 안아 주오// (정태춘. 박은옥 '사랑하는 이에게')

언제부턴가 그런 아름다운 노랫말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서정성과는 거리가 먼 직설적

표현 일색인 것은 요즘 젊은 세대의 감수성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영어로 뒤범벅되고 글로 옮기기 민망한 비속어와 서양 욕설까지 등장하는 노랫말은 어떻게 봐야 할까.

한 음악 채널의 지난주 인기 가요 30곡 가운데 16곡은 제목만으로도 국적을 분간하기 힘든 곡이다. 'Keep Holding U' 'We Belong Together' 등과 함께 'D-LIP ver. 1'이란 알쏭달쏭한 제목도 있다. 비교 삼아 1985년의 인기 가요 순위를 찾아봤더니 전혀 딴 세상이다. '어제오늘 그리고' '희나리' '바위섬' 등 상위 20곡 가운데 영어 이니셜을 쓴 'J 그대는'이 유일한 예외랄까.

560년 전 오늘 훈민정음을 반포한 세종대왕은 '정간보'란 악보를 창안하고 예악(禮樂)을 정비한,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임금이었다. 국적불명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한글 파괴'를 일삼는 후손을 그래도 어여뵈 여기실지 송구하기 짝이 없다.

예영준 도쿄 특파원 중앙일보 분수대 2006.10.8

④ 더 나아가 사회체제적 불균형 전략의 추진자로서 역할 가능. - 조직론에 기댄 개념 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라는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국어책임관은 변화의 관리자나 변화의 촉진자 역할. ② 불균형 전략을 통하여 점진적인 균형으로 진행. ③ 언어를 통한 발전지향적 가치관 동기부여. ④ 더 나아가 사회체제적 불균형 전략의 추진자로서 역할 가능.

지역(地域)은 ‘일정하게 나눈 범위의 땅’, ‘전체 사회를 특징 따라 나눈 일정한 공간 영역’이라는 뜻을 지닌다. 그러므로 지역 언어라 하면 ‘어떤 특징 따라 나눈 공간 영역에서 쓰는 언어’를 일컫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행정을 중심으로 지역을 나누고 있어 남쪽의 경우는 서울·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 지역으로 굳혀 써 왔다.

사전의 뜻과 다르게 ‘지역’이라는 말을 ‘중앙’과 대립하는 개념으로 잘못 다루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서울’도 하나의 지역에 지나지 않는데도 “지역 발전이 소외되고 있다”는 표현에서는 중앙과 대립하는 ‘지방’을 두고 하는 말로 쓰인다. 고장말(방언)을 ‘지역어’라 부를 때도 본디 개념에서 벗어난 채, ‘지방의 말’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적잖다. ‘지방’이란 개념에 ‘서울 이외의 지역’이라는 뜻이 있어 ‘지역’과 ‘지방’이란 말을 뒤섞어 쓰면서 생긴 결과라 할 수 있다.

방언학에서는 “방언이란 본디 균질적이던 한 언어가 지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분화되어 생겨난 분화체로서, 특정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서만 사용하는 음성·음운·문법·어휘의 체계를 가리킨다”고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지역의 언어라고 할 때, 그 개념에는 한국어로서 가지는 보편적인 음운·통사·화용 현상, 문체, 어휘, 억양, 리듬, 음의 높낮이와 장단, 속담, 관용 표현은 물론, 고장의 고유한 언어 특성들을 포괄한다.

이태영/전북대 교수·국어학

○ 언어정책에 기댄 국어책임관의 개념 ① 언어사용도 일종의 사회계약. ② 언어사용은 원초적으로 부여된 언어능력(initial endowment)에 기초 ③ 연속하는 세대 사이의 묵시적 사회적 약속(an implicit social contract) ④ 언어가 쪼갈라진 나라는 언제나 가난하다 (Pool의 정리): 필리핀

- 국가개입주의에 기초한 정책.

- 외국 이주민의 증가에 따른 한국어 교육 환경 변화 등.- 또한 이들 자녀의 교육에서 현행 교육법은 적절하지 않음.

## 2) 국어책임관의 역할

가. 국어기본법령에 따른 역할

○ 법령규정 ①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의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② 해당 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③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④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 위의 규정은 원론적인 조항들임. ○ 문제는 각 위치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도록 하는가, 그리고 왜 하는가?

나. 이를 재구성하면 - 불응에 대해서 수단 강구. - 순응에 대한 전략적 거점. - 무관심에 대한 동기부여 방식 개발로 요약할 수 있음.

### 3) 국어정책의 결정과 집행, 평가의 책임자로서 국어책임관

○ 정책 결정 - 앞서 언급하였던 관용화한 말과 글의 검토를 비롯한 결정사항들. - 소속 기관의 정책결정 차원 ○ 정책 집행 - 순응과 불응, 또는 무관심에 대한 관료의 태도 - 위에 언급한 국어 책임관의 고유한 업무로 이끄는 역할. ○ 정책 평가<sup>86)</sup> ○ 정책 환경: 환류 - 사회 (또는 민간)의 반응에 따른 정부의지와 능력의 변화로 나눌 수 있다.

<표 1 차원과 단위>

차원			업무 단위	
국어 책임 관 의 역할	정책결정과 정	소속 기관의 정책결정 차원	불응에 대해서	1)인간적 차원에서 설득, 2)조직적 차원에서 채찍과 당근
			순응에 대해서	1)전파자 역할
			무관심에 대해서	1)동기부여
	정책집행과 정	관료의 태도	불응	교육훈련과 같은 역의 인센 티브 제도
			순응	인센티브 제도
		정책대상 집단의 태도	불응	
			순응	
	사회 (또는 민간)의 반응에 따른 정부 의지와 능력의 변화		강력집행	
			포기나 호지부지	
			범위의 축소 (일부집행)	

## 3. 문제점

### 국어책임관 설문 조사 팀작업 후기

김우중

86) 소속 기관 단위의 평가를 말하고 법령에 규정된 것과는 별개이다.

## 1.느낀점 (총평, 지역별 후기, 등 등 )

내가 맡은 곳은 서울·부산 지역으로 우리나라 자치 단체중 가장 큰 두곳 이었다. 우선 각각의 지역에서 국어 책임관 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와 연구·조사 기관으로서의 경북대학교에 대한 호감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우선 서울 지역에서는 10곳 중 약 한군데 정도 약 10% 정도는 국어 책임관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사 기관으로서의 경북대학교에 대한 호감도에 있어서는 약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부산 지역에서는 거의 전역에서 국어 책임관 제도에 대해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조사 기관으로서 경북대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설문 사전 조사 작업에 임해 주었다.

이외 여러 가지 상황에서 느낀 점을 통해 결론을 내자면 대부분 지역에서 국어 책임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국어 책임관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으며, 전화 통화를 통해 처음으로 국어 책임관에 대해 알게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이 작업을 통해 본인이 국어 책임관 연구의 연구조교인지 아니면 문화관광부의 국어책임관 홍보도우미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을 정도이다.

나를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부하지만 결과는 몇 안되는 설문 답장이었지만, 이 작업을 통해 보람되는 점이 있다면 각 국어 책임관에 대해 열심히 홍보했다는 점이 아닌가 싶다.

## 2. 상황별 사례

### ① 국어 책임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 문화체육과장님! 혹시 국어 책임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어 책임관: 네?(놀라며~) 국어 책임관 처음 들어 봤는데요, 그게 뭔가요?

☞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국어 책임관이란 제도가 2005년에 신설된 것을 확실하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음.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국어 책임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면 (물론 제도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령 초과 근무수당과 같은 것) 좀 더 제도가 정착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② 연구조교로서 가장 기분 나빴던 경우중 하나인데 조직 개편으로 인해 서로 국어 책임관이 아니라고 떠 넘기는 경우.

가령 어떤 지역의 경우 ‘문화체육홍보과’에서 ‘문화체육과’와 ‘홍보감사과’로 분리되었는데 서로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고 미룬 경우가 있었음. 공무원의 무사 안일한 태도와 자신의 업무 영역에 대해서만 챙기는 성향을 배울 수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국어 책임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고 생각됨.

☞향후 제대로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각 분기 혹은 매 인사이동시 혹은 한글날과 같은 특별한 날에 각 지역의 국어책임관을 임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됨.

### ③ 부하 직원에게 떠 넘기는 경우.

힘들게 국어책임관의 직위에 있는 사람 (대부분 과장급.)과 통화해 성공했지만 국어 책임관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래 사람에게 전화를 돌리는 경우가 있었음.

나 : 문화체육과장님 되십니까? 혹시 국어 책임관 제도에 대해서 아시나요?

국어책임관 : 어, 글썄~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귀찮은듯) 어이 누구 누구! 국어 책임관 들

어 봤어? 한번 받아봐~ 도무지 국어책임관이 뭔지?

이 경우 부하 직원들의 경우 국어 책임관에 대해서 한번 정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있었던 것 같았음. 그들의 말에 따르면 각 지역의 국어 책임관 관련 교육 또는 홍보가 있을 경우 실제로 참석하는 것은 국어책임관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하 직원이 대신 참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함.

사실 그도 그럴 것이 과장 (광역시에는 4급 정도 직급)쯤 되는 사람이 일일이 교육에 찾아다니지 않을 것임. 귀찮은 것은 밑에 직원에게 위임(좋은말로~)하는 듯 함.

물론 국어 책임관 제도의 취지에서 홍보 담당 기관의 부서장에게 그러한 직책을 맡겼겠지만 실제로 이들에게 맡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음. 차라리 부서장은 아니지만 부하 직원중 문화나 홍보와 관련된 분야의 좀 더 활동성 있고 인터넷 등의 접근도가 높은 직원에게 책임관의 직책을 맡기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 한다면 이 제도가 더욱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봄.

④ 이메일을 통한 설문 조사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가진 공무원이 꽤나 많았음. 편지로 발송할 것을 요구한 공무원 있었고, 심지어 정식 공문으로 발송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음.

행정고시 출신이 아니라면 4·5 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으신 분들로 판단이 되기에 이메일을 통한 조사에 거부 반응을 가지는 것 같았고, 이메일 회수율이 적었던 이유도 (공무원의 답변이 적었던 이유 또한) 이러한 원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향후 연구 조사에 있어서 전화를 통한 직접 설문 혹은 문화관광부의 협조를 통한 정식 공문 발송을 통한 설문 조사가 이루어지면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⑤ 위 ③번과 유사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부하 직원이 전화를 받은 경우 국어책임관에 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바꿔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아직까지 남아 있는 공직 사회의 수직적인 구조를 엿볼 수 있었음.

### 3. 덧붙이고 싶은 말

요즘 이명박 당선인의 행보를 보면 각 정부 부처를 효율화 · 슬림화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국어 책임관 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에 상반될 수도 있는 의견이지만 국어 책임관 제도의 활성화에 앞서, “과연 국어 책임관 제도는 정말 필요한 것인가?”와 같이 이 제도에 대한 적실성 있는 의문을 먼저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제도가 정말 필요하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 이 제도를 홍보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문화관광부에서는 제도를 만들어 놓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를 잘 알리고 충분히 숙지시킬 방법과 임명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과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 인가요?)

## 1. 조사자의 평가

일단 조사한 전 지역에 걸쳐 국어책임관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지역별로 국어책임관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지역은 2~3%에 불과하며 서울·경기의 경우 10~15% 정도로 가장 높고 충청/부산/대구 등의 경우 아는 곳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경우도 이미 이전에 유사한 설문을 받아보고 알게 된 경우가 대다수로 국어책임관 제도의 인지도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어책임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요청한 경우 대부분 거부반응을 보이며, 설문조사 협조요청에 대해 자신과 상관없다며 거부하거나, 타부서 또는 부하 직원에게 문의하라며 전화를 돌려버리는 경우, 설명을 들은 후 마지못해 메일주소를 알려주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이다.

## 2. 대표적 사례

공무원(A): 여보세요

본인(B): 안녕하세요. 전 경북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연구조교를 맡고 있는 000이라고 합니다. 000청 000과장님 되십니까?

- 사례 1

A: 예.

B: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국립국어원에서 연구의뢰를 받아서 국어책임관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A: 머요?

B: 국어책임관이요...

A: 그게 뭡니까?

B: 예, 국어책임관 제도란...(국어책임관 제도 대략 설명)

A: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요?

B: 예,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를 좀 개선해보고자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기초자료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자료에 따르면 과장님이 000청 국어책임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메일 주소를 좀 여쭙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A: 제가요? 모르겠는데..... (수화기에서 고개돌리고) 000씨, 이메일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제 이메일 주소는... (부하직원 이메일 주소 불러줌)

- 사례 2

A: 무엇 때문에 그러시죠?

B: 예, 저희가 이번에~ (국어책임관 제도 및 전화 목적 대략 설명)

A: 아.... 잠시만요.... (잠시 후) 과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B: 언제쯤 들어오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A: 지금 의회 들어가셨는데 의회에서 바로 퇴근하실 것 같은데요...

B: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 사례 3

A: 예.

B: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전화 목적 설명)

A: 국어책임관이요? 그게 뭡니까?

B: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구요... (국어책임관 제도 및 연구목적 대략 설명)

A: 흙... 우리 쪽 업무가 아닌 같은데....

B: 이게 지역에 따라서 문화관광과나 공보과 둘 중 하나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과장님이 담당자로 되어있어서 이메일 주소를 여쭙고자 전화를 드렸거든요...

A: 그거 잘못된 거 같은데... 제가 담당자로 되었다고요?

B: 예.

A: 그런게 있다는 거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잠시만요... 제 이메일 주소는...

B: 예, 감사합니다.

- 사례 4

A : “국어 책임관이라고 아시는 지요?”

B : “아니요. 그게 머지요?”

A : "네, 국어 책임관이라는 것이 국어 기본법에 의거하여..... 인데, 과장님께서.."

B : "전 그런것 아니거든요. 알겠쥬? 아시겠쥬? 전 그런 것 아닙니다 아시겠쥬? 아시겠쥬?"  
뚜 뚜 뚜

- 사례 5

A : "국어책임관이라고 아시는 지요?"

B : "국어.. 머???"

A : “국-어-책-임-관이요”

B : “국어책임관? 그게 먼데요?”

A : "국어 책임관이라는 것이 국어 기본법에 의거하여 ..... 인데, 저희가 가진 자료에 의거하면 과장님께서 국어 책임관이라고 등재 되어 계십니다.“

B : "그래서요?"

A :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협조 좀 부탁 드릴려고 하는데, 실례지만 이메일 ...“

B : "저 바쁘거든요“

A : “그러면, 과장님은 질문에 응답 안하시는 걸로 알고 그렇게 처리하면 될까요?”

B : "그렇게 하세요. 그럼..“ 뚜 뚜 뚜

- 사례 6

A : "국어 책임관이라고 아시는 지요?"

B : “국어 책임관? 그게 머지요?”

A : “네, 국어책임관이 국어 기본법상에 ..... 있는데, 저희가 가진 자료에 의거하면 과장님께서 국어 책임관으로 등재 되어 계십니다”

B : “그래요? 근데 그 법 다시 말씀해주시면 안될까요?”

A : “국어기본법이요”

B : “국어기본법 거기만 나와 있어요?”

A : “아니요. 하위 법령인 국어기본법시행령에도 함께 규정 되어 있습니다.”

B : “아 그래요? 그게 몇조이쥬?”

A : “10조입니다”

B : “아 그렇군요. 제가 그 국어책임관인지 몰랐네요.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A : “아, 네 그러시군요. 근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협조를 구할 수 있을까요?”

B : “아 네 그러세요. 근데 국어 책임관에 대해 아는 게 없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A : “네 아시는 만큼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B : “네 수고하세요”

뚜 뚜 뚜

### 3. 결론

① 국어 책임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 문화체육과장님! 혹시 국어 책임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어 책임관: 네?(놀라며~) 국어 책임관 처음 들어 봤는데요, 그게 뭐가요?

☞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국어 책임관 이란 제도가 2005년에 신설된 것을 확실하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음.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국어 책임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면 (물론 제도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령 초과 근무수당과 같은 것) 좀 더 제도가 정착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② 조직 개편으로 인해 서로 국어 책임관이 아니라고 떠넘기는 경우.

가령 어떤 지역의 경우 ‘문화체육홍보과’에서 ‘문화체육과’와 ‘홍보감사과’로 분리되었는데 서로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고 미룬 경우가 있었음. 공무원의 무사 안일한 태도와 자신의 업무 영역에 대해서만 챙기는 성향을 배울 수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국어 책임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고 생각됨.

☞ 향후 제대로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각 분기 혹은 매 인사이동시 혹은 한글날과 같은 특별한 날에 각 지역의 국어책임관을 임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됨.

③ 부하 직원에게 떠 넘기는 경우.

힘들게 국어책임관의 직위에 있는 사람 (대부분 과장급.)과 통화해 성공했지만 국어 책임관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래 사람에게 전화를 돌리는 경우가 있었음.

나 : 문화체육과장님 되십니까? 혹시 국어 책임관 제도에 대해서 아시나요?

국어책임관 : 어, 글썄~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귀찮은듯) 어이 누구 누구! 국어 책임관 들어 봤어? 한번 받아봐~ 도무지 국어책임관이 뭔지?

이 경우 부하 직원들의 경우 국어 책임관에 대해서 한번 정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있었던 것 같았음. 그들의 말에 따르면 각 지역의 국어 책임관 관련 교육 또는 홍보가 있을 경우 실제로 참석하는 것은 국어책임관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하 직원이 대신 참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함.

사실 그도 그럴 것이 과장 (광역시에는 4급 정도 직급)쯤 되는 사람이 일일이 교육에 찾아다니지 않을 것임. 귀찮은 것은 밑에 직원에게 위임하는 듯 함.

☞ 물론 국어 책임관 제도의 취지에서 홍보 담당 기관의 부서장에게 그러한 직책을 맡겼겠지만 실제로 이들에게 맡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음. 차라리 부



서장은 아니지만 부하 직원 중 문화나 홍보와 관련된 분야의 좀 더 활동성 있고 인터넷 등의 접근도가 높은 직원에게 책임관의 직책을 맡기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 한다면 이 제도가 더욱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봄.

④ 이메일을 통한 설문 조사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가진 공무원이 꽤나 많았음. 편지로 발송할 것을 요구한 공무원 있었고, 심지어 정식 공문으로 발송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음. 행정고시 출신이 아니라면 4·5 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으신 분들로 판단이 되기에 이메일을 통한 조사에 거부 반응을 가지는 것 같았고, 이메일 회수율이 적었던 이유도 (공무원의 답변이 적었던 이유 또한) 이러한 원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향후 연구 조사에 있어서 전화를 통한 직접 설문 혹은 문화관광부의 협조를 통한 정식 공문 발송을 통한 설문 조사가 이루어지면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⑤ 위 ③번과 유사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부하 직원이 전화를 받은 경우 국어책임관에 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바꿔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아직까지 남아 있는 공직 사회의 수직적인 구조를 엿볼 수 있었음.

#### 행자부, 일제 '創地改名' 잔재 전수조사

행정자치부가 일제 강점기때 왜곡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 잘못 쓰이고 있는 지명이나 도로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일제가 자원 수탈이나 통치 편의 등을 위해 행정구역을 바꾸면서 일본식으로 개명한 지명들이 본래 이름을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행자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지원단에 따르면 최근 전국 16개 시도에 협조공문을 보내 일제에 의해 부여됐거나 왜곡된 지명 및 도로명과 복원상황 등을 파악해 보고토록 했다.

행자부는 조사결과가 취합 되는대로 국토지리정보원에 자료를 제공, 일제가 민족정신과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단행한 '창지개명(創地改名)'을 바로잡는 데 참고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시의 경우 전수조사에서 부산 중구 남포동의 경우 고유지명인 '자갈치'가일제때 '남빈정'으로 왜곡됐다가 해방후 '남포동'으로 전환됐고, 중구 중앙동의 고유지명인 '논치'는 일제때 '대창정'으로 불렸다가 해방후 '중앙동'으로 바뀐 것으로확인됐다.

행자부는 또 이번 조사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 꽃이름 등을 딴 도로명을별도로 파악한 뒤 우수사례를 정리,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도로의 명칭에 지역의 특색이나 역사성이 담겨 있으면 이를이용하는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게 되고, 애향심도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연합은 "자연지명을 담당하는 시.군.구의 지명위원회가 유명무실한데다 자연지명은 국토지리정보원이, 행정지명은 행정자치부가, 하천.도로명은 건설교통부가, 군사시설명은 국방부가 맡는 등 지명 관리에 일관성.체계성이 없어 지명이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지명 담당부처간 협조체계도 함께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부산=연합뉴스) 동아 2005/9/8

암호'로 쓰여진 안내판?

제연경계벽...언더패스...좌로유입...

인천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 영등포로 출근하는 이해련(32)씨는 지하철역 계단을 오를 때마다 천장 쪽에 설치된 투명 칸막이에 써 있는 '제연경계벽'이란 말의 뜻을 몰라 항상 궁금했다. '제연'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행위를 똑같이 되풀이한다는 뜻의 '재연'은 알겠는데, '제연'은 뭐지?" 인터넷에 들어가 검색을 해보고 나서야 의문이 풀렸다. '제연경계벽'은 불이 났을 때 공기보다 가벼워 위쪽으로 떠오르는 연기와 유독가스를 차단함으로써 사람들이 밖으로 대피할 시간을 벌어주는 구실을 한다. 이씨는 "알기 쉽게 '연기막이벽'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어려운 한자어로 '제연경계벽'이라고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하철이나 도로알림판 등 공공시설물에 어려운 한자나 영어로 된 용어가 사용돼 막상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쉽게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글문화연대 등 한글단체와 누리꾼들은 9일 한글날을 맞아 공공기관들이 기념식만 챙길 게 아니라 한글 사용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 '진솔한 내용방'은 <한겨레> '하니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서울 강변북로 등을 지나다보면 '좌로유입', '우차로서행'이라는 표지판이 있다"며 "'왼쪽에서 진입', '느린 차량 오른쪽으로'라고 하면 뜻이 한층 더 명쾌한데, 왜 저렇게 쓰는지 화가 났다"고 말했다.

**지하철·도로 등 공공시설 어려운 한자·영어 사용**

**연기막이벽·도로밀 도로 등 "쉬운 우리말 써야" 지적**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경고문에는 '반드시 핸드레일을 잡고 몸은 밖으로 내밀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적혀있다. 김소연 기자

누리꾼 '애기꽃'은 한글문화연대 누리집 게시판에 '언더패스'라는 도로 안내표지를 보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 황당했던 사연을 올렸다. 그는 "처음엔 언더패스가 '아래로 던진다'는 운동 용어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언더패스'는 '차량의 영감을 막기 위해 철도나 다른 도로의 아래를 지나는 도로'라는 뜻이다.

한글문화연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도로표지를 바꿔야 한다"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앞서 이 단체는 고속도로 전광판에 'TC'(요금소), 'IC'(나들목), 'Jct'(분기점) 등 영어 표기가 사용되는 데 항의해 최근 한글 표기로 바꿔내기도 했다.

한글문화연대 게시판에는 이 밖에 시민들이 어려운 용어 때문에 겪었던 불편 사례가 잇따라 고발되고 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경고문에 '손잡이'를 '핸드레일'로 표현하고, 화재 때 지하철 문을 여는 데 사용되는 '문고리'를 '도어핸들'로 안내하거나, 지하철 승강장의 '안전문'을 '스크린도어'로 표기하는 사례들이다.

김영석 한글문화연대 운영위원은 "스크린도어는 본래 모기장이란 뜻으로, '플랫폼 스크린도어'가 맞는 용어"라며 "외국인들에게는 '스크린도어가 열립니다'라는 지하철 안내방송이 오히려 이상하게 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어나 한자어를 전혀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대신 왜 굳이 다른 언어를 쓰느냐"고 지적했다. 2007-10-07 한겨레

○ 가장 큰 문제점: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가득 차 있음. -대안이 시급히 필요함. ○ 시행상의 많은 문제점: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 -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음. - (1) 전문지식의 문제점, - (2) 행정의 문제점, ① 관리의 문제점으로 인사이동, 조직개편, 업무 위임 등으로 국어책임관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짐. ② 의욕의 문제점으로 당사자는 의욕도 없는데 임명이 되어 오히려 불편을 하소연하는 실정임. ③ 대내적 공표의 문제점 (보고체계): 누가 책임관인지 상부기관이나 국어원에 보고도

되지 않음. ④ 대외적 공표의 문제점: 국민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할 필요성. 겸직이므로 누가 국어책임관인지 모름. 분리할 필요성이 제기됨. - (3) 겸직의 문제점으로 주된 업무에 치중하다 보면 국어책임관의 업무는 방임되어서 그 일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음.

## 2) 새로운 설계

○ 어떤 정책이 시대정신(Zeitgeist)의 흐름을 타고 있을 때 정책의 정착 가능성이 증대 ○ 국어와 한국어에 대한 수요 증대 ○ 국어책임관의 수요 증대 ○ 정치력의 문제

# 4. 시나리오

## 1) 가능한 시나리오

○ 시나리오 1: 겸직제를 폐지하고 국어책임관 제도 설치. ○ 시나리오 2: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고 능력발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 시나리오 3: 현행 국어책임관 제도를 민간화 하는 방안. ○ 시나리오 4: 현행 제도 보완 ;국어책임관의 겸직제를 그대로 두고 국어학예사 제도 신설.

2) 시나리오 1 (겸직제를 폐지하고 국어책임관 제도 설치)의 검토. ○ 고위직 (국어책임관) 신설로 국어 관련 업무의 효율성 증가. ○ 승진, 전보 등 인사행정에 문제가 있음. ○ 업무의 전문성 등에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

3) 시나리오 2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고 능력발전제도를 도입)의 검토.

○ 부수적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과 전보, 사후평가 등 ○ 현행의 국어책임관 자체의 문제점은 해결이 되지 않음. ○ 관리주체가 감당할 여력에 문제가 있음. ○ 이 제도도 바람직하지 않음.

4) 시나리오 3 (현행 국어책임관 제도를 민간화 하는 방안)의 검토.

○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공모제 등을 통한 방식. - 그 전제 조건은 시나리오 1의 달성 후에 가능. ○ 현 단계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움. ○ 있는 제도를 후퇴시킬 수 있는 가능성. ○ 이 제도도 바람직하지 않음.

5) 시나리오 4 (현행 제도 보완)의 검토.

○ 기존의 틀을 존치시킨다는 의미에서 부작용이 적음. ○ 현 단계에서는 추진하기 쉬움. ○ 있는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 ○ 이 제도가 바람직함.

꼭 필요한 부처

검찰이 길고 난해한 결정문을 짧고 쉬운 문장으로 바꾼다. 1946년 12월 사법부 부령에 의해 법원·검찰 체제가 성립된 지 60년 만이다. 그동안 검찰의 결정문은 옛 일본식 잔재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검찰청은 공소장과 불기소장 등 검찰 결정문의 체제, 문장·용어 등 작성방법을 개정한 개선안을 마련해 9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하나의 범죄사실을 한 문장으로 길게 이어쓰는 ‘1공소사실 1문장’ 관행을 깨고 적절한 분량으로 문단을 나눠 단문으로 쓰기로 했다. 과거 중요 시국사건이나 대형 사건의 공소장에서 ‘피고인은 ~한 자인 바, ~했으며, ~했던 것이다.’는 식으로 한 문장이 길게는 5~6쪽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런 장문은 사라지게 됐다.

어려운 법률용어도 쉬운 일상용어로 풀어쓴다. 예를 들어 ‘편취한 것이다.’는 ‘사람을 속여 서(또는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로, ‘동인을 외포케 한 후’는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로, ‘~인 바, ~하였던 바’는 ‘~인데, ~하였더니’로 쓴다 (서울신문, 2007.9.10).

금원 → 돈, 경료했다 → 마쳤다 ... 법원 판결문 쉬워진다

현행	권고안
금원	돈
하자(瑕疵)	흠
인용한다	받아들인다
가사	설사
~라고 할 것이다	~이다
~함이 없이	~하지 않고
월 임료	월세
형해화 되고	있으나마나 하게 되고
~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다, ~라고 보는게 맞다

법원행정처는 23일 국민이 판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판결문 쓰기'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열린우리당과의 '민사판결문 간이화 방안 간담회'에서 지난달 6일 전국법원 수석부장회의 때 제시된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쉬운 판결문 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법원행정처가 이날 공개한 쉬운 판결문 작성 원칙은 ▶평이한 우리말 사용 ▶짧은 문장으로 구성 ▶간결하고 명료한 표현 사용 등이다. 구체적으로 '등기를 경료했다'는 '등기를 마쳤다'로, '금원은 '돈'으로 바꿔 어려운 한자어를 피하도록 했다. 또 '~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이다'리

는 식의 늘어지는 표현은 간단하게 '~이다'로 쓰도록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살피건대' 등 관행적으로 사용돼 왔던 표현은 삭제토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판결문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공통된 사실이나 반드시 필요한 주장만 기재함으로써 판결문을 간이화하는 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송 당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하다면 판결문에 도표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최재천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은 "판결 내용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채병건 기자

#### 의료용용어를 한글로

국립대학병원 등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외국어를 환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글 용어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30일 “공공 의료기관부터 의학전문용어를 한글용어로 바꾸자는 국민 의견이 접수됐다.”면서 “이 제안이 타당한지,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획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을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의학용어 개선에 대한 의견도 접수됐다. 이 관계자는 “검토 단계이며 시행 여부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이 방안을 시행할 경우 국립대학병원을 비롯한 공공 의료기관부터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안자에 따르면 흉부외과 의학용어 가운데 자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의 경우 93%, 일본 11% 등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0%로, 순수 한글용어가 없다. 이에 따라 ‘Tx→치료, Pt→환자, inj→주사, OP→수술, Cx→합병증, MeD→투약’ 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년 3월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용어 개선사업' 관련 연합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 아래 -

연합뉴스 2006년 2월 26일 보도자료

바르고 쉬운 말 사용으로 정부 신뢰감 높인다

<http://bbs.yonhapnews.co.kr/board/0211000000.asp>

- 행정용어 개선사업 본격 추진 -

정부는 공문서에서 사용되는 행정용어나 부서·직급·장소 등의 이름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바꾸는 일에 발벗고 나섰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그동안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행정용어를 쉽게 바꾸고자 노력해 왔으나 아직도 권위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고 필요 이상으로 외래어가 사용되는 등 행정용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달·주사·서기·기능직 등 위화감을 조성하는 용어, 전투경찰·관용차량 등 권위주의적 용어, 폐기물·도압장(오리도축장) 등 혐오감을 주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 그동안 행정용어·명칭 개선 사업은 각 부처에서 부분적으로 추진해 왔다.

2005년도에 각 부처에서 추진한 행정용어 개선 내용을 보면, 환경부, 특허청, 국세청에서는 분야별 '용어집'을 만들어 행정용어를 쉽고 바르게 쓰도록 하였고,

▶(환경부): 아름답고 알기 쉽게 바꾼 환경 용어집, (특허청): 심결문 용어순화 편람, (국세청): 편하고 바르게 쓰는 세정용어 길잡이 등

- 대통령경호실에서는 과거 보안 중심의 명칭을 방문객 위주의 명칭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으며,

▶ 22면회실 → 북악면회실, 55면회실 → 분수대면회실 등

- 또한, 국무조정실에서는 애매모호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규제법안을 국어전문

가의 의견을 받아 35건을 바꾼 사례가 있다.

▶ 계리 → 계산하여 정리, 복권자금 → 복권판매대금 등

- 한걸음 더 나아가 산림청, 문화관광부, 특허청에서는 순화된 행정용어를 한글 맞춤법 소프트웨어(바른한글)에 반영하여 각종 문서작성에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부처 차원의 행정용어 개선 노력은 일시적 효과를 내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고 개선사례나 경험이 정부 전체적으로 공유, 확산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정부혁신 차원에서 행정용어·명칭 사용 현황을 전면 진단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개별 부처에서 사용해 오던 행정용어 순화 자료집과 국어사전에 등록된 어휘를 참고하여 개발한 '진단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금년 3~4월까지 민원업무가 많은 행정자치부, 경기도, 서울시교육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4개 기관의 공문서, 민원서식, 법령, 간행물 등을 대상으로 행정용어·명칭 사용현황을 샘플 진단한다.

이러한 진단사업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는 한글학회, 국어학계, 방송·언론계 등 민간전문가와 행정자치부, 법제처, 문화관광부 등 정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용어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는 6월에 "행정용어 개선을 위한 종합개선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IV. 한국어진흥재단 설립방안

### 1. 한국어 보급 향상을 위한 한국어진흥재단의 필요성

국내 및 국외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보급'을 위하여, 중복되는 사업들을 통폐합하고 소규모 기관들을 총괄 관리하는 특수 법인재단 설립이 절실하다.

#### 1) 외국어로서 한국어 수요의 폭발적 증가

과거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을 당시에는 여러 기관에서 나름의 보급 전략으로 한국어의 존재를 알리는 방식이 주효하였다. 사실 그러한 기관들의 노력에 힘입어 현재와 같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 동유럽 지역, 구 소련 지역의 개인과 기업의 관심이 한국으로 몰리면서 한국어의 수요가 전례 없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한국어가 '믿을만한 세계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보급 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 (1) 국외 한국어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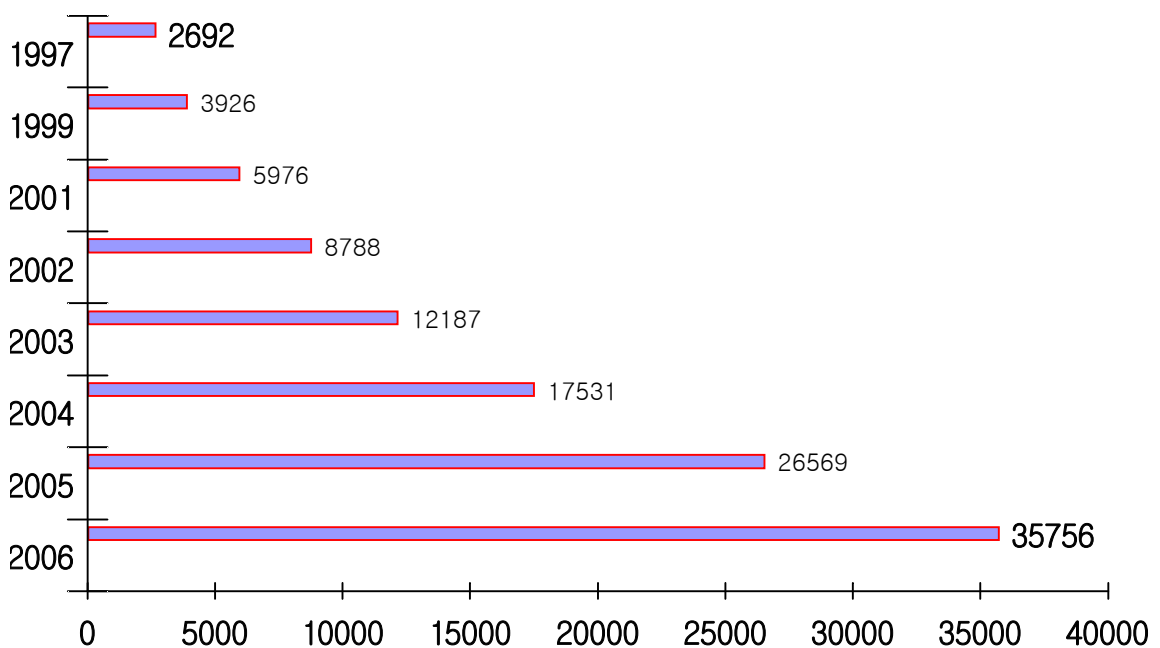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한류 문화의 확산에 힘입어 매년 한국어 능력 시험 현지 응시자수가 130~150%씩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런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여도 무리가 없다. 2006년 한국어 능력 시험 국가별 지원자 분포는 중국 > 일본 > 미국 > 베트남 > 우즈베키스탄 > 몽골 > 태국 > 대만 > 러시아 순으로 집계되었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어 능력 시험 현지 응시자수는 초창기인

1997년에 비하여 2006년에 13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한국어 능력 시험의 수요자 상승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표 1] 한국어능력시험 현지 응시자 수 연도별 현황

☞ 한국어능력시험 현지 응시자 수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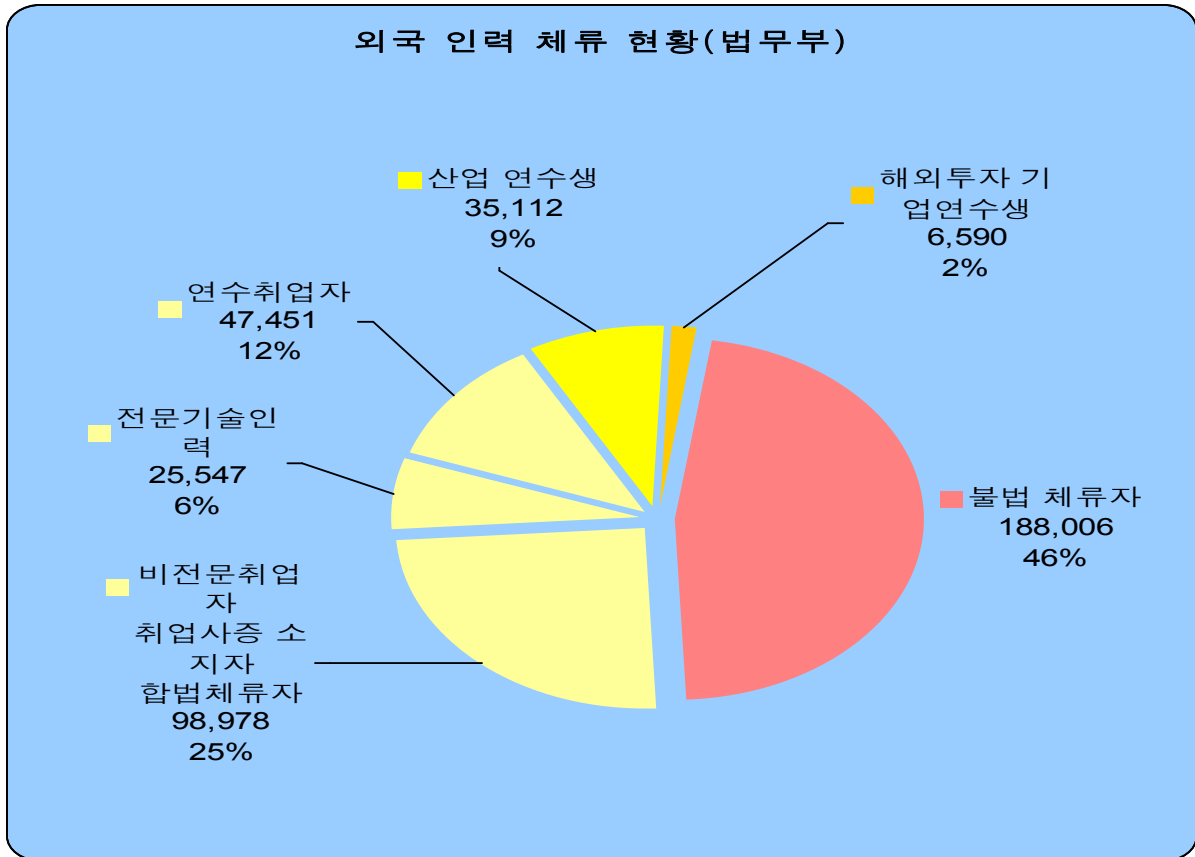
## (2) 국내 외국인 거주자 증가

해외 현지 한국 기업과 한국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국내외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한국 거주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그림 1] 외국 인력 체류 현황 (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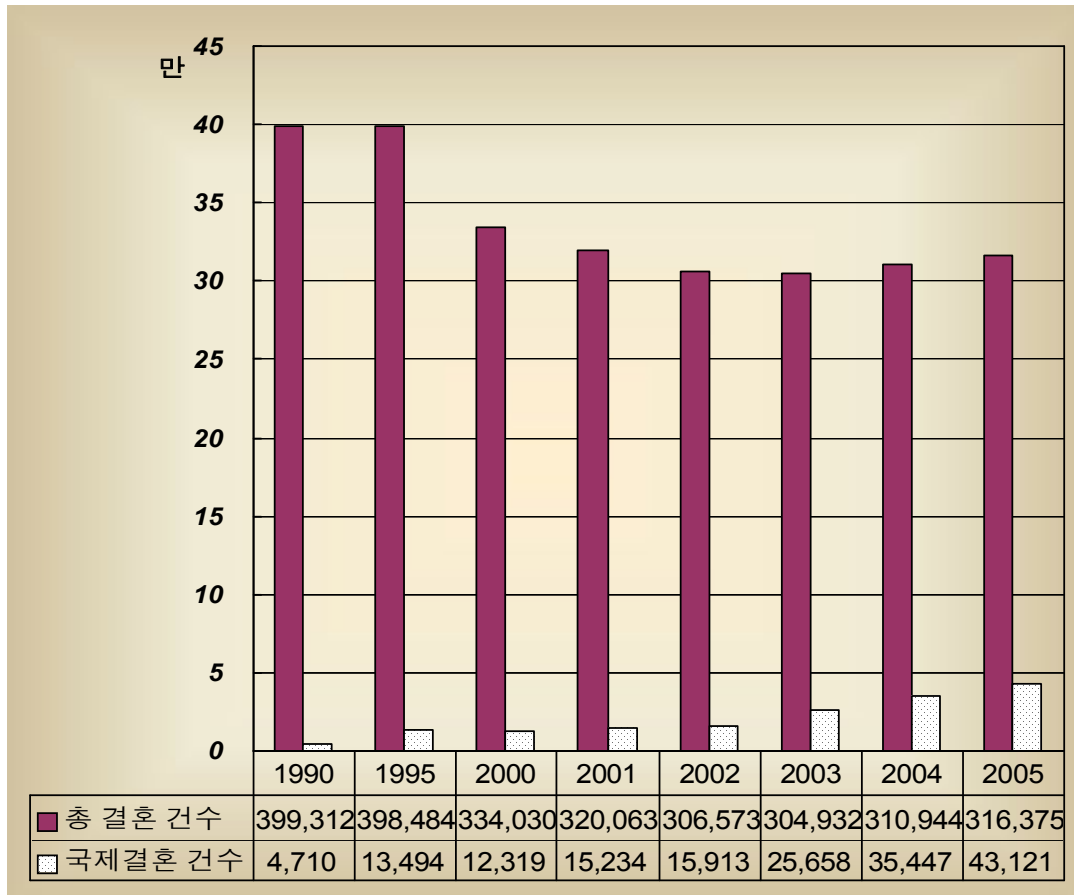
(2006.7.31.기준, 단위: 명, %)



[그림 1]에 나타나 있듯이, 국내 체류 외국 인력은 총 401,684명이다. 이중 불법체류자가 188,000여명으로 전체 인력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불법체류자이기는 하여도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내 외국인 거주자 증가에 일조를 하고 있는 다른 요인으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한국 거주자의 상승을 들 수 있다.

[표 3] 한국인의 국제결혼 증가 추이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인의 국제결혼 비율은 1990년 4,710건에서 2005년 43,121건으로 900% 이상 상승하였고, 총 결혼 건수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1.2%에서 2005년 13.6%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 능력시험 수요의 급증, 국내 거주 외국인 취업자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국내 거주가 전례 없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한국어가 '믿을만한 세계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보급 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한국어 교육의 실태를 조망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건설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 **2) 국내 외국인대상 현행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

국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대학의 부설 기관인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 교육의 실제 수요자가 수업료를 지불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경우이다. 이 수요자는 교육 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외국인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집단이다. 이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은 질적 수준이 높고 운영 방식도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정부 각 기관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이다.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은 바로 후자이다.

### **(1) 기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

기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한국어 교육이 한국어 교육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비전문가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정책 혼선과 기능의 중복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 한국어 교육이 대부분 부수적인 업무로 추진되고 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경우 이벤트성, 일과성 사업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2)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한국어 교육은 이주 여성, 즉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 대책차원의 일환으로 추진됨으로써 한국어 교

육 부분은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있고, 대부분 가정폭력, 결혼상담소 및 인권문제 위주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이주 노동자·여성 한국어 교재의 문제점**

2007년 11월 23일 개최된 한국사회언어학회 토론회의 주제는 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었다. 이 토론회에서 지적된 사항 중의 하나가 한국어 교재의 문제점이다. 여성 가족부가 발행한 초급교재나 농림부에서 발행한 교재가 학습자의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구성이나 내용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그 개선 방향으로 정서적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학습 교재, 교사용 교재의 제작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거론되었다.

### **3) 한국어 보급 및 문화교류 관련 해외 기관의 난립**

국내 및 국외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각종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대동소이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중복 제공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소규모 기관들이 많아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부실하여 서비스의 질이 낮고 지역별로 기관 편중이 심하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현행보다 조직적으로 일관성 있게 보급 관리할 총괄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조직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국가는 하나의 통로를 통하여, 언어 교육, 언어 능력 시험, 각종 문화 행사를 기획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 중에서 미국과 영국은 영어 교육과 영어 능력 시험을 일관성 있는 조직체를 통하여 통괄 운용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어 교육을 소관하고 있는 부처가 3군데이고, 뚜렷한 특색 없이 각 부처의 산하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일원화된 체계적인 보급이 되어야 할 한국어 교육이 교육부의 한국교육원, 문화부의 해외문화원, 국립국어연구소, 그리고 한국어세계화재단, 외교부의 국제교류재단과 한글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또한, 한국어교재개발 관련 사업도 교육부, 문화부, 외교부에서 각각 이루어지고 있다.

[표 4] 한국어 보급 및 문화교류 주요 기관 현황

2007. 7. 10 한국일보 제공

교육부	한국교육원	14개국 35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재외동포와 외국인 대상
	국제교육진흥원		한국어교재개발 한국어교사 파견 외국인학생 장학 지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학술교류 및 해외 한국학 지원
문화부	해외문화원	8개국 11개	한국어 강좌, 문화홍보와 교류 국내외인 대상
	국립국어연구소	세종학당 200여곳 설치계획	한국어 해외보급
	한국어세계화재단		한국어 교재 개발 및 한국어 시험 개발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사 연수
외교부	한글학교	106개국 2,072개	민간단체가 설립운영 외교부 등록/재외동포 재단 지원 재외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국제교류재단	5개국 5개소	학술문화교류 및 한국학 지원 한국어 해외보급 및 교재개발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23개국 27개소	정부 정책 및 문화홍보

한 국가를 대표하는 절대 신뢰성을 담아야 할 한국어 능력 시험마저도 교육부, 노동부, 법무부에서 각각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어 교원 자격시험은 산업 인력 관리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각 기관과 조직의 존속을 위한 작은 명분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안목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효율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더 큰 문화적 경제적 이익 창출을 담당할 하나의 총괄 조직체를 구심점으로 여러 군소 기관의 공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상 세 가지 측면--외국어로서 한국어 수요의 폭발적 증가, 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현행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 한국어 보급 및 문화교류 관련 기관의 난립--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내 및 국외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을 정책적으로 강화하고 사업을 전담할 기구의 설립이 절실하다. 이와 같은 한국어교육은 법적이나 기능적으로 볼 때 국립국어원의 고유한 업무이며 의무라고 사려 된다.

## **2. 한국어진흥재단 설립 방식**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세계어로 진흥할 기능을 수행할 기관을 설립할 방식은 두 가지, 완전히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과 기존의 유사 기관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간략하게 두 가지 방법의 문제점 및 타당성을 살펴본다.

### **1) 두 가지 설립 방안 비교**

#### **(1) 기관 신설 방안의 문제점**

첫째, 앞에서 논의한 기능--국내 및 국외 한국어 보급, 한국어교재 개발, 한국어 능력 시험, 한국어 교사 연수--을 수행할 기관을 신설하는 데는 최소 8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한국어 보급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의 2006년도 예산은 문화관광부 16.4억원, 교육인적자원부 37.4억원, 외교통상부 145.8억원이었다 ([표 7] 15 페이지 참고). 이 중에서 신설 기관이 추진할 사업의 내용은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과 유사하므로 신설 기관의 추정 예산은 두 기관의 예산을 합한 금액 53.8억원과 그 외 신설 관련 부대 비용 17억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둘째, 기존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기관을 신설하는 일은 또 다른 군소 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된다. 결국 비슷한 과업들을 중복해서 추진하게 될 것이므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이런 낭비를 막으려면 유사 기관을 폐쇄하고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셋째, 유사한 기존 기관의 인력이 축적해 온 지식과 방법을 활용하지 못하므로 과업 수행의 성과가 낮다.

## **(2) 유사 기관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의 타당성**

첫째, 현행 기관 중 한국어세계화재단 (이하 '세계화재단')이 한국어진흥재단 (이하 '진흥재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의 일부를 유사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둘째, 세계화재단은 문화관광부에 소속된 기관이고, 국립국어원에서 설립을 기획하는 진흥재단 역시 문화관광부 소속이다.

셋째, 세계화재단은 민법상의 재단으로 한국어진흥재단이 목표로 하는 사업

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기관이다. 반면, 신설될 진흥재단은 장관이 임명하는 특수법인 전문기관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다.

따라서 확장된 기능과 사업을 수행할 진흥재단이 세계화재단을 흡수하여 진흥재단을 중심으로 한국어 보급 관련 제 기관들의 공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마땅하다.

2안으로 한국어진흥재단을 설립할 경우, 1안의 총 예산에 비하여 17억원 정도를 절감하여 (세부 내용은 16페이지 (2) 예산 문제 참고) 재단을 설립할 수 있고 세계화재단의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게 되므로 가장 경제적으로 과업 수행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사한 기존 기관을 폐쇄하는 일은 재원 및 인적 자원의 낭비가 되고, 또 기존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기관을 신설하는 일은 또 다른 군소 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되므로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지금까지 기존 기관이 이루어온 업적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수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한국어진흥재단이 수행하게 될 과업을 구체적으로 가시화하는 일환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원에서 이룩한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세계 다른 나라의 유사한 기관 고찰**

국립국어원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한국어진흥재단은 그 명칭에서부터 외국의 문화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해외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많다. 하지만, 한국어진흥재단이 외국의 문화원에서 벤치마킹을 하여도 무방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한국어를 신뢰할만한 세계어로 진흥하고자 하는 목적이 외국의 문화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다. 둘째,



한국의 해외 문화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 한국어진흥재단이 한국의 해외문화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표 5]에 소개한 국가 중에서도 영국이 가장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영어 보급 및 문화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내외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보급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 개편이 절실히 필요하다.

[표 5] 성공적인 외국의 문화원이 수행하는 기능

국가	총괄 기관	업무
영국	영국 문화원	어학 교육
		영국 (영어자격) 시험
		교류 협력 / 유학 및 장학금 안내/ 유학박람회
		문화 보급 및 교류
미국	한미교육위원단	영어 교육
		영어시험
		교류 (유학 장학금 안내)
	미국 문화원	문화 보급 및 교류/ 도서관 운영
캐나다	캐나다교육원	유학/연수 안내 및 박람회
		어학강좌
		문화이벤트/ 유학관련 안내책자 발행
독일	독일문화원	교육 협력
		어학 강좌 및 시험
		정보센터/도서관
프랑스	프랑스문화원	프랑스어 교육
		유학 안내 및 대학 협력
		예술과 문화 교류/ 미디어 도서관/정보센터
일본	일본공보문화원	교류 및 어학시험 (JET)
		어학 교육
		일본정보/ 문화행사/ 유학안내
중국	중국문화원	정보센터: 중국소개, 중국신문 제공
		어학교육, 유학 및 어학 연수
		HSK 중국어 능력시험
		문화관광: 중국문화탐방, 중국 철학

### 3) 한국어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세부 방안

한국어진흥재단의 설립 목적은 국내 거주 외국인 및 국외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별도의 특수법인을 설립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다.

국어 기본법 개정안 제19조 2항 (한국어진흥재단의 설립)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설립 방안을 마련한다.

(1) 한국어의 세계 보급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및 진흥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

(2) 한국어진흥재단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 ① 국외의 한국어 진흥 및 교육에 관한 사업

교육 대상자의 수준과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가장 합당한 교육 자료와 교수방법을 도입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교육 대상자의 수요에 맞는 한국 문화 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 대상자는 전문 인력, 대학생, 일반인, 근로자, 한국 이주 희망 여성 등으로 분류 가능하다.

#### ②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사업

국외와 마찬가지로 교육 대상자의 수준과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가장 합당한 교육 자료와 교수방법을 도입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국내 거주 외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 국제결혼 가정 및 그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한국어 교육사업 지원

#### ③ 한국어 진흥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

교육 대상자의 수준과 수요에 맞는 교재, 교육자료, 교수법, 그리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한다.

- 한국어 교재 및 교육자료 개발
- 한국어 교사 자격시험 개발
- 한국어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 ④ 한국어 능력 관련 시험에 관한 사업

교육 대상자의 수준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능력 시험을 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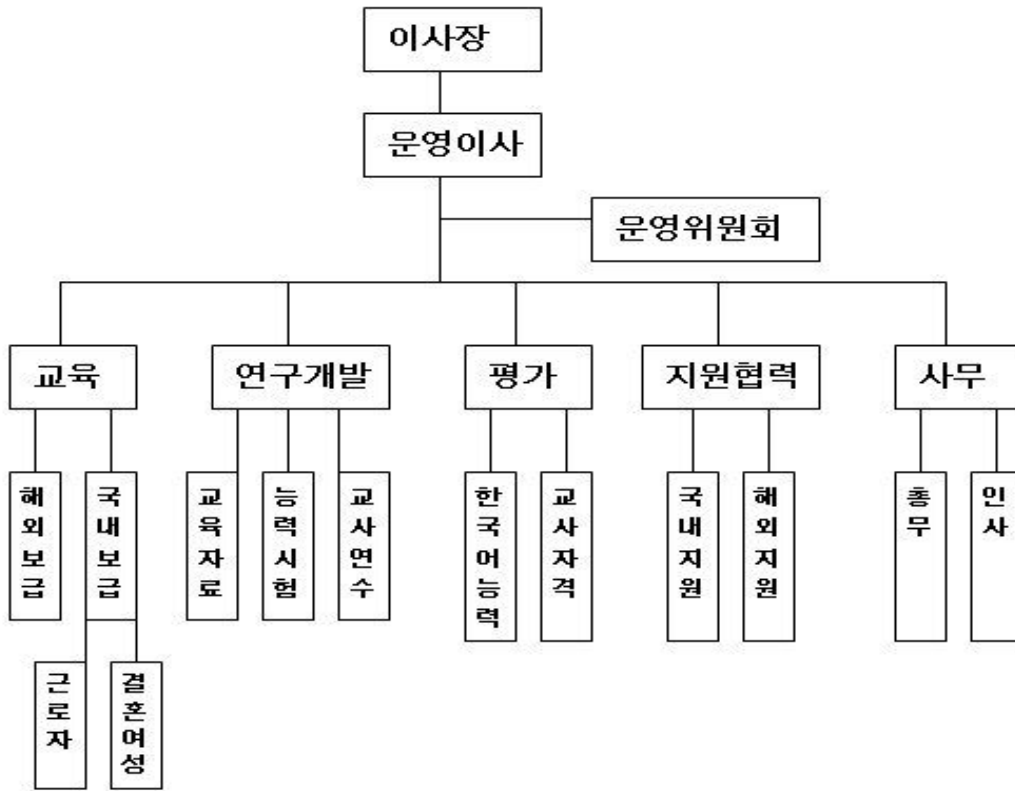
- 일반인 및 대학생 대상 능력 시험
- 근로자 대상 능력 시험
- 결혼 여성 대상 능력 시험
- 아동 대상 능력 시험

위 사업 내용을 토대로 [표 6-1]과 [표 6-2]에 한국어진흥재단의 사업 내용과 조직도를 제시한다.

[표 6-1] 한국어진흥재단의 사업 내용과 조직도

재단 조직		사업 내용
교육	해외보급	국외의 외국인 대상 한국어 진흥 및 교육에 관한 사업
	국내보급	외국인 및 국내이주 외국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사업 국제결혼 가정 및 그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사업
연구개발		한국어 진흥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교육자료 개발 사업 -한국어 교재 및 교육자료 개발 -각 대학에서 개발한 한국어 교재 통합 관리 -한국어 교사 자격시험 개발 -교수법 및 한국어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평가		한국어 능력 관련 시험에 관한 사업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어교사 자격시험
지원협력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한국어 교육사업 지원 - 국내외 한국어 보급 및 교류 관련 기관의 공동 협력

[표 6-2] 한국어진흥재단의 조직도



### (3) 해외 보급 및 지원 방안

해외에서 한국어진흥재단의 역할은 영국문화원처럼 한국문화원을 주축으로 한국어 교육, 한국어 능력 시험, 국제 교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센터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어진흥재단의 한국어 관련 센터 지원 방식은 아래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다.

#### ① 한국 해외문화원이 있는 국가

한국어진흥재단은 문화원과 공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업무를 총괄할 수 있게 지원한다.

#### ② 한국 해외문화원은 없으나 한국어교육 센터가 있는 국가

기존하고 있는 한국어 관련 센터를 한국어진흥재단이 지원하여 그 센터가

위에서 언급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 ③ 한국어 관련 센터가 개설되지 않은 국가

국립국어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종학당의 기능을 계획보다 좀더 확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4) 한국어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전략

### (1) 중앙부처와의 조직 문제

각 부처가 주관하고 있는 한국어 관련 사업 중에서 고유한 특성 사업을 유지한 채, 기관별로 중복되는 사업에서는 공동 협력하여 불필요한 기구를 축소 또는 통폐합한다. 이런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여야만 불필요하게 집행되고 있는 예산을 감축하여 효율적인 예산 지원을 도출할 수 있다.

[표 7] 부처별 국외 한국어 교육 대상과 특성 비교

관계 법률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의 보급 등)	재외 국민의 교육지원에 관 한 법률	재외동포재단법
교육 대상	•현지 외국인 (일반 대중) •국제결혼 이주 여성 및 외국 국적의 이주 근로자	•한국 국적의 재외 국민 •한국 국적이 없는 동포 •외국의 한국학 연구자	•한국 국적의 외국 장기체류자 및 영주권자 •국적 불문 한민족 혈통을 지닌 자
교육 내용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생활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이해	•국민으로서의 소양 함양을 위한 한국어 교육 •한국학 연구자 지원	•재외 동포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 보급 •해외 한국학 진흥 지원
교육 성격	‘문화상호주의 원칙’에 입각 한 한국어 교육과 쌍방향의 문화교류 확대 및 문화적 연 대 도모	재외 국민 대상의 정규 국 어 교육과정에 의한 한국어 교육 실시	재외 동포 한국어 교육 및 문화사업 지원
교원 자격	•한국어교사 자격증 ※ 한국어(교육)학과	•국어교사 자격증 ※ 국어(국문)학과	해당 없음
‘06년 예산	16.4억 원	37.4억원	145.8억원

## **(2) 예산 문제**

한국어세계화재단을 흡수할 경우 특수법인 한국어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총 예산 (최소 추정 80억원) 중에서 기본적인 재원으로 최소 17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축적된 인적 자원 및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단기간에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예산 규모의 단계적 확대가 용이하다.

- ① 민간재단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의 조직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건설적인 구조 개편을 단행한다. (2007. 6 현재 기본재산 1억원)
- ② 한국어세계화재단에 대한 문화관광부 지원액을 한국어진흥재단 개편에 활용한다. (2006년 기준 약 16억원)
- ③ 한국어교육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규모 확대가 가능하다.

## **(3) 대내적 문제**

- ① 기존의 각 기관들에서 행하고 있는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을 관리한다.
- ② 정부 기관 및 대학 부설 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사 양성 교육, 한국어 교재개발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일관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관리한다.

## **(4) 대외적 문제**

- ① 각 기관의 고유한 해외 특성 사업을 유지한 채 공동 협력을 모색한다.
- ② 기존의 각 기관들이 이루어 놓은 해외 지역별 사무소 및 성과를 파악하여 해외센터 관장 기관을 적정 분담한다.

[표 8] 재단과 유사 기관의 사업 차이점

한국어진흥재단 (가칭)	국어기본법 (안)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과 진흥	<b>국내외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b> 국제결혼가정과 자녀 대상 한국어교육 한국어 능력 시험 한국어교재 개발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국제 교류 및 구제 우호증진	<b>국제교류행사 지원</b> 국외 한국연구 지원 국제교류기관과 교류 및 우호증진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법	재외동포의 민족적 유대감 유지	<b>재외동포 교류사업</b> 재외동포사회 대상 조사 및 연구 재외동포 대상 교육문화홍보사업
국제교육진흥원	교육인적자원부 직제	재외동포 교육 국제 교육 교류	<b>재외국민의 교육</b> <b>국제 교육 교류</b> 교원 및 대학생의 연수 외국인유학생 유치

### 3. 한국어진흥재단 설립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 1) 한국어교육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하는 전문적인 조직체로서 외국어로서 한국어 보급사업을 내실화한다.
- 2) 한국어교재 개발을 현행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한다.
  -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각국 언어권별, 교육 대상별 양질의 한국어교재 및 교수기법을 개발하는 일이 가능하다.
- 3) 장기적인 사업추진체계를 통한 양질의 사업성과 도출이 가능하다.
  -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전문성 있는 조직을 통하여 장기간에 걸

쳐 경험과 노하우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 이와 같은 환류 체계를 통하여 우수한 교재개발 및 양질의 교육인력 양성이 가능하다.

#### 4. 한국어진흥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

모든 외국어의 습득은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성취될 수 있는 단순한 학습이 아니다. 외국어의 효과적인 성취에는 상이한 문화 이해, 학습자의 배경과 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교재 및 교수법 등 복합적인 요소가 상호작용 한다. 외국어로서 한국어의 습득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인을 위한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합당한 교재개발, 교수기법, 능력 있는 교사의 양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여러 기관에서 주관해온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시스템은 다양한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중에서 한국어교육 보급이 절실하게 필요한 대상은 근로자와 결혼 이주자이다.

이들을 위한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법무부에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2008년부터 사회통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사회통합교육의 내용은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교육 등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추진하면서 여성단체 및 인권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여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런 방법만으로는 부처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기대를 충족할 수 없다고 본다. 결혼 이주민과 그 자녀의 한국어교육 문제는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최소한, 결혼 이주 여성의 문화 및 교육 수준, 더 나아가 그들이 속한 한국의 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교재 개발이 절실하고, 학습 효과를 고취할 수 있는 교수법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 교사가 그들의 교육에 투입되어야 한다. 단지 몇 천 만원 예산을



투자하면 한국어 교재가 단시일에 개발되고, 일정 시간의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면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동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산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전문가 집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당수의 대학에는 한국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언어교육원이나 국어 상담소와 같은 전문가 집단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 각층에는 한국어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 및 외국어 교육 경험을 갖춘 자원봉사자들이 많다. 또한 민간기업 영역에서도 한국어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출판사와 보습학원들이 많이 있고, 지방의 문화원에서는 이미 다양한 문화강좌를 실시해온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사회 각층의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 몇 명당 1개 시설 지정, 일정 시간 채우기 식의 강좌 개설, 또는 주관 부서와 관련이 있는 여성 인권단체나 시민단체의 활용이라는 입장만을 고수한 채 결혼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교육 방안을 모색한다면 궁극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통합교육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일환으로 행해지는 한국어교육은 공급자의 시각과 이해에서 과감히 벗어나 수요자인 외국인에게 맞춰져야만 한다. 결혼 이주민 중에는 거주 지역이 교통이 불편한 벽지에 있거나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몇 개월 또는 반년씩 날마다 일정한 강의실에 앉아서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또 결혼 이주 여성 수강생은 모국어가 상이할 것이고 개인별 수준도 천차만별일 것이다. 이런 수요자들의 상이한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한국어 수업이 과연 어느 정도로 수준 있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도 일종의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서비스는 고객에 대한 배려와 만족

을 중요시하는 업종이다. 그런데 고객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수업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고객만족을 우선으로 하는 추세를 거스른 일이 될 것이다. 적어도 법무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통합교육이 바람직한 행정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한 이주민 가정 방문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강자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 경우라면 고객만족의 행정을 구현하고 국가예산 투입에 대한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

한국내 외국인 이주노동자•여성은 그 규모나 사회적 기능면에서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과 민간 전문가의 협력을 주도하는 특수재단 법인의 설립이 시급하다.

## V. 정책적 제언

### 1. 법률의 정비

1

#### 국어책임관 지정 의무화 및 대상기관 범위 명확화 (안 제10조)

◇ 국어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에서 ‘지정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지정 대상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 및 의미의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p><b>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b></p> <p>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u>지정할 수 있다.</u></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책임관의 <u>지정 및 임무</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b></p> <p>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u>지정하여야 한다.</u></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책임관의 <u>지정범위 및 임무</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국어책임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사실을 즉시 <u>상급기관과 국립국어원</u>에 <u>보고하여야 한다.</u></p>

#### □ 개정 배경과 검토 내용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 지정을 임의조항으로

로 할 경우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 어려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 지정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

○ 국어책임관의 지정범위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되어있으나 ‘국가기관’의 범위가 모호하고 확대 해석될 경우 그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져 오히려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 ⇒ 지정대상 기관을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있도록 국어책임관 지정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대내적 공표의 문제점 (보고체계): 누가 책임관인지 상부기관이나 국어원에 보고도 되지 않는 현실 교정.

## 2. 제도의 정비

### 1) 국어학예사

#### 2

#### 국어학예사 배치 규정 신설 (안 제10조의2)

◇ 국어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국어책임관을 지정한 기관은 국어학예사를 배치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10조2(국어학예사) ①<u>국어책임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어책임관을 지정한 기관은 국어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국어학예사를 임명하여야 한다.</u></p> <p>②<u>국어학예사의 자격 및 배치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 개정 배경과 검토 내용

○ 국어책임관의 지정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국어관련 전문성이 없는 홍보담당 부서장 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추가됨으로써 국어책임관의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현실 -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여 국어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국어책임관 지정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국어학예사의 자격 및 배치인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 우선 최소인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확대 필요. ▷ **활용예시)** 노동부 외국인노동자 한국어능력시험, 여성부 결혼이민자 및 가족 한국어교육, 법제처 법제업무, 정통부 인터넷 사용언어 순화, 행자부 지자체의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등

#### □ 유사 사례 : 기록연구사

○ 비교적 성공한 사례로 봄. ○ 업 무-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 -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등○ 국가기록원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국어학예사 제도의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성 ○ 기록연구사의 자격과 배치를 살펴 볼 때 국어원의 교육기능 검토. ○ 기록연구사가 부처의 일꾼(?)으로 동원되는 현실을 거울 삼아 전문성 확보방안 연구.

## 2. 제도의 도입

국어학예사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직위[(position): 한 사람의 근무를 요하는 직무와 책임]의 입증. ② 직급[(class): 직위가 내포하는 직무의 성질 및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인사행정의 편의상 채용,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의 적절성 조정. ③ 직렬[(series):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계열] 이나 직류[(sub-series):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좀더 유사한 직무의 군]신설의 검토. ④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직위가 요구하는 직책 내용을 명시한 것] ⑤ 직급명세서[(class specification):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에 따라 결정된 직급의 직책 내용, 자격 요건 및 시험 내용을 명시해 놓은 것으로 이는 채용·승진·보수 등 인사행정의 기준으로 사용된다]의 명확화.

## 3. 의사소통지수의 개발과 도입(대화 매뉴얼 개발)

국어 관련 민간 조직의 활성화

국어상담소의 활용

자격증 제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업무평가: 정책분석

한글의 문화재 등록

## 4. 행정적 조처

정부부처 업무재조정

국어원에 통합 관리 직책 신설

## 참 고 문 헌

### 국문판

- 강내희. (1998) 「신자유주의와 문화」 강성구 등 (편저)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서울: 문화과학사.
- 강성구 등 (편저) (1998)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서울: 문화과학사.
- 강신항. (1995) 「漢子使用이 끼친 功績과 害惡」 김민수 외, 『國語와 民族文化』 서울: 집문당.
- 고영근. (1993) 『우리말의 총체서술과 문법체계』 서울: 일지사.
- 고영근. (2001) 『역대한국문법의 통합적 연구』 서울: 서울대 출판부.
- 고정민 외. (2005) 『한류 지속화를 위한 방안』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국립국어연구원. (2000) 『국립국어연구원 10년사』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국어학회. (1993) 『세계의 언어정책』 서울: 태학사.
- 권재일 외. (2005) 『말이 올라야 나라가 오른다 2』 서울: 한겨레신문사.
- 김민수. (1973) 『國語政策論』 서울: 고려대 출판부.
- 김세균. (1998) 「신자유주의와 정치구조의 변화」 강성구 등 (편저)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서울: 문화과학사.
- 김수엽. (2004) 「나라와 나라말 정책」 우리말 살리는 거래모임, 『우리말 우리얼』 제42호.
- 김슬옹. (1999)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는 저놈을 매우 처라』 서울: 다른우리.
- 김윤자. (1998) 「신자유주의와 세계의 정치사회운동」 강성구 등 (편저)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서울: 문화과학사. pp. 146-162.
- 김태성과 성경룡. (1999) 『복지국가론』 서울: 나남.
- 김형렬. (1997) 『政策決定論』 서울: 대영문화사.
- 남광우. (1995) 「國漢混用論」 김민수 외 『國語와 民族文化』 서울: 집문당.
- 문화관광부. (2004) 『창의한국』 서울: 문화관광부.
- 민현식. (2005) 「국어정책 60년의 평가」 국어정책학회 9월 발표문.
- 민현식. (1999) 「표준어와 언어정책론 (1)」 『先淸語文』 27, 서울: 서울대 사대 국어교육과.
- 박광주. (1999) 『한국권위주의 국가론』 서울: 인간사랑.
- 박동서. (1984) 『韓國行政論』 서울: 법문사.
- 복거일. (2000)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서순복. (2006) 「지역문화정책 평가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7권 제4호. 지방정부학회.
- 서정수. (1996) 『현대국어문법론』 서울: 한양대 출판원.
- 송기중. (1993) 「언어정책」 국어학회, 『세계의 언어정책』 서울: 태학사.
- 송기형. (2004) 『프랑스어사용법연구』 서울: 숲.
- 송기형. (2005) 「국어기본법과 프랑스어사용법의 비교 연구」 『한글』 269, 서울: 한글학회.
- 심희기. (2006) 「세계화, 지역화의 물결과 법령의 한글표기」 우학모 모임 발표 논문.
- 안승덕. (1993) 『漢字敎育』 서울: 배영사.
- 안해균. (1984) 『政策學原論』 서울: 박영사.



- 유훈. (1986) 『政策學原論』 서울: 법문사.
- 이광석. (1984) 『우리나라 어문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이광석. (2006) 「정책학의 관점에서 본 국어정책의 의미와 방향」 『한글』 271. 서울: 한글학회.
- 이규호. (1975) 「문화의 집은 어떻게 짓는가?」 『문학사상』 75년 11월호, 서울: 문학사상사.
- 이규호. (1986) 『사람됨의 뜻: 철학적 인간학』 서울: 제일출판사.
- 이규호. (1989) 『말의 힘: 언어철학』 서울: 제일출판사.
- 이병천과 김균 (편) (1998) 『위기 그리고 대전환』 서울: 당대.
- 이봉원. (2005) 「광화문의 한글현판은 한글자주국가의 상징이다」 광화문 한글현판 지키기 토론회 원고.
- 이승녕. (1995) 「民族 및 文化와 文化社會」 김민수 외, 『國語와 民族文化』 서울: 집문당.
- 이우진. (1999)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다시 바라본 한국발전국가 논쟁의 몇가지 쟁점들」 한국사회경제학회, 『신자유주의와 국가의 제도전』
- 이정민. (1989) 『言語理論과 現代科學思想』 서울: 서울대 출판부.
- 이희승. (1970) 『병어리냉가슴』 서울: 일조각.
- 이희승. (1969) 「국어를 지킨 죄로」 『한국현대사』 제5권, 서울: 신구문화사.
- 전미영 (2007) 『김일성의 말, 그 대중설득의 전략』 서울: 책세상.
- 전인권. (2001) 『박정희의 정치사상과 행동에 관한 전기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정용덕. (2001) 『현대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정길. (1994) 『政策決定論』 서울: 대명문화사.
- 정정길 외. (2004)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문화사.
- 조수진 (2001) 「미국의 언어정책」 국어정책 수업 리포트.
- 주한광. (1999) 『現代經濟學演習』 서울: 율곡출판사.
- 채경석. (2000) 『정책집행의 논리와 현실』 서울: 대영문화사.
- 최현배. (1958) 『한글의 투쟁』 서울: 정음사.
- 최현배. (1978)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 최현배. (1995) 「한글과 문화혁명」 김민수 외, 『國語와 民族文化』 서울: 집문당.
- 하상균. (2005) 『행정학원론』 서울: 대영문화사.
- 한국일보 (2007) 「한국홍보·문화교류만 15개 이상 기관 난립」 07월 10일 A08면
- 한국일보 (2007) 「이주노동자·여성 한국어 교육에 허점」 11월 21일 A30면
-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이론분과 (편) (1993) 『국가와 시민사회』 서울: 녹두.
- 한글학회 (1971) 『한글학회 50년사』 서울: 한글학회.
- 한글학회 (1993)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은 흘러』 서울: 한글학회.
- 허만길 (1994) 『한국현대국어정책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 허웅. (1995) 『국어음운학』 서울: 샘문화사.
- 허웅. (1986) 『언어학』 서울: 샘문화사.
- 허웅. (1974) 『우리말과 글의 내일을 위하여』 서울: 과학사.
- 허웅. (1979) 『우리말과 글에 쏟아진 사랑: 국어정책론』 부산: 문성출판사.

## 영문판

- Alcock, P. et al. (2005) *The Student's Companion to Social Policy*, Oxford: Blackwell.
- Anderson, J.E. (1984) *Public Policy-Making*,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Baldock, J. et al. (eds) (2003) *Social Poli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orre, O. & Goldsmith, M. (1995) *The Scope of Govern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arr, E. H. (1982) *What Is History?* London: Macmillan Press.
- Cobb, R.W. and Elder, C.D. (1971) "The Politics of Agenda-Building: An alternative Perspective for Modern Democratic Theory," in *The Journal of Politics*, vol.33 (4), pp. 892-915.
- Cobb, R.W. and Elder, C.D.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The Dynamics of Agenda-Building*, Boston: Allyn and Bacon, Inc.
- Cobb, R., Ross, J.K. and Ross, M.H. (1976) "Agenda Building as a Comparative Political Process," i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0 (1), pp. 126-138.
- Easton, D. (1965)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New York: John Wiley & Sons.
- Flora, P. (et al) (eds.) (1999) *State Formation, Nation Building, and Mass Politics in Europe: The Theory of Stein Rokka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raser, D. (1973) *The Evolution of the British Welfare State*, London: Macmillan.
- Friedman, M. (1962) *Capitalism and Freedom*,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royen, R. (1986) *Macroeconomics: Theories and policie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 George, V. & Wilding, P. (1994) *Welfare and Ideology*, London: Harvester Wheatsheaf.
- Gilbert, B. (1973) *The Evolution of National Insurance in Great Britain*, London: Michael Joseph.
- Giddens, A. (1993) *Sociology*, Cambridge: Polity Press.
- Ham, C. and Hill, M. (1993) *The Policy Process in the Modern Capitalist State*, London: Harvester Wheatsheaf.
- Henry, N. (1980)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Affairs*,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 Hill, M. & Bramley, G. (1986) *Analysing Social Policy*, Oxford: Basil Blackwell.
- Jessop, B. (1982) *The Capitalist State: Marxist Theories and Methods*, Oxford: Martin Robertson.
- Jessop, B. (1990) *State Theory: Putting Capitalist States in their Place*, Pennsylvani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Jones, C.O. (1977)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ublic Policy*, North Scituate: Duxbury Press.
- Katz, D. and Kahn, R. (1970) "Open Systems Theory," in O. Grusky and G. Miller, *The Sociology of Organization: Basic Studies*, New York: Free Press. pp.149-160
- Lasswell, H.D. (1956) *The Decision Process: Seven Categories of Functional Analysis*, College Park: University of Maryland.
- Lee, K. S. (2004) *The Development of Korean National Pension Policy*, Newcastle Univ. Ph.D. Thesis.
- Lowe, R. (1993) *The Welfare State in Britain since 1945*, London: Macmillan.

- Marshall, G. (1998) *Oxford Dictionary of Soci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rtinussen, J. (1997) *Society, State and Market: A Guide to Competing Theories of Development*, London: Zed Books, Ltd.
- Mishra, R. (1999) *Global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Cheltenham: Edward Elgar.
- Mishra (1990) *The Welfare State in Capitalist Society: Policies of Retrenchment and Maintenance in Europe, North America, and Australia*, New York: Harvester Wheatsheaf.
- Nordlinger, E.A. (1981) *On the Autonomy of the Democratic Stat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Pointon, G. E. (1983) *BBC Pronouncing Dictionary of British Nam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ein, M. (1989) The Social Structure of Institutions: Neither Public nor Private, Kamerman, S.B. & Kahn, A.J. (eds) *Privat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ipley, R.B. and Franklin, G.A. (1986) *Bureaucracy and Policy Implementation*, Homewood, Illinois: Dorsey.
- Rose, R. (1989) Welfare: Public/Private Mix, Kamerman, S.B. & Kahn, A.J. (eds) *Privat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picker, P. (1995) *Social Policy: Themes and Approaches*, Hemel Hempstead: Prentice Hall.
- Starr, P. (1989) The Meaning of Privatization, Kamerman, S.B. & Kahn, A.J. (eds) *Privat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tiglitz, J.E. (2000) *Economics of the Public Sector*,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Tilly, C. (1985) "War Making and State Making as Organized Crime," in P.B. Evans and T. Skocpol (eds.),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illy, C. (1992)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2*, Cambridge, Massachusetts: Blackwell.
- Tilly, C. (1994) *Cities and the Rise of States in Europe, AD1000 to 1800*, Boulder: Westview Press.
- Weber, M. (1978)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heelock, J. (et al) (eds.) (1999) *Insure Times*, London: Routledge.